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2001. 11

성 명 재

序　言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는 격동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극과 극을 경험하는 일대 변혁기를 맞았었다. 1990년대 이후 5~9%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던 것이 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6.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2%대에 머물던 실업률도 6.8%로 급등하면서 극심한 경기후퇴를 경험하기에 이르렀다.

흔히 IMF 경제위기로 불리는 1998년은 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경기후퇴의 파장이 매우 컸다. 기업의 파산과 구조조정 등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특히 중산·서민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소득분배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사회·경제의 동태적 발전을 위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하지만 단기간내의 급격한 변동은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못하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회생력을 제고하고자 구조조정의 고삐를 조이고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매진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태되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기초생활 보장 및 재취업 알선을 위한 각종 사회보장정책이 확충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분배문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으며 분배 격차 축소 또는 분배 격차 확대 억제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분배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들은 경제위기 기간 및 그 이후에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전개되었던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집행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분배구조 및 정책대안 강구를 위한 연구의 대부분이 경제위기를 전후한 비교적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경제발전 단계상 특정한 단계나 시점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경기악화 등의 요인에 의한 분배구조 변화요인을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즉, 경제위기라는 극단적인 경기변동과 급격한 산업 및 임금구조 개편 등에 의해 초래된 소득불평등과, 경제발전 단계상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준의 소득불평등을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현상에 적합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경제위기 당시에는 사안의 시급성으로 인해 기초연구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었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경제위기 극복 후 3년째 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분배구조 변화의 핵심과 변화의 동인을 파악하기 위해 소득분배에 대한 장기추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대상 기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를 분석하고 결정요인을 포착하고자 착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본원의 성명재 박사의 집필로 완성되었다. 저자는 본 연구의 시작단계에서 완료단계에 이르기까지 도움과 코멘트를 아끼지 않은 통계청 사회통계과의 김은영 사무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이상율 서기관, 세미나 과정에서 도움을 많이 준 본원의 전영준·김진영 박사와 기타 세미나 참석자, 그리고 익명의 두 보고서 심사자께 저자는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자료 수집·분석 및 원고정리 등에서 혼신을 다해 도와준 본원의 이은경 주임연구원과 윤혜순 연구조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저자 개인의 연구결과를 서술하고 개인적 견해를 피력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관계가 없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1년 12월

韓國租稅硏究院

院長 宋 大 熙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인해 전례 없는 실업 및 고용문제를 겪었으며 머지않아 추진될 제2차 금융·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고용문제가 다시 제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지만 과거에 비해 비정규직 고용이 훨씬 증가하여 고용형태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실업자를 흡수하기가 보다 어려워졌다는 점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향후 주력산업이 지식기반 및 정보통신산업 위주라면 과거처럼 고용 창출 여력이 높지 못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은 대부분 공공근로사업, 산업정책 및 노사관계의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실업문제를 한시적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 고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려면 고용관련 분야에 있어서 가급적 시장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기존의 왜곡을 완화하거나 만약 이러한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면 차선의 대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 바로 조세 및 재정정책이라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고용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접근방법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용안정 및 확대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및 실증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이런 관점의 관련문헌은 없었고 외국의 연구 또한 많지 않은 관계로 (ⅰ)기존 조세이론을 고용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시도와 함께 (ⅱ)노동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한 노동경제학적 모형에다 조세를 접목시켜 그 의미를 강구하는 것으로 연구의 접근방향을 정하여 실업 및 고용 문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을 위해서 수요측면에서의 정책과 근로의욕 제고를 통한 고용여건의 개선이라는 공급측면에서의 정책, 그리고 재정정책 중에서 미시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효과분석을 병행하여 조세·재정 정책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고용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다.

재정지출에 의존하여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논의와 뚜렷이 차별화되는 점은 (ⅰ)재정수입을 기본으로 하는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에 의한 고용 확대정책을 논의하였다는 점과 (ⅱ)재정정책 중 미시적인 접근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실업문제를 회피하려는 동기에서 임시적인 조치로서 고용확대책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측면을 감안한 체계적인 고용 여건을 개선한다는 목적하에서 기업의 고용비용 감축 및 근로자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재정정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3.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세제도 및 행정관련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취업구조 및 조세행정상 특성을 고려한다면, 소득세제와 소비세제의 상대적 구성을 다소간 소비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소비세제의 역진적 성격을 불식시키고자 지출내용에 따라 세율구조를 보다 차별화하는 것이 고용확대에 유리할 수 있다. 예컨대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몇 가지 단계를 두거나, 또는 특별소비세를 좀더 누진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불완전한 노동시장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보다 부합하므로 적어도 구조조정기에는 퇴직금 누진제의 폐지와 같은 비경쟁적 노동시장의 특성을 활용한 고용대책이 적합할 수 있다.

셋째, 한시적으로 매우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채용장려를 위한 조세감면의 확대를 고려할 수도 있다. 각종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예외조치를 다소간 연장하거나 임시투자세액공제처럼 임시고용세액공제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다.

넷째, 세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보다 누진적 한계세율 구조를 갖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주로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근로의욕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환경 및 음성탈루소득과 같은 대체세원의 발굴을 통한 소득세의 인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위에서 제기한 첫 번째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여섯째, 노동조합의 목표가 고용의 완전한 보장과 임금의 인상에 있다면 이 경우 조세정책에 의한 고용창출은 쉽지 않을 것

이다. 따라서 노조의 강성화에 따른 고용 감소 문제는 노동법의 엄정한 집행 및 이직비용에 대한 정부보조로써 대처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부분의 유럽국가처럼 임금 협상력이 강하지만 고용에 대해서는 기업이 고유권한을 지니고 있을 경우, 공제한도를 지나치게 크게 하거나 혹은 인두세적 성격을 강조하기보다는 소득비례적/누진적 조세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임금의 지나친 상승을 막고 이에 따라 기업의 고용 창출능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일곱째, 소득공제율제도를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도입하여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고용 창출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일 것이다.

여덟째, 동시에 소득공제제도를 세부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현재 연봉제의 실시 및 각종 부가급여의 과세 전환 등으로 세부담 회피를 위한 과거의 변칙적인 임금책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향후 획득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 등과 같이 소득파악이 보다 용이한 공적부조제도의 확립을 통해 가능한 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 확대를 위해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 대안으로서 다른 무엇보다 비경쟁적 요인 제거를 위한 조세지원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재정정책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실업보험의 경우 고용 측면에서 그다지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는바, 적어도 구조조정기간에 있어

서는 다소간의 확대조치가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둘째, 반면 국민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가 '비생산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 고용여건 개선에 부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향후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다 엄밀한 소득파악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고용 촉진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지하경제의 활성화는 곧 임금의 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향후 負의 소득세 등의 도입을 심각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교육, 재교육, 직업훈련에 대한 세액공제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정책방향이라 판단된다.

이 밖에 산업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위한 조세감면, 법인세율의 인하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의 감면, 외환위기시에 도입된 각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한의 연장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고용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선의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장기실업문제를 보다 악화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목 차

Ⅰ. 서 론 ····· 23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23
2. 국내의 소득분배 관련 연구 ····· 28
3. 주요국에서의 소득분배 관련 연구 ····· 29
4. 소득의 정의: OECD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30
5. 불평등지수의 종류 ····· 32
가. 균등화탄력성(equivalence scale elasticity) ····· 32
나. 지니계수 ····· 33
다. SCV, MLD, Atkinson 지수 ····· 35
라. 조세집중도와 기타 불평등지수 ····· 36
6. 분석방법 ····· 37
가. 분석자료 ····· 37
나. 소득계층의 구분 ····· 42
다. 분석의 범위 ····· 43
라. 유의사항 ····· 43

Ⅱ. 소득·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 45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 45
가. 소득 변화 추이 ····· 45
나. 소비지출 변화 추이 ····· 50
2. 소득·소비지출 분포의 변화 추이 ····· 52
가. 소득분배 분포구조의 변화 추이 ····· 52
나. 소비지출 분포의 변화 추이 ····· 58

Ⅲ.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와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 67
1.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 67
가.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 67
나. 변동요인 ····· 68
2.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일고 ····· 73
가. 조세집중도 ····· 73
나. 소득세 비중의 국제비교 ····· 75
3. 소득분배 격차의 요인 분석 ····· 76
가. 소득분배 격차의 일반적 특징 ····· 76
나. 우리나라 소득분배 격차의 특징 ····· 82
4. 소득재분배 효과의 제고방안에 대한 일고 ····· 88

Ⅳ. 소득분배 격차 발생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및 전망 ····· 92
1. 소득분배 격차 원인의 분석범위 ····· 92
2. 소득계층간 소득격차의 변화 ····· 95
가. 점추정의 필요성 ····· 95
나. 소득계층간 소득격차의 변화 추이 ····· 96
다. 향후 전망 ····· 106
라. Kuznets 가설에 대한 일고 ····· 110
3.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가구 유형별 변화 추이 ····· 111
4. 무직가구 비율 변동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 115
5.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의 변동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 123
가. 여성가구주 가구의 변화 추이 ····· 123
나. 모의실험 결과 ····· 127
6. 노령화 진전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 133
가. 노인가구의 변화 추이 ····· 133
나. 모의실험 결과 ····· 136
7. 종합 ····· 150

Ⅴ. 맺음말 ····· 154
1. 소득분배를 보는 시각에 대한 일고 ····· 154
2.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 156
가. 변화 추이 ····· 156
나. 소득분배 구조 변화의 원인 ····· 158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161
4. 향후 보완과제 ····· 165
가. 분석자료 선정시의 고려 사항 ····· 165
나.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시의 고려 사항과 향후 보완과제 ··· 166

참고문헌 ····· 170

부록 Ⅰ : 경제여건의 변화 추이 ····· 177

부록 Ⅱ : 1995~2000년의 소득분배 동향 ····· 182
1. 요약 ····· 182
2. 최근의 분배구조 변화 ····· 183
3. 최근의 분배격차 확대의 원인분석 ····· 184
4. 선진국(미국·영국·일본 등) 사례 및 시사점 ····· 186
5. 전망 ····· 187

부록 Ⅲ : 주요 선진국의 지니계수 ····· 188

부록 Ⅳ : 가구유형별 지니계수 추정결과 ····· 193

부록 Ⅴ : SCV 추정결과 ····· 195

부록 Ⅵ : MLD 추정결과 ····· 196

부록 Ⅶ : Atkinson 지수 추정결과 ····· 197

부록 Ⅷ : 기타 자료 ····· 198

표 목 차

<표 Ⅱ- 1> 도시가계의 소득·소비 변화 추이 ····· 47
<표 Ⅱ- 2>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한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 ····· 49
<표 Ⅱ- 3>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한 실질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 51
<표 Ⅱ- 4>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 ····· 54
<표 Ⅱ- 5> 소득계층별 실질소득 분포 ····· 57
<표 Ⅱ- 6>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분포 ····· 62
<표 Ⅱ- 7> 소득계층별 실질소비지출 분포 ····· 65

<표 Ⅲ- 1> 지니계수(총소득 기준) ····· 69
<표 Ⅲ- 2> 실업급여 지급현황 ····· 71
<표 Ⅲ- 3> 실업률,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비 비중의 국제 비교 ····· 76
<표 Ⅲ- 4> 소득계층별 점유비: 시장소득(Market Income) ····· 79
<표 Ⅲ- 5> 소득계층별 점유비: 직접세(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 81
<표 Ⅲ- 6> 소득계층별 점유비: 가처분소득 ····· 82
<표 Ⅲ- 7> 노인인구비, 이혼율, 혼인상태의 국제비교 ····· 84
<표 Ⅲ- 8> 이혼율의 국제비교 ····· 85
<표 Ⅲ- 9>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국제비교 ····· 86
<표 Ⅲ-10> 출생률의 국제비교 ····· 87
<표 Ⅲ-11> 사망률의 국제비교 ····· 88

<표 Ⅳ- 1> 주요 백분위수(percentile)의 소득수준 ····· 99

<표 Ⅳ- 2> 분위수간 상대소득비 ····· 100
<표 Ⅳ- 3> 가구주의 직업유형별 평균소득 및 10분위 점유비 ·· 103
<표 Ⅳ- 4> 지니계수 변천의 국제비교 ····· 107
<표 Ⅳ- 5>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무직가구, 여자가구주와 노인비율 ····· 113
<표 Ⅳ- 6> 무직가구비율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의 모의실험결과 (2000년, 가구기준) ····· 116
<표 Ⅳ- 7> 무직가구비율 모의실험결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117
<표 Ⅳ- 8> 무직가구비율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 실험 결과 ····· 120
<표 Ⅳ- 9> 성별 세대주 구성 추이 ····· 121
<표 Ⅳ-10> 가구주 성별 배우자 유무 구성 추이 ····· 122
<표 Ⅳ-11> 편부모와 미혼자녀 가구 구성 추이 ····· 124
<표 Ⅳ-12> 연령별 사망률 ····· 125
<표 Ⅳ-13> 여성가구주 비율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의 모의실험결과 (2000년, 가구기준) ····· 128
<표 Ⅳ-14> 여성가구주비율 모의실험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 129
<표 Ⅳ-15> 무배우자 여성가구주 비율 모의실험결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129
<표 Ⅳ-16> 무배우자 미성년 부양 여성가구주 비율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130
<표 Ⅳ-17> 여성가구주 가구(전체) 비율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 131
<표 Ⅳ-18> 미성년자 부양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 132
<표 Ⅳ-19> 연령별 인구구성 변화 추이 ····· 134
<표 Ⅳ-20> 가구주 연령별 구성 ····· 135

<표 Ⅳ-21>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분포 (2000년 기준) ····· 135
<표 Ⅳ-22> 노인인구비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의 모의실험결과 Ⅰ (2000년, 가구기준) ····· 139
<표 Ⅳ-23> 노인인구비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의 모의실험결과 Ⅱ (2000년, 가구기준) ····· 140
<표 Ⅳ-24> 노인인구비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의 모의실험결과 Ⅲ (2000년, 가구기준) ····· 141
<표 Ⅳ-25> 60세 이상 노인가구비율 모의실험결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142
<표 Ⅳ-26> 65세 이상 노인가구비율 모의실험결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143
<표 Ⅳ-27> 70세 이상 노인가구비율 모의실험결과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 144
<표 Ⅳ-28> 60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 147
<표 Ⅳ-29> 65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 148
<표 Ⅳ-30> 70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 149
<표 Ⅳ-31>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무직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의 중복도 ····· 151

<부표 Ⅰ- 1> 1982~2000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178

<부표 Ⅱ- 1> 고소득자/저소득자의 소득비율 변화 ····· 186

<부표 Ⅲ- 1> 미국의 소득불평등도 계측결과: 1967~1998 ····· 188
<부표 Ⅲ- 2> 미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 189

<부표 Ⅲ- 3> 영국의 지니계수 추정결과(1978~1998-99) ····· 189
<부표 Ⅲ- 4> 일본의 지니계수 추정결과 ····· 190
<부표 Ⅲ- 5> 싱가포르의 가계소득분배 ····· 190
<부표 Ⅲ- 6> 호주의 지니계수 추정결과 ····· 191
<부표 Ⅲ- 7> 뉴질랜드의 지니계수(근로소득자) ····· 191
<부표 Ⅲ- 8> 뉴질랜드의 시장소득 구성 ····· 192
<부표 Ⅲ- 9> 뉴질랜드의 총소득 대비 이전소득 및 사회보장
수혜의 비중 ····· 192
<부표 Ⅲ-10> 캐나다의 지니계수 ····· 192

<부표 Ⅳ- 1> 지니계수 추정결과(개인 및 총소득 기준, eqs=0.5) ··· 193
<부표 Ⅳ- 2> 지니계수 추정결과(개인 및 총소득 기준, eqs=1.0) ··· 194

<부표 Ⅴ- 1> SCV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0.5) ····· 195
<부표 Ⅴ- 2> SCV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1.0) ····· 195

<부표 Ⅵ- 1> MLD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0.5) ····· 196
<부표 Ⅵ- 2> MLD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1.0) ····· 196

<부표 Ⅶ- 1> Atkinson 지수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0.5) ···· 197
<부표 Ⅶ- 2> Atkinson 지수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1.0) ···· 197

<부표 Ⅷ- 1> 인구증가율의 국제비교 ····· 198
<부표 Ⅷ- 2>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 199
<부표 Ⅷ- 3> 성인(25~64세) 교육수준의 국제비교 ····· 200
<부표 Ⅷ- 4>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 201
<부표 Ⅷ- 5>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 ····· 201
<부표 Ⅷ- 6> 65세 이상 고령자의 분포(1995년 현재) ····· 202

그 림 목 차

[그림 Ⅱ- 1] 명목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 46
[그림 Ⅱ- 2] 소득계층별 총소득(전체) ····· 57
[그림 Ⅱ- 3] 소득계층별 실질총소득(전체, 1995년 기준) ····· 57
[그림 Ⅱ- 4] 소득계층별 총소득 점유비(전체) ····· 57
[그림 Ⅱ- 5] 주요 분위별 소득점유비 추이(전체) ····· 57
[그림 Ⅱ- 6] 소득계층별 소비지출(전체) ····· 65
[그림 Ⅱ- 7] 소득계층별 실질소비지출(전체, 1995년 기준) ····· 65
[그림 Ⅱ- 8]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전체) ····· 65
[그림 Ⅱ- 9] 주요 분위별 평균소비성향 추이(전체) ····· 65
[그림 Ⅱ-10] 주요 분위별 소비지출점유비 추이(전체) ····· 66

[그림 Ⅲ- 1] 지니계수 및 소비지출 집중도 추이 ····· 68
[그림 Ⅲ- 2] KPS 지수의 변화 추이 ····· 74

[그림 Ⅳ- 1] 백분위수간 상대소득비 Ⅰ ····· 101
[그림 Ⅳ- 2] 백분위수간 상대소득비 Ⅱ ····· 101
[그림 Ⅳ- 3] 백분위수간 상대소득비 Ⅲ ····· 101
[그림 Ⅳ- 4] 무직가구비와 실업률의 비교 ····· 114
[그림 Ⅳ- 5] 무직가구비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 모의실험 결과 ·· 118
[그림 Ⅳ- 6] 무직가구비 1%p당 지니계수 변화 ····· 118
[그림 Ⅳ- 7] 무직가구비율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 121
[그림 Ⅳ- 8] 여성가구주 가구(전체) 비율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 131

[그림 Ⅳ- 9] 미성년자 부양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 132
[그림 Ⅳ-10] 60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 147
[그림 Ⅳ-11] 65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 148
[그림 Ⅳ-12] 70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 149

[부도 Ⅱ- 1] 소득계층별 총소득 ····· 183
[부도 Ⅱ- 2] 소득계층별 총소득 점유비 ····· 183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일반적으로 소득격차는 교육수준, 연령, 능력, 보유자산, 취업 유무 및 취업형태, 직업, 산업, 경기, 실업률, 생산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경기여건이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서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 1998년에 분배격차가 확대된 반면,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1999년에는 분배격차가 축소되었던 사례를 들 수 있다[1].

우리는 흔히 각 경제주체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효용을 지표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개별 경제주체들이 추구하는 효용을 계측하여 합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후생을 논함에 있어서는 개인의 주관적 효용에 대한 대리변수 또는 간접적인 지표로서 소득·소비지출 등을 많이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소득·소비지출의 절대수준 못지않게 이들 변수에 대한 상대적 분포도 사회후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각 경제주체의 효용함수 속에는 타인의 소득·소비지출이 설명변수로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는 사회후생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에 앞서 소득분배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며 특히 조세를 포함한 각종 재분배 정책에 대한 효과 검증이 필요하다.

---

1) 성명재(2000) 참조.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소득분배 문제, 즉 형평(equity)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분배격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소득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1997년말 외환위기로부터 촉발된 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실업자가 급증[2]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줄지어 발생하면서 분배격차가 일시에 크게 확대되었던 것이 분배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1999년에는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일면 1998년에 급속히 악화되었던 분배격차가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이는 실업률 하락[3]과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의 지속적인 확충 등에 힘입어 1999년의 소득분배 구조가 1998년보다 다소 호전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1999년에는 정보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활성화되고 주식시장 또한 폭등 장세를 나타내면서 분배격차가 선진국형으로 서서히 확대·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러한 배경에는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도 일조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정확하게는 1990년대 중반까지의 기간에는 소득계층별 분배격차가 완만하게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분배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의 기간에는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경제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까지 확산되면서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축소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점차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경제로 발돋움하면서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확산되고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관련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주가가 급등하였으며, 세계화·

2) 실업률은 1997년 2.6%에서 1998년에는 6.8%로 급등하였다.
3) 1999년에는 실업률이 6.3%로 소폭 하락하였다.

개방화에 따른 무한경쟁시대로의 돌입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선진국형 분배구조로의 이행, 즉 새로운 기술진보 세력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주도되면서, 과거 불균형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보았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분배격차가 서서히 확대되는 시기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8년에는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달하여 경기악화가 극심하였던 만큼 소득분배도 정상적인 추세선을 벗어나 일시적으로 크게 악화되는 현상(overshooting)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99년에는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1998년에 비해 소득분배 격차가 크게 축소되어 경제위기 직전 수준에 근접해가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차 분배격차가 서서히 확대되는 추세로 전환된 것의 연장선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였을 뿐 기본적으로 최근의 분배구조가 선진국형으로 점차 확대일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분배의 격차 확대로 인해 형평과 소득재분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정부의 정책방향도 자연스럽게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소득재분배의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이전지출과 조세를 들 수 있다[4]. 조세는 소득·소비·재산과세 등 세원별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소득·재산과세는 소득계층별 세부담이 누진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正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반면, 소비과세는 세부담이 역진적인 경우가 많아 負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 그러나 조세정책상 세부담은 세제뿐만 아니라 소득·소비패턴 자체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조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논의는 현실에 기초한 자

4) 이전지출 중 재분배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적 이전소득(지침)을 제외한 각종 공적보조이다. 조세는 광의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포함하지만 협의의 경우에는 순수한 조세만을 의미한다.

료분석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실증연구의 문제로서 선험적으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제도 자체만으로는 재분배 정책의 효과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조세는 세부담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만 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5]. 반면에 이전지출 등 사회보장 정책을 통한 재분배 정책은 소득이나 세부담 수준에 관계없이 재분배 효과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양자 모두 정부의 재분배정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각각의 비중(GDP 대비 세수 또는 이전지출 비중 등)과 제도상 누진도 등에 따라 각각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달라진다.

만약 면세자의 비율이 매우 낮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사회보장정책보다는 누진구조를 가진 조세정책(소득세)을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이다. 반대로 실업자가 대량 존재하고, 따라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매우 낮으며 그들의 상당수가 면세자인 경우라면 조세정책보다는 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업률이 낮은 경우보다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 이전지출 등 사회보장 혜택을 통한 재분배정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이 실업자로서 면세자인 최저소득층의 경우 조세를 통해 이들의 소득을 지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실업급여 등의 이전지출을 사용하면 직접 실업자들에게 소득을 보조해줌으로써 보다 직접적인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업률이 높은 경우보다는 실업률이 낮은 경우

5) 면세자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을 통해 실질가처분소득을 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를 논하는 것임에 유의하기 바란다.

에 조세정책(소득과세 등)의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사회보장 수혜 및 조세정책 모두 소득재분배를 위해 긴요한 정책이지만 실업률 수준, 세전소득 분배상태, 소득수준, 경제발전단계 등에 따라 각종 재분배 정책의 상대적 기여도는 달라짐을 시사해준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실업률이 매우 높으며, 따라서 저소득층의 세전소득 수준은 매우 낮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회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GDP 대비 비중도 높아 사회보장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소득과세의 비중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세정책에 의한 재분배 효과의 절대수준도 소득과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보다는 더 큼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자 개인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효과 분석 및 그를 통한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최근의 외환위기 및 그에 따른 경제위기 이후 경기의 부침에 따라 계층별 소득격차가 확대·축소를 반복하는 등 분배구조가 과거의 추세선을 벗어나 다소 불안정하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분배격차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다.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외된 계층의 출현 및 그러한 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IT산업의 비약적 발전 및 증시 활황 등에 힘입어 고액소득자가 속출하는 등 선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강화에 따른 선진국형 소득격차의 확대 양상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의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는 분명히 사회·경제적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소득격차 확대의 요인이 불평등 확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진경제로의 진입에 따른 일종의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자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물론 현 시점에서 양자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의 정보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은 어렵지만 최소한 개념적으로 그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분배구조의 동향(추이)과 조세정책의 재분배 효과를 검증하고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2. 국내의 소득분배 관련 연구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득분배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세부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연구로 주학중(1979, 1982), 김대모·안국신(1987), Leipziger(1992), 권순원 외(1992), 정광수(2000) 등을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소득분포 상태를 추정하고 재분배 문제를 논하였다.

그 밖에 소득분배 및 소득재분배 문제와 관련하여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조세는 사회이전지출과 함께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의 정책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득분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하여 재분배정책으로서 사회이전지출이나 사회보장각출 등을 통한 재분배 효과의 절대규모가 상당히 미미하였다. 이는 그만큼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였음을 의미하는바, 재분배 효과에 대한 논의의 상당 부분이 조세부담 분

포와 관련된 것이었다. 따라서 세부담 분포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소득분배구조에 대해서도 논의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승수(1982), 현진권·나성린(1996A), 나성린·현진권(1996), 성명재·전영준(1999), 성명재(2000) 등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세목 가운데 소득세 또는 소비세의 부담 분포 및 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진권·나성린(1996B), 임주영(1996) 등의 연구는 소득세 귀착, 차병권(1966), Heller(1981), Oh(1982), 서준호(1984), 이계식·배준호(1986), 곽태원(1987), 현진권·나성린(1996C), 성명재(1996A) 등은 소비세 또는 간접세 부담/귀착을 분석하였다. 그 밖에 김명숙(1988), 장오현(1992), 현진권(1996) 등의 연구에서는 재산세 부담을 분석하였다.

그 밖에 전반적인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로 현진권(1996B, 1999, 2001), 현진권·강석훈(1998), 현진권·임병인(2000) 등이 있다.

3. 주요국에서의 소득분배 관련 연구

지니계수는 한 경제의 분배상태를 대표적으로 표시해주는 지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조세나 사회보장기여금 또는 이전소득 등이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지니계수를 비롯하여 이를 직·간접적으로 변형한 지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지니계수를 비롯하여 각국의 소득분배구조를 연구한 최근의 연구는 OECD의 Burniaux et al(1998), Förster(2000)를 비롯하여 World Bank의 Milanovic(1999) 등이 있다. 그리고 각국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로서 영국의 Harris(2000)와 Lakin(2001), 미국의 Arthur Jr. and Weinberg(2000), 일본의 MHLW(2000;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싱가포르의 Census of Population Office(2001), 호주의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1998, 1999, 2001), 뉴질랜드의 Statistics New Zealand(1999), 캐나다의 Statistics Canada(1998) 등 다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통계청에서 매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총소득 기준의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시장소득(market income)에 사회이전소득(social transfer)을 포함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경우는 물론이고 소득·재산세전 및 세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심지어는 소비세후 소득기준으로도 지니계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나 분석방법, 분석의 범위, 기타 제반 가정 등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 직접적인 상호비교가 어렵다. 즉, 각국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소득분배를 분석하기 때문에 각국의 소득불평등도 지수 추정 결과를 직접 비교하여 소득불평등도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방법론, 자료, 분석 목적, 가정 등에 대한 조정 없는 단순한 국제비교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별로 사회체계와 국민의식, 조직, 분석자료의 용도 등이 판이하게 다른 만큼 엄밀한 의미에서 위의 차이 조정을 통한 객관적 비교 시도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비교에 있어서는 절대수준 비교는 적절하지 않으며 대신, 가능한 한 가정·방법론 등을 최대한 가깝게 접근시킨 상태에서, 상대적 수준 변화(예: 변화율 비교 등) 등에 대한 국제비교는 상당히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4. 소득의 정의: OECD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소득에 대한 정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상태를 추정함에 있어서 소득에 대한 정의는 의외로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즉, OECD나 World Bank,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는 시장소득, 총소득(gross income), 세후소득(after-tax income) 또는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등으로 소득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소득 개념에 대해 비교적 잘 정리된 연구로는 OECD의 Burniaux et al(1998)을 들 수 있다. 본절에서는 상기의 연구를 중심으로 소득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과 자본을 기초로 수취하는 소득을 시장소득(market income; M)이라고 한다. 대체로 시장소득은 수입(earnings; ER)과 자본소득(capital income)으로 구성된다. 수입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을 말하며[6], 자본소득은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s) 및 민간 이전소득(이상 K), 그리고 자영업소득(SE)으로 구성된다.

시장소득에 사회보장이전(TR), 즉 상해급여, 장애급여, 공공부문으로부터의 퇴직급여, 실업급여, 출산수당, 자녀 및 가족수당 등을 합산하면 총소득이 된다[7].

총소득에서 직접세와 피고용자의 사회보장기여금을 차감하면 가처분소득이 된다.

$$\text{가처분소득(W)} = ER + (K + SE) + (TR) - (TA)$$

불평등지수는 흔히 가구 또는 개인을 단위로 계산된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구성원 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소득을 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실질소득은 달라진다. 따라서 불평등지수를 논할 때에는 가구별 자료로부터 인별 자료를 추정 또는 환산한 조정소득(adjusted income)을 사용하

6) 단, 고용주의 사회보장 기여분은 제외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회보장 수혜금은 포함한다.

7) Burniaux et al(1999)의 연구에서는 총소득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나 통상 위와 같이 많이 사용한다.

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많이 활용되는 것이 균등화탄력성(equivalence elasticity)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5. 불평등지수의 종류

가. 균등화탄력성(equivalence scale elasticity)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라고 하더라도 가구별로 구성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 수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커지게 된다. 소득수준이 동일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수가 다르다면 실질적인 후생수준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평등지수를 논함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의 고저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의 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확한 후생수준을 반영해주는 불평등지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구 구성원의 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불평등지수 추정시에 가구 구성원의 수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의 하나로 OECD에서는 균등화탄력성(equivalence scale elasticity)의 개념을 널리 사용하고 있다. 소득균등화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Burniaux et al(1998)에서 채택한 방법인 가구별 소득자료를 개인별 소득자료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어떤 가구의 구성원 수가 N, 소득수준이 Y라고 하자. 이때 Burniaux et al(1998)에서는 해당 가구 구성원 각 개인은 가상적으로 전체 가구소득을 균등하게 배분받으며 각자가 수령하는 실질소득수준은 $Y \div N^e$으로 정의하였다(단, $0 \leq e \leq 1$). 만약 e가 0이면 각 구성원의 실질소득을 Y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소득에 대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반

면 e가 1이라면 이는 소득에 대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가 최대화되었을 때를 일컫는 것으로 가구 구성원 각자는 전체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현실에서는 e의 값으로 0.5를 많이 채택한다. Burniaux et al(1998)에서도 본문에서는 e=0.5로 가정하였으며, 부록에서는 e=1에 대해서도 추정결과를 실었다.

연구나 분석자료의 내용, 특성 등에 따라 불평등지수 추정방법이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구자료를 인별 자료로 환산하여 각 개인별 소득정보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기준의 불평등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OECD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 가구별 자료를 기준으로 불평등지수를 추정하기도 한다. 가구자료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영국의 통계청에서와 같이 가구 구성원별 특성에 따른 가중치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필요에 따라 개인기준과 가구기준 모두를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가구기준을 사용할 경우 가구 구성원의 인적 특성에 따라 부여되는 가중치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어 정확한 값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가중치 조정이 자의적으로 조정되면서 불평등지수 추정결과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가중치 조정작업은 하지 않는다.

나. 지니계수

불평등지수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니계수이다. 지니계수는 45도선 밑의 면적에서 로렌즈 곡선과 45도선 사이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지니계수의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분배상태가 균등하며, 반대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계층별 분배상태가 불균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계수

8) 영국에서 가구 구성원별 인적 특성에 따른 자료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arris(2000)와 Lakin(2001)을 참조하기 바란다.

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Gini &= \left(\frac{2}{\mu \cdot n^2}\sum_{k=1}^{n} k \cdot W_k\right) - \frac{n+1}{n} \\ &= \frac{2\,cov\left(W_k, \frac{k}{n}\right)}{\mu} \\ &= \frac{\frac{2}{n}\sum_{k=1}^{n}(W_k - \mu)\cdot\left(\frac{k}{n} - \frac{1}{n^2}\sum_{k=1}^{n} k\right)}{\mu} \end{aligned} \qquad (I\text{-}1)$$

단, W_k=k번째 사람의 가처분소득, n=표본의 수, μ=가처분소득의 산술평균.

그러나 위의 식은 표본자료가 모든 부속모집단(sub-population)에 대해 동일한 비율로 추출되는 경우, 즉 완전무작위추출시에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표본자료별로 표본추출 가중치가 서로 다르다면 위의 방법보다는 로렌즈 곡선을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Milanovic (2001)에서 채택하고 있는 다음의 식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Gini = \frac{1}{\mu}\sum_{i=1}^{N}\sum_{j>1}(y_j - y_i)\,p_i p_j \qquad (I\text{-}2)$$

단, p_i는 i-번째 표본의 추출 가중치.

그런데 식 (I-2) 외에도 가중치를 고려한 지니계수 추정을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이 다소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다.

$$Gini = \frac{\sum_{i=1}^{N} w_i \cdot cwy_i}{\sum_{i=1}^{N} w_i \cdot cw_i} \qquad (I\text{-}3)$$

단, w_i, cw_i, cwy_i는 각각 i-번째 표본의 추출 가중치, 누

적가중치, 누적가중소득비중을 나타내며, cw_i, cwy_i는 각각

$$cw_i = \sum_{j=1}^{i} w_j, \quad cwy_i = \frac{\sum_{j=1}^{i} w_j \cdot y_j}{\sum_{i=1}^{N} w_i \cdot y_i}$$ 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마지막 식 (Ⅰ-3)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추정하기로 한다. 가구기준 지니계수의 경우에는 표본 i가 i번째 가구의 자료를 나타내지만, 개인기준 지니계수의 경우에는 표본 i가 가구자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균등화탄력성을 적용하여 가구자료에서 가상적으로 생성한 개인자료를 나타냄에 유의하기 바란다.

다. SCV, MLD, Atkinson 지수

소득분배를 논함에 있어서는 지니계수 외에도 변이자승계수(SCV : 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와 평균대수편차(MLD : Mean Log Deviation), Atkinson 지수 등이 많이 사용된다. 각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CV = \frac{var(W_k)}{\mu^2} = \frac{\frac{1}{n}\sum_k (W_k - \mu)^2}{\mu^2} \qquad (Ⅰ\text{-}4)$$

$$MLD = \frac{\sum_k \log\left(\frac{\mu}{W_k}\right)}{n} \qquad (Ⅰ\text{-}5)$$

$$Atkinson = 1 - \left[\frac{1}{n}\sum_k \left(\frac{W_k}{\mu}\right)^{1-a}\right]^{\frac{1}{1-a}} \qquad (Ⅰ\text{-}6)$$

단, a는 사회의 불평등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매개변수이다. a는 불평등회피도라고 하며 0에서 무한대까지의 값($0 < a < \infty$)을 가진다. a의 값이 커질수록 저소득계층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게 된다. Burniaux et al(1998)에서는 a=0.5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지수, 특히 그 가운데 지니계수를 추정하는 경우 개인기준과 가구기준 등 두 가지 방법에 의한 추정치를 제시하도록 하며 개인기준의 경우에는 a=0.5의 값을 사용하기로 한다.

지니계수(G)와 Atkinson지수(A)는 0과 1 사이, SCV는 0과 무한대 사이, MLD는 0과 (1+log(100))log(μ) 사이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동일한 수준의 변화에도 각 지표에 따른 불평등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라. 조세집중도와 기타 불평등지수

조세집중도는 지니계수와 매우 유사하다. 소득대신 세부담을 대체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세집중도가 낮을수록 소득계층별 세부담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조세집중도가 높을수록 세부담이 한 쪽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집중도의 값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주세 등과 같은 소비세의 경우에는 조세집중도의 값이 작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서로 세부담 분포가 상이하더라도 조세집중도는 동일하게 나타날 수도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분배적 역진도 지수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KP(Khetan-Poddar)지수, K(Kwakwani)지수, KPS(Khetan-Poddar-Suits)지수, KU(Kuznets)지수, TH(Theil's entropy)지수 등이 있다. KP>1, K>0, KPS<1, KU>0, TH>0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누진적이고, KP=1, K=0, KPS=1, KU=0, TH=0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비례적이며, KP<1, K<0, KPS>1, KU<0, TH<0인 경우에는 세부담이 역진적임을 의미한다.

6. 분석방법

소득·소비패턴 및 세부담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 도시가계조사자료, 흔히 대우패널로 지칭되는 한국가구경제활동조사자료(Korean Household Panel Study, 이하 KHPS로 칭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에는 1991년과 1996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두 개 연도에 불과하고 KHPS의 경우에는 시계열이 짧고 그나마 최근에 단종되어 최근의 소득분배 추이를 살펴보기 어렵다. 반면에 매년 분기별로 자료가 발표되는 도시가계연보만이 최근의 동향을 반영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가.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생산·발표하는 도시가계연보의 원시자료이다. 분석대상 기간은 원시전산자료 가운데 자료의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최근 19년간(1982~2000)을 대상으로 한다[9].

통계청이 제공하는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는 월별 자료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소득 관련 정보는 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제공

9)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와 분석방법은 관련 연구인 성명재·전영준(1999)와 성명재(2000 A,B)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분석대상 기간이 1997년 이후의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분석대상 기간을 1982년 이후의 19년이라는 긴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분석대상 기간에 따라 자료 시리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표본자료의 분류방법 등을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1997년 이후 자료에 대해서도 재분류가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97~1999년의 소득·소비지출 및 세부담 추정치가 선행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자료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표본재분류를 실시한 것인 만큼 소득·소비지출·세부담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선행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과 다름이 없었다.

된다. 따라서 소득과 관련된 정보는 일부 가구에만 제한됨에 따라 가구 전체에 대한 추론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한 소득을 역소비함수의 방법을 통해 추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소득분포의 변화에 대한 분석의 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분석방법과 자료가공 방법은 본 연구의 선행 연구라고 할 수 있는 성명재·전영준(1999), 성명재(1999B, 2000)에서 채택한 것을 그대로 원용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분석방법 및 자료의 가공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10].

본 연구에서도 연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11]. 본래의 월간 또는 분기별 자료대신 연간자료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월별 조사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OECD 및 각국 정부에서 지니계수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 연간소득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과의 국제비교를 위한 기준 통일과 자료의 계절적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 월별·분기별 자료를 연간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한다. 이와 같이 특히 연간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월별 자료 또는 분기별 자료가

10)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에 대한 소득-소비 관계는 서로 동일하다는 가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과연 그러한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매우 많으며 또한 쉽게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이상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소비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차치하고 분석의 진전을 위해 잠정적으로 두 유형의 가구 사이에 소득-소비관계가 서로 동일하다는 가정을 잠정적으로 채택하기로 한다.

11) 이정우·황성현(1998), 한국개발연구원 외(2000)의 연구에서는 월별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가구별로 재분류하여 가구별 연간자료로 환산하지 않고 개별 월별자료를 독립적인 단위로 취급하여 분석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경우 소득계층 분류시 분석의 일치성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여야 한다.

가질 수 있는 계절적 특성(seasonality)에 의한 오차 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분석의 단위기간을 연간으로 설정하고 분기별 자료를 가구별로 재정리하여 연간자료로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둘째, 분기별 자료를 연간자료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는 3개월이라는 기간이 소득분배 변화를 살피기에는 너무 짧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에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예외적인 경제활동의 결과에 의한 비정상적인 추론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어떤 특정 분기에 질병이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휴직을 하였다고 한다면 연간으로는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분기별로는 휴직에 따른 소득의 변동이 통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비정상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야기되는 교란요인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연간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물론 분기 분석과 연간 분석 사이에 나타나는 차이와 마찬가지로, 연간 분석과 3~4년 분석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사이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분기 분석시에 계절성(seasonality)으로 인한 편의(bias)가 발생하는 반면 연간 분석 이상의 경우에는 계절성으로 인한 편의성 문제는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닌다. 그리고 조세정책이나 사회보장 등 각종 정부의 정책수단도 연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연간 분석이 매우 편리하며 계절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라는 점에서 장점도 가지고 있다. 물론 연간 분석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변동 요인은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계절성과 달리 경기변동은 그 자체로서 소득분배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연간 분석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크다. 선진국의 통계청 당국에서도 주로 연간 분석을 채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적으로는 생애소득(lifetime income)을 기준으로 하는 생애분석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생애연구가 불가능하다. 또한 그 밖에 생애연구에 있어서는 세대간 경제구조의 차이, 경제발전 단계 및 정책의 차이, 사회의식구조 및 경제제도의 차이 등과 같이 차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이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셋째, 조세정책[12], 특히 소득세 등의 경우 세부담이 연간 단위로 부과·결정되기 때문에 분기 분석으로는 세부담과 소득패턴간의 괴리를 좁힐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소득·소비지출 흐름의 계절적 요인에 의해 분기 분석보다는 연간 분석이 더 바람직하다. 소득·소비지출의 흐름상 계절적 요인에 의한 변동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절적 요인에 의한 변동도 각 경제주체별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경제주체라고 하더라도 분기에 따라 소속되는 소득분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1/4분기의 3분위에 속하였던 가구(경제주체)가 반드시 2/4분기 또는 여타의 분기에도 계속 3분위에 속한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분기분석을 통해서는 소득·소비패턴과 세부담 분석을 일관된 기준 아래 같이 수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계절적 요인에 의한 변동은 소득분배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데 분기분석에서는 소득·소비패턴의 변화로부터 계절적 요인에 의한 변동을 구별해내지 못하므로 분기 분석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된다. 반면에 연간 분석의 경우에는 분기자료의 연간자료 작업화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계절적 요인에 의한 변동요인이 제거되므로 의미를 부

12) 사회부조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여할 수 있다.

일례로 모든 경제주체가 연간으로는 동일한 소득을 얻지만 주체별로 소득을 획득하는 계절은 서로 다르다고 하자. 그러면 연간으로 분석할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소득을 분배받는 만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이 불필요하게 되지만 분기별 분석결과에서는 소득획득 시점의 차이로 인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나뉘는 만큼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사실을 놓고서도 분석단위 기간의 차이로 인해 해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음을 암시해준다. 특히 분기별 분석에서는 1분기에는 저소득층이었던 경제주체가 2분기에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만, 이들을 동일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별개의 주체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가 나타난다. 최근의 분배문제 연구에 있어서는 분기 분석을 통해 결론을 유도함에 따라 실제와 다른 연구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실제로 전년 동기 대비 변화율이 얼마냐 하는 분석도 평균에 국한하면 모르되 계층별 분포분석 등에 있어서는 분기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왜곡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연간으로 분석단위 기간을 선정하였다. 또한 OECD는 물론이고 각국 정부 차원에서의 소득분배 관련 통계도 대부분 연간자료를 대상으로 연구한다는 것과 대응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연간분석을 기본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기별 자료로부터 동일가구를 묶어서 연간단위로 환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계절적 요인(seasonality)에 의한 자료특성의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 분기에 최소한 1개월 이상 자료가 조사된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특정 표본이 특정 분기에 전혀 조사되지 않은 이유가 무작위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이 표본을 재구성하여 연간자료

로 환산하더라도 계절 특성을 제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택오류(selection bias)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 통계청의 도시가계자료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본 결과 조사누락 분포가 무작위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므로 그런 가능성은 무시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13].

그 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임금 결정도 대부분 연소득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에서 거의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소득분포를 추정함에 있어서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나. 소득계층의 구분

세부담 분포 분석에 있어서는 소득계층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각 표본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에 따라 소득계층(또는 소득분위)을 구분하였다.

먼저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및 임대소득 등의 재산소득과 이전소득 등을 포괄한 총체적 소득으로 정의하였다[14]. 다만 도시가계연보자료에는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만 소득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기타 가구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명재·전영준(1999)의 연구와 같이 역소비함수(또는 소득함수) 추정방법을 통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13) 조사누락자료가 무작위성(randomness)을 띠는 경우에만 위와 같은 조정이 의미를 지닌다. 만약 조사누락의 원인이 어떤 체계적(systematic)인 원인에 의해 특정 부류의 가구에 집중되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한 분석은 일치성(consistency)을 보장할 수 없게 되며 偏倚(bias)를 가져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누락 유형에 대해 통계청 사회통계과 담당자에게 문의해본 결과 그 원인의 대부분이 이사나 휴가, 외출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작위성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사누락이 무작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총소득에는 일반적인 수입, 즉 저축을 찾은 금액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15].

다음으로는 총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으로 자료를 재배열한 뒤 각 표본의 가중치의 합이 0.1(10%)이 되도록 자료를 구분하여 최종적으로 소득10분위를 구분하였다.

다. 분석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1982~2000년 동안의 도시가계의 소득·소비패턴의 변화를 관찰한다. 특히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계층별 소득 및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소득분배 이외에도 자산분배구조에 대한 논의도 매우 흥미롭다. 그렇지만 아직 자산분배구조와 소득분배구조의 계층별 분석이 서로 match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 유의사항

거의 대부분의 소득분배 관련 연구에서 보듯이 소득 1분위의 구성은 다른 분위에 비해 이질적인 집단으로 결합된 경우가 많다. 즉, 유량(flow)으로 측정한 소득(income)을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하면 최저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1분위에는 실업자, 무능력자 등을 비롯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저소득층과, 고령이나 은퇴, 또는 일시적 실업, 이직이나 전직의 과도기적 상황 등의 사유로 인해 소득수준이 상당히 낮게 포착되었으나 부(wealth)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잠재적인 소득능력을 갖춘 경우도 있다. 따라서 1분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분위와 달리 평균적인 소득수준에 비해 소비지출 수준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

15) 이는 비록 자영업자가구의 신고소득의 신뢰도가 낮기는 하지만 소비지출 신고율은 상대적으로 별로 왜곡이 심하지 않으며, 소비지출 구조도 근로자가구와 동일하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는 비록 소득수준은 낮지만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결코 저자산층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본 연구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도시가계조사를 비롯하여 관련된 자료에서는 자산과 관련된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한 정도의 자산을 축적한 부류를 분리해내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Ⅱ. 소득·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본절에서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9년간(1982~2000)의 소득·소비분배구조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1. 우리나라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

가. 소득 변화 추이

도시가구의 가구당 평균총소득은 1982~2000년 동안 403만 7천원에서 2,942만 6천원으로 연평균(기하평균) 11.6% 증가하였다[16]. 분석기간 동안 도시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1998년의 경제위기 기간이 유일하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연평균 소득증가율이 11.6%이었지만 경제위기 직전 시기까지는 소득증가율이 더 높았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1982~1997년의 연평균(기하평균) 소득증가율은 13.4%로 전체 평균을 1.8%p 상회한다.

1998년에 도시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주된 요인은 경기후퇴에 따른 도산 및 실업 급증, 임금 하락 등이다. 전체적으로 도시가구의 평균소득은 12.1% 감소하였으며 가구유형별로는 근로자가구가 12.9%, 자영업자가구가 11.3%로 근로자가구가 조금 더 높았다[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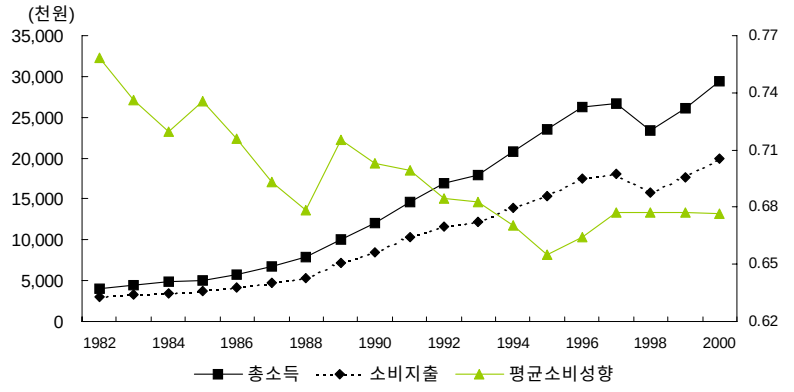
16) 1982~2000년 동안 근로자가구보다 자영업자가구의 평균소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석의 편의상 무직가구를 모두 근로자가구에 편입시켰던 것에 부분적으로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7) 이는 경제위기 동안 급증한 실업자를 근로자가구로 분류함에 따른

1982~2000년 동안 가구 유형별로는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191만 1천원에서 2,848만 3천원으로 연평균(기하평균) 11.7% 증가하였으며, 자영업자가구의 경우에는 432만 8천원에서 3,118만원으로 연평균(기하평균) 11.6% 증가하여 근로자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미소하게나마 조금 더 높았다. 이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매우 크게 급상승하면서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크게 감소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에 걸친 극심한 노사갈등과 임금협상의 결과로써 임금이 매우 크게 상승하였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993년을 제외하고는 1986~1995년 동안 전년대비 총소득 증가율이 1982~2000년의 연평균(기하평균) 소득증가율을 초과하였다. 특히 1989년에는 소득증가율이 28.5%에 이르러 평균증가율의 2배

[그림 II-1] 명목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요인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자영업자 중에서 도산·파산 등에 따라 실업자화한 가구를 근로자가구에 포함시키지 않고 자영업자가구에 포함시킨다면 1998년의 가구유형별 소득감소율은 위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종전에 자영업자가구였으나 실업자가 된 경우에는 피용자로서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는 만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류를 근로자가구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를 크게 상회하는 등 19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 이후 소득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외환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996년까지 지속되었다. 1997년부터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소득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1998년에는 12.1% 감소, 1999~2000년에는 각각 11.5%와 12.8% 증가하여 물가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외형상(명목소득)으로는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1> 도시가계의 소득·소비 변화 추이

(단위: 원)

	1982	1983	1984	1985	1986
총소득 (전체)	4,037,228	4,385,220	4,882,479	4,999,230	5,808,950
(근로자)	3,911,903	4,245,041	4,695,576	4,869,392	5,673,766
(자영업자)	4,327,747	4,717,710	5,355,189	5,362,523	6,175,004
근로소득 (근로자)	3,112,090	3,356,605	3,695,193	3,918,354	4,464,810
가구주의 근로소득	2,824,582	3,035,487	3,315,479	3,565,465	3,916,773
비근로소득 (자영업자)	4,089,704	4,448,730	5,067,403	5,066,957	5,805,355
소비지출(전체)	3,060,655	3,228,560	3,512,187	3,676,601	4,159,879
(근로자)	2,941,666	3,094,069	3,341,981	3,523,566	3,985,160
(자영업자)	3,336,487	3,547,558	3,942,666	4,104,799	4,632,987
소비성향(전체)	0.7581	0.7362	0.7193	0.7354	0.7161
(근로자)	0.7520	0.7289	0.7117	0.7236	0.7024
(자영업자)	0.7710	0.7520	0.7362	0.7655	0.7503
	1987	1988	1989	1990	1991
총소득 (전체)	6,812,066	7,859,963	10,101,926	12,024,906	14,700,595
(근로자)	6,593,896	7,539,855	9,750,298	11,660,914	14,271,690
(자영업자)	7,443,462	8,734,707	10,965,160	12,992,600	15,786,405
근로소득 (근로자)	5,229,866	6,196,012	7,679,506	8,978,679	10,923,597
가구주의 근로소득	4,510,202	5,319,619	6,546,274	7,649,694	9,156,320
비근로소득 (자영업자)	6,935,895	8,188,639	10,042,169	11,908,328	14,372,180
소비지출(전체)	4,722,725	5,334,092	7,223,560	8,456,013	10,276,166
(근로자)	4,496,152	5,054,864	6,823,549	8,046,481	9,757,828
(자영업자)	5,378,440	6,097,126	8,205,568	9,544,780	11,588,386
소비성향(전체)	0.6933	0.6786	0.7151	0.7032	0.6990
(근로자)	0.6819	0.6704	0.6998	0.6900	0.6837
(자영업자)	0.7226	0.6980	0.7483	0.7346	0.7341

<표 II-1>의 계속

(단위: 원)

	1992	1993	1994	1995	1996
총소득 (전체)	16,905,972	17,875,216	20,744,739	23,507,362	26,283,231
(근로자)	16,480,790	17,381,383	20,244,319	23,023,212	25,900,407
(자영업자)	17,932,428	19,157,583	21,940,911	24,492,687	27,023,828
근로소득 (근로자)	12,734,893	13,871,578	15,588,896	18,130,033	20,180,524
가구주의 근로소득	10,775,825	11,493,226	12,670,784	14,514,253	16,289,684
비근로소득 (자영업자)	16,295,251	17,591,634	20,054,799	22,165,954	24,621,220
소비지출 (전체)	11,575,544	12,208,550	13,909,416	15,401,215	17,462,101
(근로자)	11,033,844	11,638,543	13,370,433	14,766,504	16,789,854
(자영업자)	12,883,291	13,688,721	15,197,767	16,692,959	18,762,605
소비성향 (전체)	0.6847	0.6830	0.6705	65.52	66.44
(근로자)	0.6695	0.6696	0.6605	64.14	64.82
(자영업자)	0.7184	0.7145	0.6927	68.15	69.43

	1997	1998	1999	2000
총소득 (전체)	26,611,184	23,399,176	26,090,955	29,426,303
(근로자)	25,385,966	22,123,863	25,486,738	28,483,263
(자영업자)	29,039,685	25,744,194	27,250,512	31,180,263
근로소득 (근로자)	20,924,600	18,379,565	18,501,922	19,974,497
가구주의 근로소득	16,611,999	15,151,784	15,118,066	16,270,935
비근로소득 (자영업자)	26,159,280	23,408,075	25,126,395	28,033,148
소비지출 (전체)	18,020,074	15,845,429	17,669,727	19,916,996
(근로자)	17,224,930	15,008,404	16,921,017	19,038,115
(자영업자)	19,596,125	17,384,533	19,106,583	21,551,628
소비성향 (전체)	67.72	67.72	67.72	67.68
(근로자)	67.85	67.84	66.39	66.84
(자영업자)	67.48	67.53	70.11	69.12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을 물가수준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다. 1995년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1982년 769만원에서 2000년에는 2,421만 3천원으로 연평균(기하평균) 6.6% 증가하였다. 실질소득은 역시 명목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던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1993년 제외) 기간에 걸쳐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에 경제위기를 맞이하면서 도시가구의 실질소득은 크게 하락하였다. 1997년말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1998

<표 Ⅱ-2>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한 실질소득의 변화 추이

(단위: 원, %)

	소비자물가지수	명목소득	명목소득증가율	실질소득	실질소득증가율
1982	52.50	4,037,228	-	7,689,958	-
1983	54.30	4,385,220	8.62	8,075,912	5.02
1984	55.50	4,882,479	11.34	8,797,259	8.93
1985	56.80	4,999,230	2.39	8,801,461	0.05
1986	58.40	5,808,950	16.20	9,946,832	13.01
1987	60.20	6,812,066	17.27	11,315,724	13.76
1988	64.50	7,859,963	15.38	12,185,989	7.69
1989	68.20	10,101,926	28.52	14,812,208	21.55
1990	74.00	12,024,906	19.04	16,249,873	9.71
1991	80.90	14,700,595	22.25	18,171,316	11.82
1992	86.00	16,905,972	15.00	19,658,107	8.18
1993	90.10	17,875,216	5.73	19,839,307	0.92
1994	95.70	20,744,739	16.05	21,676,843	9.26
1995	100.00	23,507,362	13.32	23,507,362	8.44
1996	104.90	26,283,231	11.81	25,055,511	6.59
1997	109.60	26,611,184	1.25	24,280,277	-3.09
1998	117.80	23,399,176	-12.07	19,863,477	-18.19
1999	118.80	26,090,955	11.50	21,962,083	10.57
2000	121.53	29,426,303	12.78	24,213,201	10.25

주: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나눈 값임.

년 한 해를 경제위기가 극심하였던 때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1997년에 실질소득이 전년대비 3.1%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을 볼 때 실질적인 경제위기는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뿐만 아니라 위기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였던 1997년초부터 1998년에 이르는 기간으로 보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해석된다.

1998년에는 실질소득이 전년대비 18.2% 감소함으로써 1997년에 이어 2년째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1997년에 비해 명목소득이 12.1% 감소하였고 소비자물가도 7.5% 상승함에 따

라 실질소득의 감소율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1999~2000년에는 실질소득 증가율이 10~11%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게 2년 연속 10% 정도의 증가율을 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의 실질소득 감소율이 매우 컸기 때문에 2000년의 실질소득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의 경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나. 소비지출 변화 추이

1982년 이래 2000년까지 소비지출은 306만 1천원에서 1,991만 7천원으로 연평균 10.97%씩 증가하였다. 소비지출의 증가는 소득이 크게 증가하였던 시기에 함께 크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즉, 1993년을 제외하고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소비지출은 10% 이상의 매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1980년대 말부터 자동차의 보급, 대형·고가의 가전제품을 비롯한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던 것에 비추어볼 때 도시가계조사자료의 분석결과가 바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명목소비지출을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한 실질소비지출의 경우에는 1986~1991년의 기간에 걸쳐 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1990년대 중반에는 그 이전기간에 비해 실질소비지출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비지출 증가율의 둔화세가 두드러지면서 1997년에 이르기까지 소비성향이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총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즉 (평균)소비성향은 1982년 0.76에서 2000년에는 0.68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1989년에는 소비지출 증가율이 35.4%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아 소득증가율을 초과하면서 소비성향이 1988년의 0.68에서 0.72로 급상승하였다. 이후 소비성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7년에 외환위기가 시작될 무렵 경기가 이미 하강국면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소비지출 증가추세도 급속히 둔화되었다. 1997년에 명목소비지출은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나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한 실질소비지출은 1.2% 감소함으로써 사실상 실질소비수준은 후퇴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98년에는 경기가 후퇴하면서 명목소비지출까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비지출 감소율이 12.1%로 소득감소율 12.1%과 거의 동일하여 소비성향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1999년부터는 경기가 회복되어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소득·소비가 모두 비슷하게 증가하여 소비성향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표 Ⅱ-3>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한 실질소비지출의 변화 추이

(단위: 원, %)

	소비자물가지수	명목소비지출	명목소비증가율	실질소비	실질소비증가율
1982	52.50	3,060,655	-	5,829,819	-
1983	54.30	3,228,560	5.49	5,945,783	1.99
1984	55.50	3,512,187	8.78	6,328,265	6.43
1985	56.80	3,676,601	4.68	6,472,889	2.29
1986	58.40	4,159,879	13.14	7,123,080	10.04
1987	60.20	4,722,725	13.53	7,845,058	10.14
1988	64.50	5,334,092	12.95	8,269,910	5.42
1989	68.20	7,223,560	35.42	10,591,730	28.08
1990	74.00	8,456,013	17.06	11,427,045	7.89
1991	80.90	10,276,166	21.52	12,702,307	11.16
1992	86.00	11,575,544	12.64	13,459,935	5.96
1993	90.10	12,208,550	5.47	13,550,000	0.67
1994	95.70	13,909,416	13.93	14,534,395	7.26
1995	100.00	15,401,215	10.73	15,401,215	5.96
1996	104.90	17,462,101	13.38	16,646,426	8.09
1997	109.60	18,020,074	3.20	16,441,673	-1.23
1998	117.80	15,845,429	-12.07	13,451,128	-18.19
1999	118.80	17,669,727	11.51	14,873,508	10.57
2000	121.53	19,916,996	12.72	16,388,543	10.19

주: 실질소비지출은 명목소비지출을 소비자물가지수(CPI)로 나눈 값임.

2. 소득·소비지출 분포의 변화 추이

가. 소득분배 분포구조의 변화 추이

1982~2000년간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소득 1분위의 경우 소득점유비는 대체로 4% 내외의 수준[18]을 보였으며, 중간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4분위와 7분위는 각각 7.5%와 10.5% 정도의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었다.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에는 소득점유비가 19.5~22.8%의 범위 내에서 21% 수준을 중심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1991년을 중심으로 1982~2000년을 두 기간으로 나누면 거의 모든 분위에서 전반기(1982~1991년)의 소득증가폭보다 후반기(1991~2000년)의 소득증가폭이 조금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Ⅱ-2] 참조). 그러나 이는 실질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효과를 포함한 명목소득을 직접 비교한 것으로서 실제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소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명목소득을 소비자물가지수로 할인하여 실질소득을 산출해보면 1982~1991년 동안의 실질소득 증가폭이 1991~2000년 동안의 실질소득 증가폭보다 훨씬 큰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Ⅱ-3] 참조). 즉, 명목소득의 절대증가수준은 후반기가 다소 더 컸으나 실질소득의 절대증가폭은 전반기가 더 크다.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소득분위에서 관찰된다. 이는 기간이 9년으로 서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서 1980년대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1990년대의 실질소득 증가율을 상회함을 의미한다. 1990년대에 들어 실질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옴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점차

18) 1980년대에는 3.76~3.98%, 1990~1996년에는 4.04~4.30%이었으며, 1997년 이후에는 매우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특히 1997~1998년에는 각각 2.74%와 2.27%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2000년에는 3.61%로 예년 수준과 비슷해졌다.

낮아지고 있는 점과, 1998년의 경제위기로 인해 모든 소득계층에서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모두 감소하였던 점을 중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경상소득(nominal income) 수준의 증가는 비교적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소득(real income) 수준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특히 1990년대의 실질소득의 증가는 상당히 작은 편이다. 이는 1990년대에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실질소득으로 평가한 후생수준의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다른 계층보다 후생수준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아마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급상승하였고 경기회복 이후에도 실업률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의 요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이혼 등의 원인에 의한 단독부모가구(특히 편모가구주 가구)와, 노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노인인구비율의 상승 등에 의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경제위기 시기로 대변되는 1990년대 후반을 제외하고는 1분위와 10분위의 소득점유비는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였다. 물론 다소 예외적으로 1990년 초반에는, 매우 미미하지만, 최고소득층의 소득점유비가 다소 하락하고 최저소득층의 소득점유비는 다소 상승하여 상대적인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Ⅱ-4]에 의하면 최고소득층인 10분위의 경우에만 약간의 점유비 차이를 보일 뿐, 나머지 소득계층에서는 1982년, 1991년, 2000년 모두 총소득 점유비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그림 Ⅱ-5]를 보면 좀더 쉽게 알 수 있다. 경제위기에 따라 1998년에 예외적으로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소득이 크게 하락하였던 것을 제외하고는 1분위와 총소득 점유비는 지난 20년간 거

의 차이가 없다. 이런 모습은 4분위와 7분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19]. 그러나 10분위의 경우 총소득 점유비는 1982년에 22.77%이었으며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완만하게 감소하였고 1990년대 중반에는 19%대 후반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다시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4>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

(단위: 천원, %)

전체		1	2	3	4	5	6	7	8	9	10	평균·계
총소득	1982	1,516	2,108	2,489	2,884	3,236	3,667	4,235	4,992	6,038	9,228	4,037
	1983	1,666	2,307	2,743	3,171	3,612	4,050	4,611	5,418	6,554	9,752	4,385
	1984	1,833	2,581	3,099	3,559	4,021	4,562	5,126	5,951	7,255	10,887	4,882
	1985	1,949	2,743	3,257	3,690	4,095	4,584	5,209	6,055	7,390	11,068	4,999
	1986	2,200	3,160	3,754	4,245	4,818	5,423	6,112	7,102	8,629	12,675	5,809
	1987	2,630	3,639	4,249	4,948	5,574	6,273	7,167	8,344	10,160	15,200	6,812
	1988	3,091	4,302	5,123	5,819	6,535	7,287	8,240	9,498	11,513	17,235	7,860
	1989	4,019	5,581	6,587	7,481	8,347	9,331	10,518	12,140	14,713	22,363	10,102
	1990	5,118	6,974	8,115	9,119	10,183	11,392	12,721	14,550	17,225	24,848	12,025
	1991	6,308	8,652	10,034	11,375	12,734	14,185	15,803	17,936	20,886	29,060	14,701
	1992	7,181	10,005	11,672	13,152	14,610	16,305	18,089	20,298	24,186	33,615	16,906
	1993	7,606	10,591	12,411	14,048	15,649	17,245	19,126	21,434	24,796	35,812	17,875
	1994	8,637	12,167	14,239	16,066	17,964	20,074	22,433	25,304	29,738	40,851	20,745
	1995	9,830	13,899	16,189	18,282	20,452	22,775	25,471	28,857	33,619	45,758	23,507
	1996	10,632	15,135	17,773	20,322	22,951	25,585	28,634	32,299	37,490	52,046	26,283
	1997	7,299	13,732	17,463	20,485	23,303	26,102	29,441	33,360	39,245	55,605	26,611
	1998	5,309	10,426	14,140	17,170	20,035	22,784	26,030	30,057	35,920	52,452	23,399
	1999	9,765	14,127	16,968	19,408	22,050	24,832	28,116	32,467	38,341	54,829	26,091
	2000	10,645	15,459	18,577	21,573	24,664	27,878	31,619	36,423	43,313	63,989	29,426
구성비	1982	3.76	5.22	6.17	7.15	8.02	9.09	10.49	12.37	14.96	22.77	100.0
	1983	3.80	5.26	6.26	7.24	8.24	9.24	10.52	12.37	14.90	22.17	100.0
	1984	3.77	5.30	6.37	7.31	8.22	9.32	10.47	12.16	14.83	22.25	100.0
	1985	3.91	5.50	6.53	7.39	8.20	9.18	10.43	12.07	14.73	22.06	100.0
	1986	3.80	5.46	6.46	7.30	8.29	9.33	10.51	12.21	14.84	21.80	100.0
	1987	3.87	5.35	6.25	7.28	8.20	9.19	10.50	12.22	14.88	22.26	100.0
	1988	3.94	5.49	6.54	7.39	8.31	9.26	10.47	12.07	14.63	21.90	100.0
	1989	3.98	5.53	6.52	7.40	8.26	9.23	10.43	12.02	14.58	22.04	100.0
	1990	4.26	5.79	6.75	7.59	8.49	9.49	10.55	12.08	14.35	20.66	100.0
	1991	4.30	5.87	6.83	7.74	8.64	9.63	10.74	12.20	14.21	19.83	100.0
	1992	4.25	5.92	6.91	7.77	8.64	9.64	10.71	12.00	14.31	19.84	100.0
	1993	4.26	5.92	6.94	7.86	8.75	9.64	10.69	11.98	13.88	20.07	100.0
	1994	4.16	5.87	6.85	7.75	8.68	9.67	10.82	12.21	14.30	19.69	100.0
	1995	4.18	5.92	6.90	7.79	8.69	9.70	10.82	12.28	14.26	19.46	100.0
	1996	4.04	5.76	6.76	7.75	8.75	9.73	10.88	12.28	14.26	19.79	100.0
	1997	2.74	5.16	6.56	7.70	8.76	9.80	11.05	12.54	14.72	20.96	100.0
	1998	2.27	4.47	6.04	7.33	8.57	9.77	11.14	12.87	15.36	22.18	100.0
	1999	3.75	5.41	6.51	7.44	8.46	9.51	10.77	12.43	14.69	21.04	100.0
	2000	3.61	5.26	6.32	7.33	8.38	9.48	10.75	12.37	14.71	21.81	100.0

19) 10분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위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표 II-4> 참조).

<표 Ⅱ-4>의 계속

(단위: 천원, %)

근로자		1	2	3	4	5	6	7	8	9	10	평균·계
총소득	1982	1,506	2,114	2,484	2,882	3,235	3,672	4,240	5,003	6,044	9,023	3,912
	1983	1,644	2,305	2,743	3,173	3,613	4,055	4,615	5,382	6,555	9,845	4,245
	1984	1,818	2,567	3,102	3,561	4,019	4,553	5,128	5,963	7,258	10,763	4,696
	1985	1,938	2,750	3,245	3,695	4,098	4,591	5,210	6,051	7,351	11,114	4,869
	1986	2,158	3,145	3,753	4,237	4,822	5,413	6,126	7,104	8,569	12,614	5,674
	1987	2,646	3,635	4,236	4,950	5,574	6,263	7,174	8,334	10,053	14,886	6,594
	1988	3,053	4,283	5,103	5,818	6,527	7,277	8,230	9,492	11,539	16,984	7,540
	1989	3,981	5,585	6,586	7,485	8,337	9,334	10,514	12,097	14,699	21,899	9,750
	1990	5,060	6,970	8,101	9,103	10,191	11,381	12,722	14,543	17,201	24,828	11,661
	1991	6,273	8,627	10,013	11,382	12,719	14,199	15,790	17,948	20,861	28,736	14,272
	1992	7,136	9,987	11,646	13,132	14,600	16,275	18,073	20,385	24,222	33,168	16,481
	1993	7,532	10,610	12,396	14,025	15,636	17,248	19,142	21,407	24,811	35,453	17,381
	1994	8,562	12,193	14,243	16,067	17,967	20,064	22,447	25,301	29,646	40,575	20,244
	1995	9,633	13,901	16,163	18,303	20,453	22,736	25,457	28,868	33,620	45,326	23,023
	1996	10,572	15,118	17,749	20,298	22,984	25,574	28,672	32,228	37,359	51,685	25,900
	1997	7,109	13,630	17,467	20,449	23,238	26,150	29,475	33,422	39,422	54,400	25,390
	1998	5,229	10,306	14,166	17,198	19,999	22,898	25,962	30,129	35,938	52,579	22,124
	1999	9,702	14,126	16,931	19,402	22,042	24,841	28,164	32,395	38,409	55,122	25,487
	2000	10,495	15,488	18,528	21,583	24,689	27,949	31,700	36,358	43,412	65,340	28,483
구성비	1982	4.16	5.87	6.97	7.65	7.99	8.85	10.67	12.59	13.64	21.61	100.0
	1983	4.27	5.96	6.60	7.99	9.05	9.21	10.29	11.63	14.26	20.74	100.0
	1984	4.47	6.44	7.36	7.72	8.10	9.72	9.47	11.31	13.53	21.88	100.0
	1985	4.49	6.10	7.05	7.98	8.79	9.12	9.37	10.97	14.70	21.43	100.0
	1986	4.15	6.19	6.59	7.77	8.95	8.82	10.33	11.18	14.45	21.56	100.0
	1987	4.38	5.74	6.89	7.86	8.47	10.07	9.99	12.42	12.73	21.46	100.0
	1988	4.65	6.04	7.01	8.24	9.02	9.85	10.22	11.32	14.00	19.65	100.0
	1989	4.78	6.26	7.04	7.56	8.53	8.98	10.32	12.37	13.70	20.45	100.0
	1990	5.03	6.43	7.15	8.14	9.04	9.49	10.42	11.37	13.10	19.82	100.0
	1991	5.12	6.36	7.24	8.35	9.18	9.79	10.25	11.95	12.54	19.22	100.0
	1992	4.85	6.81	7.09	8.24	8.29	9.23	10.88	12.54	13.61	18.47	100.0
	1993	5.00	6.43	7.27	8.45	9.11	9.61	10.28	11.81	13.34	18.69	100.0
	1994	5.08	5.98	7.26	8.04	8.89	9.95	10.20	11.97	13.60	19.03	100.0
	1995	4.75	6.30	7.42	7.48	8.65	9.39	11.86	11.71	13.87	18.57	100.0
	1996	4.75	6.15	6.55	7.90	8.40	9.25	10.36	12.46	14.81	19.36	100.0
	1997	3.82	5.70	6.29	8.36	8.59	9.58	10.65	12.87	14.97	19.17	100.0
	1998	3.40	5.27	6.44	7.29	8.42	9.13	10.14	12.85	15.67	21.40	100.0
	1999	5.05	5.51	6.43	6.77	7.85	9.66	10.47	13.25	15.55	19.45	100.0
	2000	4.53	5.89	6.26	8.06	8.12	9.68	10.56	12.03	14.78	20.07	100.0

<표 II-4>의 계속

(단위: 천원, %)

자영업자		1	2	3	4	5	6	7	8	9	10	평균·계
총소득	1982	1,547	2,090	2,506	2,889	3,239	3,659	4,224	4,968	6,027	9,620	4,328
	1983	1,740	2,310	2,745	3,163	3,608	4,039	4,603	5,483	6,553	9,594	4,718
	1984	1,902	2,655	3,088	3,553	4,024	4,583	5,121	5,930	7,250	11,158	5,355
	1985	2,007	2,716	3,300	3,675	4,086	4,567	5,207	6,062	7,491	10,964	5,363
	1986	2,362	3,227	3,756	4,271	4,805	5,446	6,080	7,099	8,770	12,823	6,175
	1987	2,564	3,651	4,300	4,942	5,575	6,309	7,151	8,373	10,335	15,961	7,443
	1988	3,288	4,369	5,186	5,823	6,563	7,314	8,263	9,509	11,459	17,680	8,735
	1989	4,206	5,565	6,590	7,470	8,369	9,324	10,528	12,243	14,739	23,225	10,965
	1990	5,433	6,986	8,157	9,170	10,161	11,420	12,720	14,565	17,269	24,889	12,993
	1991	6,481	8,729	10,094	11,354	12,775	14,152	15,830	17,911	20,926	29,757	15,786
	1992	7,351	10,075	11,734	13,205	14,628	16,363	18,128	20,078	24,118	34,446	17,932
	1993	7,977	10,529	12,452	14,119	15,686	17,236	19,093	21,493	24,764	36,509	19,158
	1994	9,053	12,106	14,227	16,063	17,959	20,098	22,409	25,311	29,914	41,411	21,941
	1995	10,461	13,896	16,252	18,246	20,450	22,844	25,509	28,838	33,617	46,503	24,493
	1996	10,832	15,173	17,817	20,370	22,896	25,602	28,571	32,437	37,763	52,690	27,024
	1997	3,161	10,507	14,729	17,585	20,135	22,129	25,458	28,999	33,267	43,397	20,925
	1998	6,426	10,748	14,091	17,128	20,090	22,634	26,117	29,944	35,890	52,268	25,744
	1999	10,193	14,127	17,034	19,417	22,061	24,814	28,036	32,626	38,199	54,405	27,251
	2000	11,247	15,390	18,659	21,552	24,625	27,749	31,488	36,528	43,143	62,217	31,180
구성비	1982	2.92	3.88	4.48	6.09	8.07	9.59	10.13	11.91	17.72	25.21	100.0
	1983	2.79	3.78	5.53	5.63	6.53	9.32	11.02	13.93	16.26	25.21	100.0
	1984	2.21	2.79	4.18	6.41	8.47	8.44	12.70	14.04	17.71	23.06	100.0
	1985	2.42	3.97	5.19	5.91	6.72	9.35	13.14	14.85	14.79	23.65	100.0
	1986	2.93	3.64	6.14	6.13	6.63	10.58	10.96	14.80	15.81	22.39	100.0
	1987	2.56	4.38	4.62	5.80	7.52	6.93	11.79	11.71	20.39	24.31	100.0
	1988	2.28	4.19	5.41	5.39	6.62	7.87	11.07	13.84	16.11	27.20	100.0
	1989	2.25	3.94	5.40	7.06	7.68	9.79	10.66	11.24	16.48	25.52	100.0
	1990	2.42	4.25	5.80	6.26	7.19	9.50	10.84	13.76	17.32	22.67	100.0
	1991	2.43	4.75	5.90	6.35	7.41	9.26	11.85	12.78	18.04	21.23	100.0
	1992	2.93	3.96	6.52	6.74	9.40	10.56	10.35	10.79	15.87	22.87	100.0
	1993	2.52	4.70	6.15	6.45	7.92	9.70	11.68	12.39	15.16	23.33	100.0
	1994	2.14	5.63	5.96	7.11	8.22	9.07	12.18	12.73	15.82	21.14	100.0
	1995	3.09	5.20	5.89	8.39	8.77	10.30	8.83	13.37	15.00	21.16	100.0
	1996	2.72	5.04	7.16	7.47	9.38	10.62	11.84	11.96	13.24	20.58	100.0
	1997	2.06	5.33	6.44	8.72	9.03	9.83	11.16	13.54	15.33	18.55	100.0
	1998	0.47	3.21	5.43	7.40	8.81	10.79	12.73	12.89	14.87	23.41	100.0
	1999	1.40	5.22	6.65	8.64	9.54	9.24	11.31	10.96	13.14	23.90	100.0
	2000	2.05	4.18	6.41	6.08	8.81	9.12	11.07	12.93	14.61	24.76	100.0

<표 II-5> 소득계층별 실질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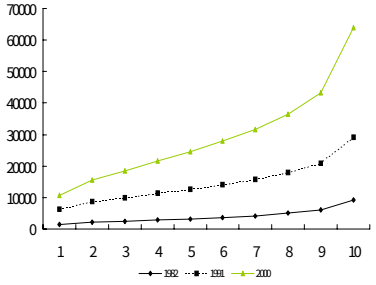
(단위: 천원)

총소득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82	2,888	4,016	4,741	5,493	6,164	6,985	8,066	9,509	11,501	17,577	7,690
1991	7,797	10,694	12,403	14,061	15,740	17,534	19,534	22,171	25,818	35,921	18,171
2000	8,759	12,720	15,286	17,751	20,295	22,939	26,017	29,970	35,640	52,653	24,213

주: 소비자물가지수(CPI, 1995년=100)로 할인한 실질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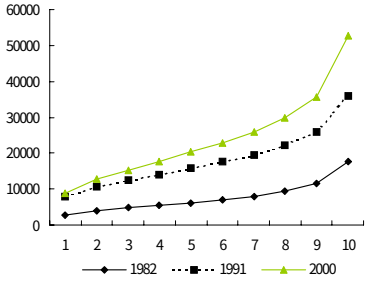
[그림 II-2] 소득계층별 총소득 (전체)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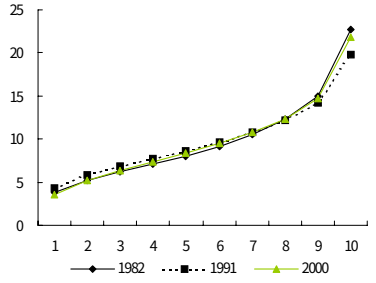
[그림 II-3] 소득계층별 실질총소득 (전체, 1995년 기준)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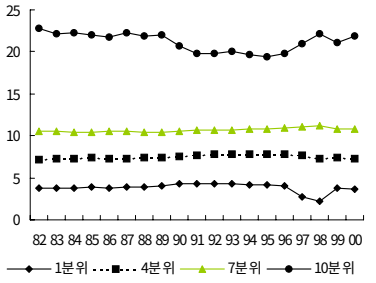
[그림 II-4] 소득계층별 총소득 점유비 (전체)

(단위: %)



[그림 II-5] 주요 분위별 소득점유비 추이(전체)

(단위: %)



위의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소득계층별 소득분배격차의 향방은 대체로 최고소득층(10분위)의 소득점

유비 변화 추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20]. 즉, 1~9분위의 경우에는 1982~2000년 동안 소득점유비가 다소 변화하기는 하였지만 이들 분위간의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1~9분위와 10분위간의 소득격차는 상대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가 전체적인 소득분배구조의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걸쳐 소득격차가 서서히 축소된 것은 10분위와 여타 분위간의 소득격차가 축소되는 추이를 보인 것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 기간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과실이 서서히 최고소득층으로부터 중산층과 저소득층으로 골고루 확산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1990년대 후반부터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역시 1~9분위와 10분위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데에서 주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는 IT산업과 일부의 금융산업에서 극히 소수의 최고소득자를 중심으로 급속히 고액 연봉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소비지출 분포의 변화 추이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분포의 특징으로는, 평균적으로 1982~1991년의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연평균 9.04%)이 1991~2000년(연평균 3.17%)보다 더 크며 이는 거의 소득계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작아지는 가운데, 1982~2000년 기간 동안 각 소득분위별 소비성향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분위에서 소비성향의 변동이 극심한 반면 여타의 소득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이 덜 심하다는 점, 9~10분위에

20) 지니계수의 경우에도 대체로 10분위의 소득점유비가 하락하던 시기에 감소하고 10분위의 소득점유비가 상승하던 시기에 지니계수가 함께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서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점유비의 변동이 심한 반면 나머지 분위에서는 그 변동이 상당히 작다는 점 등 모두 세 가지 점을 들 수 있다[21].

첫째, [그림 Ⅱ-6]과 [그림 Ⅱ-7]에서 보듯이 명목소비지출과 실질소비지출의 분포 추이는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총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지출의 경우에도 명목치로는 1980년대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1990년대보다 더 컸으나 실질치로 평가할 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들어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이 둔화된 이유는 크게 1990년대의 실질소득증가율이 1980년대보다 낮았던 것과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소비성향이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실질소득의 증가율이 하락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 증가율도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소비지출의 고도화·대중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신규수요보다는 대체수요로 바뀌는 경향이 종전보다 더 뚜렷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특징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지출 역시 증가하기는 하지만 소비지출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림 Ⅱ-8]에서 보듯이 소득계층별 평균소비성향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0년간의 평균소비성향 변화 추이를 보면 1982년에 소비성향이 0.76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경제위기 직전인 1995년에 0.6552로 저점에 도달한 이후 다시 소폭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0.6768에 이른다.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하였다가 최근 다시 소폭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모습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거의 모든

21)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과 다름이 없다.

소득계층에서 관찰되고 있다(<표 Ⅱ-6> 및 [그림 Ⅱ-9] 참조).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만약 동일 세율의 일반소비세가 모든 소비지출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과세되는 상황이라면 소비세 부담이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경우가 많고 자동차 등 고가의 사치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등의 개별소비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소비세 부담이 반드시 역진적이지는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계층별 소비성향의 변화 추이의 특징은 1분위에서 소비성향의 변화가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비지출 변동이 다른 분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데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1분위의 소득변동률이 다른 분위보다 매우 크다는 점에도 원인이 있다. 이는 경제위기 기간이었던 1997~1998년에 매우 극단적으로 잘 나타났다. 예를 들어 1997~1998년에는 급격히 경기가 악화되면서 고용여건이 불안해졌으며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아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1분위의 총소득이 1996년 수준의 50~7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에 1분위의 소비지출은 1996년 수준을 8.8~22.9% 초과함으로써 소비성향은 1을 크게 초과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1분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여타 분위에 비해 소득변화율이 높은 반면에 소비지출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즉, 최저소득층인 1분위의 소비지출은 상당 부분이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기초식료품 구입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일정 수준 이하로 소비를 감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성향의 변동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점차 진폭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지출 행위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넷째, 고소득층(예: 9~10분위)에서는 지난 20년간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지출 비중의 변동이 큰 편이었다. 이는 [그림 Ⅱ-10]에서 보듯이 10분위의 소비지출 점유비 변동이 다른 분위보다 다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10분위의 소비지출 비중이 변화함에 따라 1~8분위의 소비비중도 함께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2개 분위의 변화가 나머지 8개 분위에 골고루 배분되는 양상을 보여 나머지 1~8분위의 소비지출 비중의 변화는 희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에는 고소득층(9~10분위)의 소비지출 비중의 변동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경기 여건이나 주가,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반복되면서 고소득층에서 고가의 사치품이나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지출을 크게 변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모습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등락 추세는 사라지고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점유비가 점차 하락하는 양상으로 바뀌었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비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보다는 가전제품, 승용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지출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고가의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층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는 반대로 고소득층의 소비성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상승 추세가 두드러질 정도로 가시화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고소득층의 경우 이미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추가적인 수요창출 또는 소비성향 상승의 필요성이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산되었으며 또한 수요의 상당

<표 II-6>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분포

(단위: 천원, %)

전체		1	2	3	4	5	6	7	8	9	10	평균·계
소비 지출	1982	1,426	1,879	2,129	2,368	2,505	2,780	3,191	3,688	4,313	6,343	3,061
	1983	1,561	1,924	2,205	2,516	2,789	2,992	3,294	3,847	4,682	6,494	3,229
	1984	1,695	2,176	2,456	2,716	2,908	3,331	3,647	4,109	5,025	7,088	3,512
	1985	1,751	2,303	2,497	2,759	3,016	3,356	3,896	4,406	5,153	7,660	3,677
	1986	2,044	2,662	2,802	3,160	3,469	3,834	4,224	4,985	5,971	8,464	4,160
	1987	2,403	3,025	3,216	3,732	3,969	4,395	4,981	5,474	6,723	9,344	4,723
	1988	2,689	3,279	3,730	4,012	4,469	4,895	5,506	5,935	7,546	11,305	5,334
	1989	3,368	4,237	4,890	5,449	5,992	6,604	7,547	8,491	10,161	15,539	7,224
	1990	3,899	5,004	5,837	6,395	7,100	7,773	9,169	10,185	11,999	17,198	8,456
	1991	4,825	6,505	7,080	8,107	8,681	9,977	10,842	12,248	14,384	20,090	10,276
	1992	5,472	7,314	8,136	9,083	9,892	11,270	12,161	13,637	15,760	23,066	11,576
	1993	5,929	7,491	8,969	9,970	10,661	11,723	13,082	14,359	16,523	23,357	12,209
	1994	6,577	8,648	10,150	10,816	12,348	13,098	15,066	17,186	19,269	25,950	13,909
	1995	7,180	10,044	11,237	12,956	13,718	14,697	16,298	18,884	21,110	27,921	15,401
	1996	8,061	10,827	12,606	14,378	15,825	16,784	19,010	20,986	23,958	32,204	17,462
	1997	9,004	11,928	13,306	14,503	15,559	16,690	19,101	20,909	24,579	33,680	18,020
	1998	8,770	10,592	11,131	12,249	14,005	14,917	16,091	18,960	21,503	30,404	15,845
	1999	7,602	10,645	12,304	14,138	16,084	17,118	18,966	21,287	24,830	33,720	17,670
	2000	8,589	11,962	13,897	16,214	17,962	18,963	21,944	23,854	27,724	37,995	19,917
소비 성향	1982	94.03	89.11	85.53	82.11	77.40	75.79	75.35	73.87	71.43	68.74	75.81
	1983	93.74	83.40	80.38	79.36	77.21	73.88	71.45	71.00	71.44	66.60	73.62
	1984	92.47	84.30	79.24	76.31	72.32	73.01	71.16	69.04	69.27	65.11	71.93
	1985	89.81	83.96	76.67	74.78	73.64	73.21	74.79	72.77	69.73	69.21	73.54
	1986	92.90	84.24	74.65	74.44	72.01	70.70	69.11	70.19	69.19	66.78	71.61
	1987	91.35	83.14	75.69	75.43	71.20	70.07	69.50	65.60	66.18	61.47	69.33
	1988	87.00	76.22	72.81	68.95	68.39	67.17	66.82	62.49	65.54	65.59	67.86
	1989	83.79	75.93	74.23	72.84	71.78	70.77	71.75	69.94	69.06	69.48	71.51
	1990	76.18	71.76	71.93	70.13	69.73	68.23	72.07	70.00	69.66	69.21	70.32
	1991	76.49	75.19	70.56	71.27	68.17	70.33	68.61	68.29	68.87	69.13	69.90
	1992	76.20	73.10	69.70	69.06	67.71	69.12	67.23	67.18	65.16	68.62	68.47
	1993	77.94	70.73	72.27	70.97	68.13	67.98	68.40	66.99	66.63	65.22	68.30
	1994	76.15	71.08	71.28	67.33	68.74	65.25	67.16	67.92	64.80	63.52	67.05
	1995	73.04	72.26	69.41	70.87	67.07	64.53	63.99	65.44	62.79	61.02	65.52
	1996	75.82	71.54	70.92	70.75	68.95	65.60	66.39	64.97	63.91	61.87	66.44
	1997	135.7	86.86	76.20	70.80	66.77	63.94	64.88	62.68	62.63	60.57	67.72
	1998	165.2	101.6	78.72	71.34	69.90	65.47	61.81	63.08	59.86	57.97	67.72
	1999	77.85	75.36	72.51	72.84	72.94	68.94	67.46	65.56	64.76	61.50	67.72
	2000	80.68	77.38	74.81	75.16	72.83	68.02	69.40	65.49	64.01	59.38	67.68
구성비	1982	4.66	6.14	6.96	7.74	8.19	9.09	10.43	12.05	14.10	20.65	100.0
	1983	4.84	5.96	6.84	7.80	8.64	9.27	10.21	11.93	14.46	20.05	100.0
	1984	4.84	6.22	7.02	7.76	8.26	9.46	10.36	11.67	14.28	20.14	100.0
	1985	4.77	6.27	6.80	7.52	8.22	9.14	10.61	11.94	13.97	20.76	100.0
	1986	4.93	6.42	6.73	7.59	8.33	9.21	10.14	11.97	14.34	20.33	100.0
	1987	5.10	6.42	6.83	7.92	8.42	9.28	10.52	11.56	14.20	19.74	100.0
	1988	5.05	6.16	7.01	7.51	8.37	9.17	10.31	11.11	14.13	21.17	100.0
	1989	4.67	5.87	6.77	7.54	8.29	9.14	10.46	11.75	14.08	21.42	100.0
	1990	4.61	5.91	6.91	7.57	8.42	9.21	10.81	12.02	14.21	20.34	100.0
	1991	4.71	6.32	6.89	7.89	8.43	9.69	10.54	11.92	14.00	19.61	100.0
	1992	4.73	6.33	7.04	7.84	8.54	9.73	10.52	11.77	13.62	19.88	100.0
	1993	4.86	6.13	7.34	8.16	8.73	9.60	10.71	11.75	13.54	19.17	100.0
	1994	4.73	6.22	7.29	7.78	8.90	9.41	10.84	12.37	13.81	18.66	100.0
	1995	4.66	6.53	7.31	8.43	8.90	9.56	10.57	12.26	13.67	18.12	100.0
	1996	4.61	6.20	7.22	8.25	9.08	9.61	10.87	12.01	13.72	18.43	100.0
	1997	5.50	6.61	7.38	8.05	8.64	9.26	10.59	11.60	13.62	18.75	100.0
	1998	5.53	6.71	7.03	7.73	8.85	9.45	10.17	11.99	13.58	18.98	100.0
	1999	4.31	6.02	6.97	8.01	9.11	9.68	10.73	12.04	14.04	19.11	100.0
	2000	4.30	6.01	6.98	8.13	9.01	9.52	11.02	11.96	13.91	19.13	100.0

<표 Ⅱ-6>의 계속

(단위: 천원, %)

근로자		1	2	3	4	5	6	7	8	9	10	평균·계
소비 지출	1982	1,430	1,892	2,135	2,359	2,476	2,760	3,128	3,678	4,252	5,951	2,942
	1983	1,571	1,920	2,210	2,485	2,762	2,885	3,222	3,821	4,654	6,280	3,094
	1984	1,701	2,175	2,470	2,674	2,927	3,227	3,537	4,089	5,022	6,612	3,342
	1985	1,760	2,305	2,466	2,688	3,012	3,275	3,867	4,335	5,028	7,351	3,524
	1986	2,018	2,643	2,714	3,102	3,388	3,725	4,166	4,944	5,805	8,039	3,985
	1987	2,415	3,026	3,158	3,599	3,919	4,303	4,866	5,363	6,550	8,761	4,496
	1988	2,700	3,279	3,713	3,942	4,391	4,752	5,267	5,825	7,463	10,872	5,055
	1989	3,346	4,177	4,859	5,410	5,927	6,455	7,416	8,322	9,865	14,309	6,824
	1990	3,929	4,939	5,833	6,328	7,048	7,624	9,082	9,914	11,997	16,025	8,046
	1991	4,890	6,526	6,921	8,029	8,483	9,681	10,780	11,895	14,002	18,752	9,758
	1992	5,538	7,252	8,124	9,099	9,652	11,050	11,888	13,767	14,784	21,393	11,034
	1993	5,905	7,445	8,843	9,753	10,608	11,650	12,942	13,928	16,199	21,704	11,639
	1994	6,616	8,686	10,160	10,785	12,372	12,861	14,804	16,842	18,962	24,287	13,370
	1995	7,169	10,193	11,253	12,810	13,428	14,406	16,297	18,228	20,645	25,504	14,767
	1996	8,104	10,893	12,459	14,159	15,960	16,170	18,373	20,039	23,232	30,328	16,790
	1997	10,108	12,556	14,112	14,674	15,225	16,381	18,603	20,537	24,348	30,033	17,225
	1998	8,887	11,105	11,310	12,397	14,129	14,871	15,489	18,300	20,874	27,402	15,008
	1999	7,556	10,757	12,207	14,256	16,000	17,356	19,007	20,385	24,423	30,908	16,921
	2000	8,445	11,875	13,980	16,617	18,217	18,979	22,044	23,955	26,912	34,964	19,038
소비 성향	1982	94.97	89.48	85.95	81.86	76.54	75.18	73.78	73.51	70.34	65.95	75.20
	1983	95.55	83.28	80.59	78.31	76.44	71.15	69.83	70.99	71.00	63.79	72.89
	1984	93.53	84.72	79.63	75.08	72.83	70.87	68.98	68.57	69.20	61.43	71.17
	1985	90.83	83.80	76.00	72.76	73.50	71.33	74.22	71.64	68.40	66.14	72.36
	1986	93.54	84.04	72.31	73.20	70.26	68.81	68.01	69.60	67.74	63.73	70.24
	1987	91.27	83.24	74.55	72.70	70.32	68.70	67.84	64.35	65.15	58.85	68.19
	1988	88.45	76.56	72.77	67.76	67.27	65.29	64.01	61.37	64.68	64.01	67.04
	1989	84.04	74.78	73.77	72.28	71.09	69.16	70.54	68.80	67.11	65.34	69.98
	1990	77.65	70.86	72.00	69.51	69.16	66.99	71.39	68.17	69.74	64.55	69.00
	1991	77.96	75.65	69.12	70.53	66.69	68.18	68.27	66.28	67.12	65.26	68.37
	1992	77.61	72.61	69.76	69.29	66.11	67.89	65.78	67.53	61.04	64.50	66.95
	1993	78.40	70.17	71.34	69.54	67.85	67.54	67.61	65.06	65.29	61.22	66.96
	1994	77.27	71.24	71.34	67.12	68.86	64.10	65.95	66.57	63.96	59.86	66.05
	1995	74.42	73.33	69.62	69.99	65.65	63.36	64.02	63.14	61.41	56.27	64.14
	1996	76.65	72.05	70.20	69.75	69.44	63.23	64.08	62.18	62.18	58.68	64.82
	1997	142.2	92.12	80.79	71.76	65.52	62.64	63.11	61.45	61.76	55.21	67.85
	1998	170.0	107.8	79.84	72.09	70.65	64.94	59.66	60.74	58.08	52.12	67.84
	1999	77.89	76.15	72.10	73.48	72.59	69.87	67.49	62.93	63.59	56.07	66.39
	2000	80.47	76.68	75.45	76.99	73.78	67.90	69.54	65.89	61.99	53.51	66.84
구성비	1982	5.25	6.98	7.97	8.33	8.14	8.85	10.47	12.31	12.76	18.95	100.0
	1983	5.60	6.81	7.30	8.58	9.49	8.99	9.86	11.33	13.89	18.15	100.0
	1984	5.87	7.66	8.23	8.15	8.29	9.68	9.18	10.90	13.15	18.89	100.0
	1985	5.63	7.06	7.41	8.02	8.93	8.99	9.61	10.86	13.90	19.59	100.0
	1986	5.53	7.41	6.78	8.10	8.95	8.64	10.00	11.08	13.94	19.56	100.0
	1987	5.86	7.00	7.53	8.38	8.73	10.14	9.94	11.72	12.16	18.52	100.0
	1988	6.13	6.89	7.61	8.33	9.05	9.59	9.75	10.36	13.51	18.77	100.0
	1989	5.74	6.69	7.42	7.81	8.66	8.87	10.41	12.16	13.14	19.10	100.0
	1990	5.66	6.61	7.46	8.20	9.06	9.21	10.78	11.24	13.24	18.54	100.0
	1991	5.84	7.04	7.32	8.61	8.95	9.77	10.23	11.59	12.31	18.34	100.0
	1992	5.62	7.38	7.39	8.53	8.19	9.36	10.69	12.65	12.41	17.80	100.0
	1993	5.86	6.74	7.75	8.78	9.23	9.70	10.38	11.48	13.01	17.09	100.0
	1994	5.94	6.45	7.84	8.17	9.27	9.65	10.19	12.06	13.17	17.25	100.0
	1995	5.51	7.20	8.06	8.16	8.86	9.28	11.84	11.53	13.28	16.29	100.0
	1996	5.62	6.83	7.09	8.50	9.00	9.02	10.24	11.95	14.21	17.53	100.0
	1997	8.01	7.73	7.49	8.84	8.30	8.84	9.91	11.65	13.63	15.59	100.0
	1998	8.53	8.36	7.57	7.75	8.77	8.74	8.91	11.51	13.41	16.44	100.0
	1999	5.93	6.32	6.98	7.50	8.59	10.16	10.64	12.56	14.89	16.43	100.0
	2000	5.46	6.76	7.06	9.29	8.97	9.84	10.99	11.86	13.71	16.07	100.0

<표 II-6>의 계속

(단위: 천원, %)

자영업자		1	2	3	4	5	6	7	8	9	10	평균·계
소비 지출	1982	1,412	1,838	2,109	2,391	2,564	2,817	3,329	3,710	4,412	7,094	3,336
	1983	1,528	1,936	2,192	2,611	2,867	3,216	3,437	3,895	4,735	6,862	3,548
	1984	1,668	2,180	2,400	2,828	2,867	3,597	3,829	4,144	5,030	8,128	3,943
	1985	1,707	2,297	2,607	3,003	3,027	3,556	3,948	4,540	5,476	8,362	4,104
	1986	2,141	2,746	3,038	3,346	3,741	4,063	4,358	5,062	6,357	9,500	4,633
	1987	2,352	3,023	3,443	4,196	4,111	4,740	5,229	5,777	7,010	10,757	5,378
	1988	2,632	3,280	3,782	4,265	4,722	5,319	6,027	6,146	7,713	12,074	6,097
	1989	3,476	4,446	4,978	5,539	6,150	6,900	7,824	8,900	10,699	17,821	8,206
	1990	3,742	5,240	5,850	6,605	7,257	8,130	9,369	10,720	12,004	19,649	9,545
	1991	4,499	6,442	7,528	8,343	9,245	10,690	10,966	13,001	14,994	22,958	11,588
	1992	5,223	7,553	8,164	9,038	10,363	11,699	12,800	13,307	17,609	26,177	12,883
	1993	6,047	7,636	9,322	10,643	10,806	11,892	13,371	15,331	17,192	26,568	13,689
	1994	6,365	8,561	10,122	10.895	12,292	13,671	15,549	17,900	19,857	29,319	15,198
	1995	7,217	9,699	11,197	13,203	14,265	15,207	16,301	19,981	21,932	32,083	16,693
	1996	7,920	10,679	12,855	14,809	15,603	17,778	20,041	22,825	25,482	35,540	18,763
	1997	7,916	10,423	12,056	14,124	16,112	17,189	19,882	21,599	24,994	38,985	19,596
	1998	7,135	9,207	10,798	12,019	13,817	14,978	16,851	19,992	22,547	34,714	17,385
	1999	7,912	10,433	12,474	13,971	16,208	16,673	18,900	23,259	25,690	37,774	19,107
	2000	9,168	12,168	13,760	15,307	17,564	18,933	21,784	23,694	29,111	41,970	21,552
소비 성향	1982	91.22	87.92	84.16	82.75	79.17	76.99	78.81	74.68	73.19	73.74	77.10
	1983	87.84	83.80	79.86	82.55	79.48	79.62	74.67	71.03	72.26	71.52	75.20
	1984	87.72	82.13	77.71	79.60	71.24	78.48	74.76	69.88	69.38	72.84	73.62
	1985	85.03	84.56	78.99	81.71	74.10	77.86	75.83	74.89	73.10	76.27	76.55
	1986	90.65	85.10	80.88	78.34	77.86	74.61	71.69	71.31	72.49	74.09	75.03
	1987	91.72	82.80	80.05	84.91	73.75	75.14	73.12	68.99	67.83	67.40	72.26
	1988	80.07	75.06	72.94	73.25	71.95	72.72	72.93	64.63	67.31	68.29	69.80
	1989	82.63	79.90	75.54	74.15	73.48	74.01	74.32	72.69	72.59	76.73	74.83
	1990	68.87	75.00	71.72	72.03	71.42	71.19	73.65	73.60	69.51	78.95	73.46
	1991	69.42	73.79	74.58	73.49	72.37	75.54	69.27	72.59	71.65	77.15	73.41
	1992	71.05	74.97	69.58	68.45	70.84	71.50	70.61	66.28	73.01	76.00	71.84
	1993	75.80	72.52	74.86	75.38	68.89	68.99	70.03	71.33	69.42	72.77	71.45
	1994	70.31	70.71	71.14	67.83	68.45	68.02	69.39	70.72	66.38	70.80	69.27
	1995	68.99	69.80	68.90	72.36	69.76	66.57	63.90	69.29	65.24	68.99	68.15
	1996	73.12	70.38	72.15	72.70	68.15	69.44	70.15	70.37	67.48	67.45	69.43
	1997	86.46	74.57	69.06	68.69	68.83	66.05	67.65	64.97	64.21	67.97	67.48
	1998	111.0	85.66	76.63	70.17	68.77	66.17	64.52	66.77	62.82	66.41	67.53
	1999	77.61	73.85	73.23	71.95	73.47	67.19	67.41	71.29	67.25	69.43	70.11
	2000	81.51	79.07	73.75	71.02	71.33	68.23	69.18	64.86	67.48	67.46	69.12
구성비	1982	3.45	4.42	4.90	6.54	8.29	9.57	10.35	11.54	16.83	24.11	100.0
	1983	3.26	4.21	5.87	6.18	6.90	9.86	10.94	13.16	15.63	23.98	100.0
	1984	2.64	3.12	4.41	6.93	8.19	8.99	12.90	13.32	16.68	22.81	100.0
	1985	2.69	4.39	5.35	6.31	6.51	9.51	13.01	14.53	14.12	23.57	100.0
	1986	3.54	4.12	6.61	6.41	6.88	10.52	10.47	14.06	15.27	22.11	100.0
	1987	3.25	5.02	5.12	6.82	7.67	7.21	11.93	11.18	19.14	22.68	100.0
	1988	2.62	4.51	5.65	5.66	6.83	8.19	11.57	12.82	15.54	26.61	100.0
	1989	2.48	4.20	5.45	7.00	7.54	9.68	10.58	10.92	15.99	26.17	100.0
	1990	2.26	4.34	5.66	6.14	6.99	9.21	10.87	13.78	16.38	24.36	100.0
	1991	2.30	4.77	5.99	6.36	7.30	9.53	11.19	12.64	17.61	22.31	100.0
	1992	2.90	4.14	6.31	6.42	9.27	10.51	10.18	9.95	16.13	24.20	100.0
	1993	2.67	4.77	6.44	6.81	7.63	9.37	11.44	12.36	14.73	23.76	100.0
	1994	2.17	5.75	6.12	6.96	8.12	8.91	12.20	13.00	15.16	21.61	100.0
	1995	3.13	5.32	5.96	8.91	8.97	10.06	8.28	13.59	14.36	21.42	100.0
	1996	2.86	5.11	7.44	7.82	9.21	10.62	11.96	12.12	12.86	19.99	100.0
	1997	1.12	4.66	7.19	6.68	9.24	9.98	11.77	11.52	13.60	24.24	100.0
	1998	0.78	4.08	6.16	7.69	8.97	10.57	12.17	12.75	13.83	23.02	100.0
	1999	1.55	5.50	6.94	8.87	9.99	8.85	10.87	11.15	12.61	23.67	100.0
	2000	2.41	4.78	6.84	6.24	9.09	9.00	11.08	12.13	14.26	24.16	100.0

<표 Ⅱ-7> 소득계층별 실질소비지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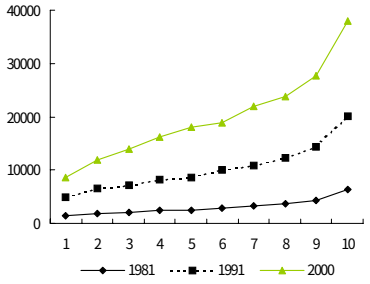
(단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평균
1982	2,716	3,578	4,055	4,510	4,771	5,294	6,078	7,025	8,215	12,082	5,830
1991	5,964	8,041	8,751	10,021	10,731	12,332	13,402	15,140	17,780	24,833	12,702
2000	7,067	9,843	11,435	13,342	14,780	15,604	18,056	19,628	22,812	31,264	16,389

주 : 소비자물가지수(CPI, 1995년=100)로 할인한 실질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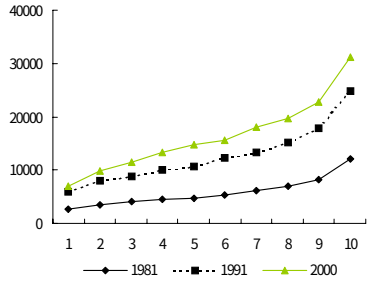
[그림 Ⅱ-6]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전체)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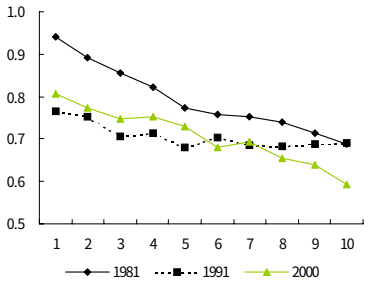
[그림 Ⅱ-7] 소득계층별 실질소비지출(전체, 1995년 기준)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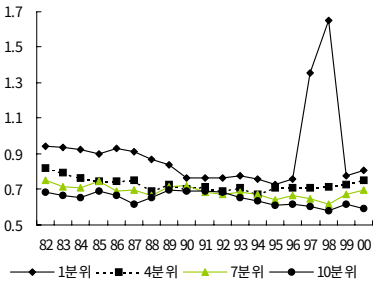
[그림 Ⅱ-8] 소득계층별 평균 소비성향(전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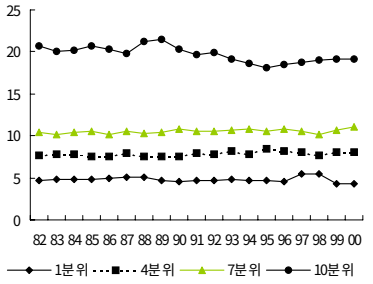
[그림 Ⅱ-9] 주요 분위별 평균소비성향 추이(전체)

(단위: %)



[그림 II-10] 주요 분위별 소비지출 점유비 추이(전체)

(단위: %)



부분이 신규수요로 채워지면서 추가적인 소비지출로 인해 소비성향이 상승 추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인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미 내구소비재의 보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수요의 대부분이 대체수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고소득층에서는 소비성향이 쉽사리 상승 추세로 반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와 소득분배의 결정요인

본장에서는 지난 20년 동안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추정해보고 소득분배의 결정요인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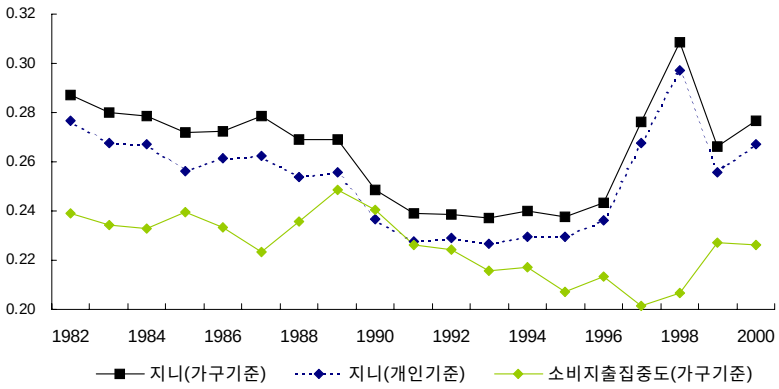
1. 우리나라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

가.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

1982~2000년 동안 지니계수(가구기준)는 평균적으로 0.25 내외의 수치를 보이면서 1990년대 중반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다. 1982년의 지니계수는 0.287이었으며 1988년에는 0.269, 1993년에는 0.237로 하락하여 지난 2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림 Ⅲ-1]에서 보듯이 1982년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 지니계수의 추세선이 陰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995년 이후에는 지니계수가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다. 특히 1997년과 1998년에는 외환위기에 뒤이은 경제위기로 인해 계층별 소득격차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지니계수도 급상승하였다. 1999년에는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면서 계층별 소득격차도 1998년에 비해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성장 측면에서 볼 때 1999년에는 극심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였던 것처럼, 일면 소득분배 측면에서도 위기상황에서 벌어졌던 극단적인 소득격차의 확대 추세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Ⅲ-1] 지니계수 및 소비지출 집중도 추이



한편 이는 어디까지나 1998년의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일시적으로 급격히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던 것에 대한 반사작용에 의한 기술적 하락으로 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전술하였듯이 1995년 이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Ⅲ-1]에서 보듯이 1998년의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다면 1995년 이래 지니계수의 추세선이 正(+)의 기울기를 가지면서 거의 일직선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최근에 소득분배 격차가 서서히 확대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나. 변동요인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지니계수가 하락한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이다. 즉, 경제개발 초기에 소수의 고소득층에 집중되었던 경제발전의 혜택이 점차 저소득층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상대적인 계층별 소득격차가 축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선진경제로 발돋움하려는 과정에 진입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95년 이래 지니계수가 점진적인 상승 추세

<표 Ⅲ-1> 지니계수(총소득 기준)

	가구기준				개인기준				통계청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	근로자		자영업자	통계청 A	통계청 B
		무직 포함	취업 근로자			무직 포함	취업 근로자			
1982	0.28703	0.28545	0.28041	0.28732	0.27658	0.27551	0.27139	0.27817	-	-
1983	0.27977	0.28202	0.27634	0.27120	0.26749	0.26952	0.26563	0.26233	-	-
1984	0.27875	0.28568	0.28253	0.25689	0.26726	0.27488	0.27217	0.24685	-	-
1985	0.27200	0.27759	0.27130	0.25439	0.25618	0.26358	0.25924	0.23677	-	0.3449
1986	0.27256	0.27751	0.27670	0.25782	0.26160	0.26682	0.26705	0.24820	-	-
1987	0.27879	0.27661	0.27184	0.27917	0.26252	0.26052	0.25859	0.26538	-	-
1988	0.26927	0.26782	0.26395	0.26536	0.25364	0.25328	0.25053	0.25027	-	0.3355
1989	0.26890	0.26873	0.26173	0.26482	0.25578	0.25596	0.24856	0.25352	0.3039	-
1990	0.24851	0.25344	0.24587	0.23322	0.23658	0.24048	0.23578	0.22624	0.2948	-
1991	0.23885	0.24366	0.23892	0.22589	0.22757	0.23310	0.22822	0.21481	0.2869	-
1992	0.23873	0.24107	0.23695	0.23210	0.22904	0.23192	0.23016	0.22249	0.2836	-
1993	0.23695	0.23929	0.23324	0.22832	0.22665	0.22923	0.22470	0.22000	0.2817	0.3097
1994	0.23988	0.24492	0.23661	0.22811	0.22963	0.23613	0.23211	0.21580	0.2845	-
1995	0.23743	0.24036	0.23128	0.23002	0.22976	0.23392	0.22809	0.22104	0.2837	-
1996	0.24342	0.24864	0.24134	0.23246	0.23624	0.24109	0.23628	0.22643	0.2907	0.2954
1997	0.27637	0.29048	0.23787	0.24519	0.26761	0.28204	0.23465	0.23720	0.2830	-
1998	0.30875	0.34141	0.25613	0.25187	0.29696	0.32209	0.26589	0.26166	0.3157	-
1999	0.26609	0.27571	0.25647	0.23847	0.25585	0.26298	0.25152	0.24135	0.3204	-
2000	0.27658	0.29097	0.27583	0.25605	0.26736	0.27298	0.26520	0.25534	0.317	-

주: 1. 개인기준과 가구기준은 도시가계조사 원시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의 지니계수 추정치이고 통계청 A는 도시가계조사자료의 (취업)근로자가구에 대한 10분위 소득점유비를 기초로 산출한 추정치, 통계청 B 중 1985년, 1988년, 1993년은 사회통계조사, 1996년은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 나타난 전국의 10분위 소득점유비를 기초로 한 추정치임.

2. 개인기준의 경우 균등화탄력성(equivalent elasticity scale)은 0.5로 가정하였음.

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990년대 후반에는 경제위기와 같이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해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그보다는 경제구조 및 체질의 변화에 기인하는 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에서는 복지제도의 완비,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 및 사양산업의 도태 등과 같이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라 산업간 성장률이 크게 차이를 나타내는 등, 세전 및 사회이전소득 이전단계의 시장소득단계에서 소득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우리 경제가 점차 선진경제에 접근하면서 소득분배구조의 양상도 선진국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해 경제발전 초기에 나타났던 계층별 소득격차의 확대는 특정 산업부문 위주의 불균형 성장 정책에 의거하여 산업구조의 양극화가 진행됨으로써 인위적으로 분배격차가 확대되었던 측면이 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최근의 소득격차 확대 추세는 정보 관련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라는 이중구조가 자연발생적으로 확대되는 등 선진경제로의 도약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정보화 사회가 급진전되면서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도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 요인을 찾을 수 있다[22].

그 밖에 이혼율 상승, 노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비의 지속적 증가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의 변화도 최근의 소득격차 확대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구유형별로도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는 전체 가구의 경우와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최근의 변화 추이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1999년의 경우 무직가구를 포함한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 모두 전체 가구의 경우와 같은 방향(감소)으로 지니계수가 변화하였으나, 무직가구를 제외한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1999년에도 지니계수의 값이 다소 상승

22) 소득분배격차의 요인에 대해서는 제Ⅳ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취업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1999년에는 증시 활황과 벤처 활성화 등을 통해 고액연봉자들이 속출한 반면에, 취업근로자가구 중 저소득층은 대부분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취업 근로자가구간의 소득격차는 다소 확대되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취업근로자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분배격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가구 전체로는 소득격차가 축소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IT산업의 활성화와 정보화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 증시 활황,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등과 같은 선진국형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혁신에 성공한 소수의 진취적 개척자에 의해 격차가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침체가 극심하고 실업률도 가장 높았던 1998년에 비해 1999년에는 경기의 신속한 회복으로 실업률이 다소 하락하면서 시장소득 격차가 점차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통한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더욱 크게 확대되었다(<표 Ⅲ-2> 참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1999년에 분배격차가 다소 축소된 것은 당연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사회이전지출의 주된 대상이 실업가구를 비롯한 무직가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분배격차를 축소하는 데 일조를 하였음은 물론이다.

<표 Ⅲ-2> 실업급여 지급현황

(단위: 천원)

	1996	1997	1998	1999	2000
금액	10,381,811	77,863,819	785,150,786	870,786,271	470,792,743

자료: www.work.go.kr
『고용보험동향』,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각 연도.
『고용보험통계월보』, 통계청, 2000.12.

2000년에도 1999년에 이어 비교적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업률이 6.3%(1999년)에서 4.1%로 2.1%p 하락하였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총액 역시 1999년의 8,708억원에서 2000년에는 4,708억원으로 대폭 감소(-4천억원)하였다. 그러나 2000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실업률이 다시 상승추세로 반전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0년에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인 소득계층별 분배격차도 확대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기준) 지니계수만 보더라도 1999년의 0.26609에서 0.27658로 0.01049p(또는 지니 point)가 상승하였다. 기본적으로 지니계수의 상승은 1990년대 중반 이래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00년 하반기부터의 경기악화도 지니계수의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지속적인 산업간 발전속도의 차이, 특히 경제위기 이후의 급격한 이혼율 상승과 노령화의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 비중의 급격한 상승 등과 같은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업근로자가구의 경우 2000년에 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경기악화에 따른 사양산업과 첨단산업간의 이중적인 산업구조의 격차 확대에 따른 취업자 내에서 하층부를 중심으로 한 임금격차의 확대와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상층부 확장에 의한 임금격차의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지출 집중도는 지니계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계소비성향 체감의 법칙, 즉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이 낮아짐에 따라 소득분포에 비해 소비지출의 계층별 격차가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대 중반까지 주기적으로 완만하게 등락을 반복하다가 1990년대 말부터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 최근 소득격차가 완만하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소비지출 격차도 서서히 확대되면서 소비지

출 집중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Ⅲ-1] 참조).

2.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일고

가. 조세집중도

Sung(2001)에 따르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절대수준이 상당히 작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 20년간 소득세와 소비세 등 개인이 부담하는 세목의 세부담은 소득분배를 보다 균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논함에 있어 조세집중도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세부담의 세부담 집중지수의 하나로서 Khetan and Poddar (1976)와 Suits(1977)에 의해 개발된 KPS 지수를 이용하면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의 부호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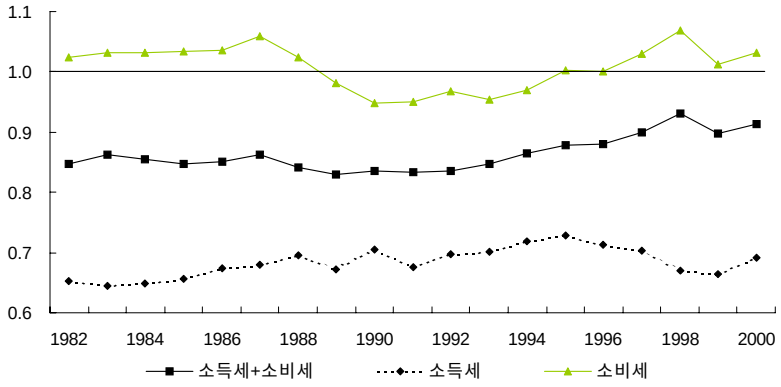
어떤 세목의 KPS 지수가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해당 세목의 세부담은 누진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세목은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만약 KPS 지수가 1보다 큰 값을 가지면 세부담이 역진적이며 負(-)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KPS 지수가 1이면 세부담이 비례적임을 의미하며 소득재분배 효과는 없다.

[그림 Ⅲ-2]에서 보듯이 소득세의 경우에는 KPS의 값이 대체로 0.7 정도로 세부담이 누진적인 만큼 지난 20년간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소비세의 경우에는 1989~1994년 기간을 제외하고 KPS의 값이 1보다 큰 값을 가짐으로써 세부담이 다소 역진적이며 負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Sung(2001)에 의하면 1998년에는 소득세 집중도가 0.59769로

1985년에 0.58153을 기록한 이후 1999년까지의 기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또한 조세의 누진도(또는 역진도)를 계측하는 KPS 지수가 소득세의 경우 1998년에는 0.66985로 추정되어 1991년에 0.67510을 기록한 이래 1999년의 0.66394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상대적인 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Ⅲ-2] 참조).

[그림 Ⅲ-2] KPS 지수의 변화 추이



1998년에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실업률이 2.6%에서 6.8%로 급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증대되면서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는 소득세의 조세집중도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의 소득세 과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비록 1998년에 소득세의 누진도가 크게 높아져 비(+)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소득세 부담액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일 뿐, 소득세 총액에 대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로 인해 1998년에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득이 12.1% 감소한 반면 소득세 부담은 이보다 크게 높은 20.4%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것이 소득세 과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소득세 비중의 국제비교

개인소득세의 GDP 대비 비중은 우리나라가 4% 정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반면에 일본은 5~6%, 나머지 선진국의 경우에는 최소 10% 이상으로 소득세 비중이 매우 높다. 누진세율 체계를 지닌 소득세의 세부담은 일반적으로 누진적이기 때문에 대체로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지닌다. 또한 소득세의 세수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재분배의 강도 또한 강화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조세집중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조세집중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공제 수준으로 인해 면세자 비율이 상당히 높고 반대로 과세자 비율이 낮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세 부담의 집중도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커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은 상당히 낮다. 따라서 비록 소득세 부담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지만 전체적인 소득세 부담 비중이 낮기 때문에 소득세 전체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II-3> 실업률,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비 비중의 국제비교

(단위: %)

	실업률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 비중		
	1996	1997	1998	1996	1997	1998	1996	1997	1998
캐 나 다	9.7	9.2	8.3	13.4	13.9	14.1	5.0	4.9	5.1
미 국	5.4	4.9	4.5	10.5	11.0	11.7	6.9	6.8	6.9
호 주	8.5	8.6	8.0	12.4	12.5	13.0	-	-	-
일 본	3.4	3.4	4.1	5.7	5.9	5.3	10.3	10.6	10.9
영 국	8.2	7.1	6.3	9.1	8.8	10.2	6.1	6.1	6.5
뉴질랜드	6.1	6.6	7.5	15.5	15.7	14.7	-	-	-
한 국	2.0	2.6	6.8	3.9	3.6	4.2	1.8	1.9	2.3
벨 기 에	13.1	13.1	12.4	14.3	14.3	14.1	14.7	14.7	14.5
덴 마 크	8.8	7.9	6.6	26.6	26.4	25.7	1.6	1.6	1.6
핀 란 드	14.4	12.5	11.3	17.1	15.4	14.9	12.2	11.6	11.6
프 랑 스	12.3	12.4	11.8	5.3	5.6	7.8	18.9	18.4	16.4
독 일	8.8	9.8	9.7	9.3	8.9	9.3	15.0	15.2	14.9
이탈리아	12.1	12.3	-	10.7	11.2	10.7	14.6	14.8	12.8
네덜란드	6.6	5.5	4.1	7.3	6.5	6.2	22.9	17.2	16.4
노르웨이	4.9	4.1	-	10.7	10.9	11.9	9.5	9.5	10.2
스 웨 덴	8.0	8.0	6.5	17.6	18.0	18.2	14.9	15.1	14.9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9, 2000.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0.

3. 소득분배 격차의 요인 분석

가. 소득분배 격차의 일반적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OECD 국가의 경우 세전 및 이전소득 합산 전 소득단계, 즉 시장소득단계에서의 불평등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또한 시장소득에 이전소

득을 합산하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차감한 소득단계, 즉 가처분소득단계에서의 불평등지수의 값은 크게 하락하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하락률이 상당히 낮다는 점이 두 번째 특징이다.

먼저 첫 번째 특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OECD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으로서 실업률이 우리보다 상당히 높다는 점에 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실업자의 상당 부분은 필연적으로 저소득층에 속하게 된다. 따라서 실업률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높은 OECD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이 점유하는 시장소득(세전 및 이전소득전 소득)의 점유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는 선진국에 비해 실업률이 낮은 편이다. 물론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997년에는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저소득층의 세전소득 점유비가 크게 높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세전지니계수가 외국에 비해 필연적으로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표 Ⅲ-3> 참조).

그 밖에 선진국에서는 금융시장 종사자 중 펀드매니저, 의사,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고액연봉자가 상당히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르러 비로소 고액연봉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곧 선진국의 경우 중산층의 경우에는 소득점유비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약 1/3 정도이지만, 고소득층의 소득점유비는 선진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점유비가 우리보다 크게 낮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즉, 선진국에서는 하위 30% 계층의 시장소득 점유비가 대부분 5~14%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는 13~17%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다. 반대로 상위 30%의 고소득층에서는 선진국의 시장소득 점유비가 51~60% 정도에 이르지만 우리나라는 46~51% 정도이다. 바로 이러한 것이

세전 및 이전소득전 지니계수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각종 불평등지수의 값이 선진국보다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다(<표 Ⅲ-4> 참조).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근에는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빨리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소득층의 소득점유비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빠른 소득증가에 따라 고소득층의 소득비중이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선진국의 소득분배구조에 접근하는 듯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좀더 긴 시간을 두고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1980년대를 전후하여 그 이후의 기간 동안 미국, 영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소득재분배 이전단계, 즉 시장소득단계에서의 소득분배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연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 요인에는 경제위기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는 만큼 명확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더 긴 시간을 두고 계속 관찰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특징과 관련해서는 먼저 여타 OECD 선진국의 경우 개인소득세나 사회보장비의 GDP 지출비중이 상당히 높아 대체로 10% 내외의 수치를 보이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중이 1997년 현재 각각 3.6%와 1.9%로 매우 낮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차감 후에 지니계수를 비롯한 각종 불평등지수의 값이 크게 변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인 변화율 및 변화의 절대수준이 작을 수밖에 없다. 그 밖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세부담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점도 불평등지수가 적게 변화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그러나 우

<표 Ⅲ-4> 소득계층별 점유비: 시장소득(Market Income)

(단위: %)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호 주	1993/1994	4.7	33.6	61.7
벨 기 에	1995	5.9	31.8	62.4
캐 나 다	1994	6.0	33.4	60.6
덴 마 크	1994	7.8	37.6	54.6
핀 란 드	1995	10.2	35.0	54.8
독 일	1994	8.0	34.2	57.8
이탈리아	1993	8.1	30.6	61.3
일 본	1994	13.7	35.1	51.2
네덜란드	1994	8.4	36.3	55.4
노르웨이	1995	8.8	37.0	54.2
스 웨 덴	1995	8.0	35.0	57.0
영 국	1995	7.6	32.8	59.6
한 국	1995	16.9	37.1	45.9
	1996	16.5	37.1	46.4
	1997	14.4	37.4	48.3
	1998	12.6	36.8	50.5
	1999	15.5	36.2	48.3
	2000	15.0	35.9	49.1

주: 균등규모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 = 0.5
자료: Burniaux et al(1998).

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 비중이 선진국보다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지 소득세제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더 과중하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시장소득에 이전소득을 합산하고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등을 차감하면 선진국의 지니계수 등 불평등지수의 값은 크게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수준과 비슷해진다. 이는 소득계층별 가처

분소득 비중을 비교해 볼 때 명백해진다. 세전 및 이전소득 차감 전에는 선진국에서의 저소득층의 소득점유비가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았지만 세후 및 이전소득 합산 후에는 저소득층의 소득점유비가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소득분배구조가 상당히 균등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더라도 각종 불평등지수의 값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추측된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 시장소득단계에서부터 소득분배상태가 더 균등하기 때문에 동일한 규모의 사회이전지출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을 확대한다고 할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원천적인 분배격차가 매우 큰 선진국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반면, 원천적으로 소득분배가 덜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작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 크기를 논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회보장제도의 절대규모 또는 GDP 대비 비중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사회보장제도 적용전 단계의 원천적인 소득분배 상태, 즉 시장소득단계에서의 소득분배구조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 자체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각종 소득재분배 정책의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는 이미 재분배전 시장소득단계의 분배상태가 상대적으로 보다 균등한 만큼 더더욱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선진국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량실업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저소득층의 소득비중이 매우 작다고 한다면 비록 지금과 동일한 수준의 사회이전지출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5> 소득계층별 점유비: 직접세(소득세, 사회보장 기여금 등)

(단위: %)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호 주	1993/1994	1.9	27.8	70.4
벨 기 에	1995	2.8	30.1	67.2
캐 나 다	1994	2.9	29.2	67.9
덴 마 크	1994	12.7	36.5	50.8
핀 란 드	1995	9.5	32.9	57.6
독 일	1994	5.3	31.7	62.9
이탈리아	1993	5.8	29.8	64.4
일 본	1994	11.3	29.7	59.0
네덜란드	1994	10.7	34.5	54.7
노르웨이	1995	8.3	35.4	56.3
스 웨 덴	1995	10.7	34.8	54.4
영 국	1995	5.2	26.5	68.2
한 국	1995	9.5	30.9	59.6
	1996	8.9	30.7	60.4
	1997	8.2	30.5	61.4
	1998	7.7	29.5	62.8
	1999	9.1	30.2	60.7
	2000	9.1	30.7	60.2

주: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 = 0.5
자료: Burniaux et al(1998).

<표 III-6> 소득계층별 점유비: 가처분소득

(단위: %)

		하위 30%	중위 40%	상위 30%
호 주	1993/1994	13.8	35.1	51.1
벨 기 에	1995	15.7	36.0	48.3
캐 나 다	1994	14.0	35.9	50.1
덴 마 크	1994	17.6	38.2	44.2
핀 란 드	1995	17.5	37.2	45.3
독 일	1994	14.8	36.1	49.1
이탈리아	1993	12.1	34.4	53.5
일 본	1994	15.7	36.5	47.8
네덜란드	1994	16.2	36.8	47.0
노르웨이	1995	16.0	37.2	46.8
스 웨 덴	1995	17.2	37.9	44.9
영 국	1995	11.5	35.0	53.5
한 국	1995	17.4	37.3	45.3
	1996	17.0	37.4	45.6
	1997	14.8	37.7	47.5
	1998	13.1	37.2	49.7
	1999	16.1	36.6	47.4
	2000	15.6	36.3	48.1

주: 균등화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 = 0.5
자료: Burniaux et al(1998).

나. 우리나라 소득분배 격차의 특징

그 밖에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편인데 이는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이혼율, 노인인구비, 문맹률 등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도 일부 원인을 찾을 수 있다[23]. 대체로 실업가구, 이혼가구, 노인가구, 문맹자 등은 일반적

23) <표 III-7>~<표 III-9> 참조.

으로 소득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업률, 이혼율, 노인인구비, 문맹률 등이 높아질수록 저소득층이 두터워지면서 소득분배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선진국에서는 기술·지식습득의 양극화, 즉 정보 접근에 대한 비대칭적 양극화에 따라서도 소득계층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많이 보여 왔으며, 또한 서구의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도 근로의욕 고취에 실패하면서 실업자들이 구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 철저한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입각한 연봉제, 고도로 발달된 첨단기술, 개방화·세계화에 따른 무한경쟁 등도 선진국에서의 소득격차 확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당 기간 동안 실업률, 이혼율, 노인인구비의 상승, 복지제도의 확충, 연봉제 확산, IT산업 등의 발전 등에 따라 소득계층간 소득획득 능력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점차 분배격차가 선진국형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경제위기 이후 급속히 상승하였다가 경기의 부침에 따라 다소의 진폭을 보이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위기 동안 증가된 실업자의 상당 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적 실업과 구조조정 이후 노동자의 기술이나 지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함에 따른 기술적 실업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기술적 실업에 의한 부분은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 수준은 여타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상승한 바 있다. 이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실업률이 하락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이유로 인해 종전보다는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80년대초 인구 1천명당 0.5~0.6건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1990년에는 약 1건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1998년에는 2.6건에 이를 정도로 최근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 또는 단독부모가구, 특히 그 가운데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최근과 같이 이혼율이 급상승하면서 소득격차 확대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에도 이혼율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혼율 상승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7> 노인인구비, 이혼율, 혼인상태의 국제비교

(단위: %, 건수/천명[이혼율])

	65세 이상 인구비		이혼율		혼인상태 비율		
		연도		연도	독신	배우자	연도
캐 나 다	12.3	1998	2.6	1995	38.6	61.5	1990
미 국	12.3	1998	4.3	1996	44.1	56.0	1990
영 국	15.8	1998	2.9	1995	42.4	57.5	1989
호 주	11.8	1998	2.9	1996	41.6	58.5	1990
뉴질랜드	11.6	1998	2.8	1996	..	..	
일 본	16.0	1998	1.8	1997	..	..	
한 국	6.3	1998	2.6	1998	39.3	60.7	1995
벨 기 에	16.2	1998	3.5	1995	..	..	
덴 마 크	14.7	1998	2.4	1996	..	..	
핀 란 드	14.5	1998	2.7	1997	..	..	
프 랑 스	15.5	1998	1.9	1996	43.4	56.5	1989
독 일	15.7	1998	2.1	1996	..	..	
이탈리아	17.0	1998	0.5	1996	..	..	
네덜란드	13.5	1998	2.2	1997	42.9	57.1	1989
노르웨이	11.6	1998	2.3	1996	47.5	52.4	1990
스 웨 덴	17.2	1998	2.4	1996	41.4	58.6	1988

주: '..' 는 자료를 이용할 수 없음을 의미

자료: OECD, *OECD in Figures*, 1999.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00*, 200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0.
_____, 『국제통계연감』, 2000.

<표 Ⅲ-8> 이혼율의 국제비교

(단위: 건수/천명)

	1978	1979	1980	1982	1983	1984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캐 나 다		2.51		2.86	2.75			2.94		2.7			2.6			
미 국			5.19	5.03			4.96	4.7			4.6			4.3		
호 주		2.62		2.9		2.76		2.5			2.7			2.9		
뉴질랜드	1.86			3.89		2.83		2.69		2.6				2.8		
일 본			1.22	1.38		1.49		1.27			1.5				1.8	
벨 기 에			1.47	1.62			1.86	2.04		2.1			3.5			
덴 마 크			2.63	2.86			2.81	2.67			2.5			2.4		
핀 란 드			1.99	2.01		1.97		2.63			2.4				2.7	
프 랑 스		1.59		1.72		1.89		1.86	1.9					1.9		
독 일			2.67	2.99			3.08		1.7		1.9			2.1		
이탈리아			0.21	0.26			0.29	0.48			0.4			0.5		
네덜란드	1.6			2.16			2.35	1.9				2.4			2.2	
노르웨이		1.62		1.74		1.92		2.4				2.5		2.3		
스 웨 덴			2.41	2.49			2.33	2.26			2.5			2.4		
영 국			3.01	2.94		2.89		2.88		3.0			2.9			
한 국			0.55	0.56			-	0.97					1.5			2.6

자료: UN, *Demographic Yearbook*, 각 연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는 1980년에 3.9%였으며, 1990년에는 5.3%, 1998년에는 6.3%, 2000년에는 7.3%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수준은 주요 선진국의 노인인구비(약 11~17%)와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는 크게 낮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 증가속도는 가속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1980~1985년의 5년 기간 동안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비가 0.4%p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1985~1990년에는 1.0%p 상승하는 등 증가율이 크게 높아졌다.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비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는 듯하여 1990~1998년의 8년 동안 1%p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1998~2000년)에는 불과 2년 사이에 노인인구비가 1%p 상승할 정도로 노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은 상당 부분 은퇴하였거나 소득을 획득하더라도 그 이하의 연령층에 비해 임금률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소득수준은 대체로 낮아 주로 저소득층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인인구비가 상승하면 계층별 소득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노인인구비 상승에 의해서도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이미 선진국 수준 또는 그 이하로 하락하였기 때문에 노인인구비의 상승추세는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표 Ⅲ-9> 참조). 더욱이 <표 Ⅲ-10>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점차 노인인구비가 상승속도가 가속화될 것임을 암시해준다. 또한 <표 Ⅲ-11>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사망률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여 노령화의 진전은 이미 급속히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9> 65세 이상 인구비율의 국제비교

(단위: %)

	1980	1982	1985	1990	1993	1998
캐 나 다	9.5	9.9	10.4	11.5	11.8	12.3
미 국	11.3	11.5	11.9	12.5	12.7	12.3
호 주	9.6	9.9	10.3	11.2	11.7	11.8
뉴질랜드	9.7	10.0	10.3	11.1	11.6	11.6
일 본	9.0	9.2	10.2	11.9	13.4	16.0
벨 기 에	14.4	14.1	13.8	14.9	..	16.2
덴 마 크	14.4	14.7	15.1	15.6	15.5	14.7
핀 란 드	12.0	12.2	12.5	13.4	13.8	14.5
프 랑 스	13.9	13.3	12.9	14.0	14.6	15.5
독 일	15.5	15.0	14.8	15.3	15.0..	15.7
이탈리아	12.9	13.1	12.9	14.6	14.6	17.0
네덜란드	11.5	11.7	12.1	12.8	13.0	13.5
노르웨이	14.8	15.1	15.7	16.3	16.1	11.6
스 웨 덴	16.3	16.6	17.2	17.8	17.6	17.2
영 국	14.9	15.0	15.1	15.7	15.8	15.8
한 국	3.9	-	4.3	5.0	-	6.3

주: 1995년 및 2000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는 각각 5.9%와 7.3%임.

<표 Ⅲ-10> 출생률의 국제비교

(단위: 명/천명)

	1980	1982	1985	1990	1993	1998
캐 나 다	15	15	15	14	15	12
미 국	16	16	16	17	16	14
호 주	15	16	15	15	15	13
뉴질랜드	16	16	16	16	17	15
일 본	14	13	13	11	10	10
벨 기 에	13	12	12	13	12	11
덴 마 크	11	10	10	11	12	13
핀 란 드	13	14	13	13	13	11
프 랑 스	15	14	14	13	13	13
독 일	11	10	10	11	10	10
이탈리아	11	11	10	10	10	9
네덜란드	13	12	12	12	13	12
노르웨이	12	12	12	13	14	13
스 웨 덴	12	11	11	15	14	10
영 국	13	13	13	13	13	12
한 국	22	23	21	16	16	14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각 연도.

<표 III-11> 사망률의 국제비교

(단위: 명/천명)

	1980	1982	1985	1990	1993	1998
캐 나 다	7	7	7	7	8	7
미 국	9	9	9	9	9	9
호 주	8	8	7	7	7	7
뉴질랜드	8	8	8	8	8	7
일 본	6	7	6	7	8	7
벨 기 에	12	12	11	11	11	10
덴 마 크	11	11	11	12	12	11
핀 란 드	9	9	9	10	10	10
프 랑 스	11	11	10	10	10	9
독 일	12	12	11	11	11	10
이탈리아	10	11	9	9	10	10
네덜란드	8	8	8	9	9	9
노르웨이	10	10	10	10	11	10
스 웨 덴	11	11	11	12	11	11
영 국	12	12	12	11	11	11
한 국	7	7	6	6	6	6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각 연도.

4. 소득재분배 효과의 제고방안에 대한 일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각종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작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세부담이 누진적이고 正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소득세의 경우 절대세부담 수준은 선진국보다 낮고, 사회이전지출을 통한 이전소득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소득세 1원당(또는 1단위당) 소득재분배 효과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세부담이 누진적인 소득세의 비중을 제고함으로써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물론 소득세 비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증세가 필요하다. 소득재분배 효과 증대를 위한 소득세 증세의 방안으로는 ①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증대시키는 방법 ②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법 ③자영업자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통해 소득포착률을 제고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는 고소득층에만 적용되는 높은 세율 또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거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범위를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방법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은 증대시키지 않으면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을 증대시킴으로써 소득세 비중을 증대시키는 한편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고소득층은 비교적 국제간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과 같은 세계화·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해외로의 이주를 통해 소득의 근거지를 이동시킴으로써 국내의 과세권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24]. 더욱이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과중하게 인상하면 이들은 높은 세부담을 피해 해외로의 이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작정 소득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고소득자가 급감하면서 소득세의 누진도가 약화되고 소득세의 세원도 침식되어 소득세 비중이 하락함으로써 당초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시경제적으로도 경제발전의 원동력에 손상을 입게 됨으로써 잠재성장력 둔화 및 경제성장에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4) 최근 I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핵심 고급인력의 해외이주가 활발했던 것이 고급인력의 해외유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소득세 세율수준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세 한계세율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방법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추는 방법이다.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근로소득세의 경우 대체로 40~50% 정도이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총납세인원 중 약 60% 정도가 과세미달 추정인원이다[25]. 그러므로 소득세의 과세기반 확충을 통한 소득세의 비중 제고가 요청된다.

그러나 면세자 비율의 축소는 그만큼 소득세의 누진도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면세자 비율 축소를 통한 소득세 비중 증대는 세부담이 누진적인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향상시키지만 면세자 비율이 축소되면서 소득세 부담 자체의 누진도가 다소 약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의 향상 정도는 일부 상쇄되어 반감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소득 또는 매출을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방법은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을 제고함으로써 소득세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방법이다. <표 Ⅱ-1>에서 보듯이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은 근로자가구의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 제고는 곧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의미한다. 즉, 자영업자들에 대한 과표양성화는 소득포착률 또는 소득신고율 제고의 형태로 나타나 소득세의 세수 증대와 비중 상승을 가져다주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의

25) 종합소득세 납세인원에는 근로소득세 납부(정산)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종결되는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할 때 총납세인원은 3,407,662명이며 이 가운데 과세미달 추정인원은 2,047,371명으로 60.1%이다. 2000년 귀속분의 경우에는 각각 3,480,371명 중 1,849,590명으로 53.1%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통계연보』를 참조하기 바란다.

미하게 되어 소득세 부담의 누진도를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일층 향상시킬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숨겨진 세원에 대한 발굴을 통해 형평과세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이와 관련이 매우 깊은 부가가치세 과세의 정상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다만 과표양성화 문제는 단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조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증폭시킬 것이 우려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현재 시행중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 등을 통해 과표가 빠르게 양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포착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토대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한계세율의 인상이나 높은 소득구간의 범위 축소 등과 같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일방적인 세부담 증대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의도한 바대로 성공을 거둘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강화는 세부담의 형평 제고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확충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 보완적으로 상당히 높은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단기간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Ⅳ. 소득분배 격차 발생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 및 전망

본장에서는 소득분배 격차 발생의 動因과 유형 등을 분석하고, 소득분배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 가운데 중요하고 객관적인 자료검증을 통해 분석이 가능한 변수를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통해 소득분배구조에 미친 영향을 定量的·定性的으로 살펴본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가능성과 향후의 소득분배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본다.

1. 소득분배 격차 원인의 분석범위

우리는 흔히 소득분배 격차의 원인에 대해 해당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 실업률, 생산성 및 임금격차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을 생각하기 쉽다. 반면에 연령별·성별 인구특성 등과 같은 비경제적 요인이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능력의 차이에 의한 소득불평등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노력의 차이에 의한 소득불평등도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 못지않게 소득분배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우리가 흔히 지나쳐버리는 것 중에서도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소득분배의 격차를 초래하는 원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직종별·업종별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의 차이, 산업간의 비대칭적 성장률,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등 유형간 분포의 차이, 구조조정에 따른 취업형태의 변화, 실업률, 경기전망, 지역별 경제구조 및 발전

속도의 차이, 연령별·성별 인구구조의 변화와 차이, 가구유형별 비중의 변화, 정년제도의 차이, 교육수준의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요인만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비경제적인 사회현상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요인들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만 특성상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매우 많다. 예를 들어 능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능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능력의 차이가 얼마만큼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기 어렵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노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의 경우에도 분석하기 어렵다.

본장에서는 먼저 최근의 소득불평등의 변화가 어느 계층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소득분배의 動因 및 소득분배의 변화방향과 유형을 파악해본다.

그리고 이상의 요인들 가운데 현재 주어진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고 향후의 소득분배 동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인을 대상으로 소득분배구조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본다. 그 대상은 실업률, 이혼 등에 의한 편모가정 비율, 노인인구비 등이다. 분석방법은 각각에 대한 비율을 가상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모의실험 과정을 거쳐 추정한 결과를 위주로 한다. 다만 실업가구와 이혼가정의 경우에는 자료로부터 직접적인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각각 무직가구와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를 대리변수로 사용한다. 즉, 소득분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실업률을 대상으로 소득분배에 대한 민감도를 추정해보고 이혼이나 사별 등에 의한 여성가구주 또는 편모가정의 비율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인구의 노령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의실험을 통해 살펴본다.

실업률 등의 경우에는 경기활성화와 실업대책 등을 통해 어느 정도의 통제(control)가 가능하지만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등의 요인

에 의한 편모가정의 비율과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비 증가 등과 같이 사실상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도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이와 같이 통제의 범위 밖에 있는 요인의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을 통해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만 정부정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비경제적인 사회현상의 변화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대한 분석·예측을 통해 향후의 소득분배의 흐름을 예측해볼 수 있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경제로 진입하려는 시점에서 볼 때 선진경제 및 선진적인 사회구조로의 변화를 위해 거쳐야만 하는 과정, 즉, 이혼의 증가, 인구의 노령화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복지사회의 구현과 분배문제와의 관계를 검증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선진경제로 진입하면서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겠지만, 복지제도의 확충에 따라 복지지출도 함께 증가하면서 분배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소득재분배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양자간의 밀도와 비중, 강도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반대로 陰의 값을 가질 수도 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인인구비가 증가할수록 시장소득단계에서의 소득분배 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 밖에 지나친 복지제도는 오히려 근로의욕이나 투자의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 문제는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해보아야할 문제이지만 서구의 실패한 복지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명제를 놓고 볼 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후행연구에서 규명해주기를 기대한다.

2. 소득계층간 소득격차의 변화

가. 점추정의 필요성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각 소득계층의 평균소득을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본추출 오류에 따른 특이표본(outlier)에 의한 추론의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한 점(point)에서의 소득수준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평균값 분석에 있어서는 특이표본에 의해 그 값이 영향을 받기 쉽지만 어떤 특정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점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점추정; point estimation)에는 그런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전자는 특정 분위의 평균적인 소득 변화를 잘 나타내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백분위수가 가진 정보만을 제공해줄 뿐이며 주변의 표본들이 담고 있는 정보는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계층간 소득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소득배수를 비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렇지만 특이표본 등과 같이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잘못된 추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위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격차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특이표본에 의한 분석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점추정(point estimation)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먼저 최저소득층과 최고소득층에는 일반적인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이표본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최고소득층 가운데에는 재벌총수들 같이 수적으로는 매우 작지만 소득규모면에서는 다른 고소득자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소득을 획득하는 소득자가 있다. 만약 이들과 같이 매우 특이한 경우의 소득자가 표본에 추출되는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평균소득수준이 특이표본으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으로 커질 수 있다.

이는 실제로 모집단이 가지는 특성과 달리 소표본 특성(small sample properties)에 따라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대규모적인 負(-)의 소득을 가지는 소득자가 표본으로 추출되는 경우에는 반대의 이유로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본절에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소득격차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점추정 방법을 채택하기로 한다.

나. 소득계층간 소득격차의 변화 추이

<표 Ⅱ-4>와 <표 Ⅱ-5>가 모두 각 분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작성된 데 비해 다음의 <표 Ⅳ-1>은 각 백분위수 한 점에서의 소득을 나타낸다. <표 Ⅳ-2>는 <표 Ⅳ-1>의 백분위수별 소득을 기초로 주요 백분위수간 상대소득 비율을 산출하였다.

저소득층의 대표자로는 10% 백분위 소득가구(논의의 편의상 이하 소득자로 통일, P10으로 표기)를 선택하였으며, 고소득층의 대표자로는 90%, 95%, 99% 백분위 소득자(각각 P90, P95, P99로 표기)를 선택하였다[26]. 그리고 양자간의 소득격차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50% 백분위 소득자도 함께 선택하였다.

먼저 1982~2000년 동안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상대소득비, 즉 P90/P10, P95/P10, P99/P10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세 가지 경우 모두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다. P90/P10보다는 P95/P10, P95/P10보다는 P99/P10의 변화가 더 두드러지는데 이는 표본의 꼬리(tail)에 가까울수록 소득의 변화율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1982년 이래 1990년대 초까지 상기의 세 가지 상대소득비는 모두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는 안정적인

26) 20% 백분위 소득자는 참고를 위해 선택한 만큼 본문에서 별도의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모습을 유지하다가 1995년부터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경제위기가 시작된 1997년과 극심한 경기후퇴를 경험하였던 1998년에는 상당히 예외적으로 상대소득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1999년에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7~1998년을 예외적인 기간으로 규정하여 논외로 한다면, 1995년부터는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의 상대소득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최상위 고소득자로 갈수록 상대소득비 변화율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 추세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경향은 최상위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저소득층과의 소득격차가 더욱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이상 <표 Ⅳ-2>와 [그림 Ⅳ-1] 참조).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간의 상대소득비는 중간소득자를 매개로 하여 수학적으로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frac{P99}{P10} = \frac{P99}{P50} \times \frac{P50}{P10}$$

즉, P99/P10은 중간소득자인 P50을 매개로 P99/P50과 P50/P10의 곱으로 표현된다. P99/P50은 최고소득자와 중간소득자, 즉 중간수(median) 소득자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며, 마찬가지로 P50/P10은 중간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를 나타낸다[27]. 따라서 최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격차는 고소득자와 중간소득자간의 소득격차, 중간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에 의해 결정된다.

<표 Ⅳ-2>에 의하면 50백분위 소득자(P50)와 10백분위 소득자(P10)간의 소득격차, 즉 상대소득배수 P50/P10은 1997~1998년에 큰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이를 제외하면, 1982~2000년 동안 대체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즉, [그림 Ⅳ-2]에서 보듯이 1997~

27) P50 대신 다른 백분위수를 사용해도 수학적으로 위 식은 성립한다.

1998년을 제외하면 P50/P10 곡선은 거의 수평에 가깝다.

반면에 P99/P50은 상당히 변화가 많았다. 즉, P50/P10의 경우에는 1997~1998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1.7~1.9의 범위 내에서 변화폭이 매우 작았던 반면에 P99/P50의 경우에는 2.7~3.6의 범위 내에서 변화폭이 상당히 컸다. P99/P50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이는 1995년부터는 급속히 상승(2.74→3.15)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소수의 최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상대소득격차가 빠르게 확대되었음을 시사해준다.

[그림 Ⅳ-2]에서 보듯이 P99/P50 곡선은 다른 곡선에 비해 등락이 상당히 커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특히 1995년 이후에는 뚜렷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곧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소수인 최상위 1% 내외의 최고소득자의 소득이 상방으로 크게 증가함으로써 최고소득자와 중간소득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시사해준다.

P95/P50과 P90/P50의 경우에는 1980년대에 그 비율이 다소 하락하여 각각의 곡선이 매우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상당히 작고 등락이 크지 않았다. 이는 저소득자와 중간소득자, 그리고 중간소득자와 고소득자(최고소득층 제외)간의 상대소득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타나 이들간의 소득격차가 별로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997~1998년에는 P50/P10이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였던 반면 중간소득자와 90% 또는 95% 소득자간의 상대소득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1997~1998년에 걸쳐 경제위기의 여파로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던 현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데 기인하는 면이 컸다. 그러나 이 기간을 제외하면 1990년대 중반이후 극히 소수의 최고소득자들의 소득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

타나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커다란 대조를 이룬다.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최근,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간의 소득분배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은 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고소득층의 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고소득자와 여타 소득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Ⅳ-1> 주요 백분위수(percentile)의 소득수준

(단위: 원)

	P10	P20	P30	P40	P50	P60	P70	P80	P90	P95	P99
1982	1,899,269	2,303,890	2,686,719	3,063,457	3,421,000	3,949,314	4,559,846	5,409,680	6,917,586	8,548,344	12,192,150
1983	2,063,200	2,543,153	2,956,600	3,394,709	3,822,632	4,273,571	4,977,201	5,875,635	7,472,140	8,913,027	12,812,929
1984	2,273,000	2,878,203	3,302,084	3,775,258	4,295,100	4,817,900	5,441,144	6,471,807	8,217,000	10,213,500	14,669,298
1985	2,459,520	3,015,874	3,491,217	3,890,200	4,309,900	4,863,883	5,564,700	6,602,800	8,521,798	10,033,744	14,457,541
1986	2,783,092	3,459,695	4,014,312	4,538,668	5,104,697	5,735,126	6,545,828	7,722,609	9,799,560	11,529,300	17,278,347
1987	3,290,983	3,952,182	4,595,509	5,253,440	5,949,205	6,660,264	7,747,700	9,101,825	11,531,410	14,018,011	19,998,490
1988	3,871,989	4,757,230	5,458,556	6,166,488	6,870,898	7,722,606	8,825,004	10,276,358	13,043,185	15,717398	22,462,920
1989	4,924,370	6,100,000	7,053,350	7,893,168	8,829,088	9,913,966	11,270,129	13,269,155	16,706,289	20,597,945	29,175,330
1990	6,341,328	7,566,325	8,622,500	9,611,789	10,767,976	12,016,000	13,460,695	15,812,060	19,392,641	23,158,020	32,594,090
1991	7,743,000	9,376,834	10,762,000	11,995,902	13,470,854	14,902,577	16,777,811	19,201,321	22,946,669	26,673,240	37,549,550
1992	8,982,520	10,846,000	12,459,253	13,837,970	15,434,444	17,101,306	19,022,600	21,855,460	26,814,440	31,378,850	41,859,110
1993	9,535,200	11,621,100	13,249,150	14,824,740	16,427,300	18,112,610	20,165,312	22,787,498	27,682,810	32,679,456	47,866,732
1994	11,009,088	13,243,204	15,181,128	16,923,217	19,019,557	21,179,220	23,710,995	27,019,570	33,065,232	38,261,411	51,227,996
1995	12,402,900	15,129,028	17,201,627	19,383,000	21,537,500	24,108,380	27,156,460	30,792,895	36,932,310	42,718,160	59,031,666
1996	13,542,910	16,541,349	19,059,140	21,536,560	24,209,210	27,062,730	30,179,811	34,421,392	41,790,440	49,319,860	65,418,320
1997	11,174,854	15,742,000	19,067,622	21,908,493	24,591,379	27,764,000	31,474,500	35,928,933	43,509,565	52,614,580	70,489,985
1998	8,062,880	12,598,252	15,694,541	18,663,300	21,277,655	24,413,200	27,816,540	32,407,231	40,332,211	47,484,952	67,318,900
1999	12,467,300	15,633,000	18,313,257	20,661,099	23,440,592	26,397,870	30,015,160	35,110,050	42,348,246	49,991,435	72,681,288
2000	13,662,169	17,118,800	19,952,344	23,163,182	26,190,500	29,597,590	33,775,118	39,011,628	48,096,952	56,902,230	82,364,140

주: P10, P90 등은 모두 하위 백분위수임. 예를 들어 P10은 하위 10% 분위수, P90은 하위 90% 분위수(또는 상위 10% 분위수)를 나타냄.

<표 Ⅳ-2> 분위수간 상대소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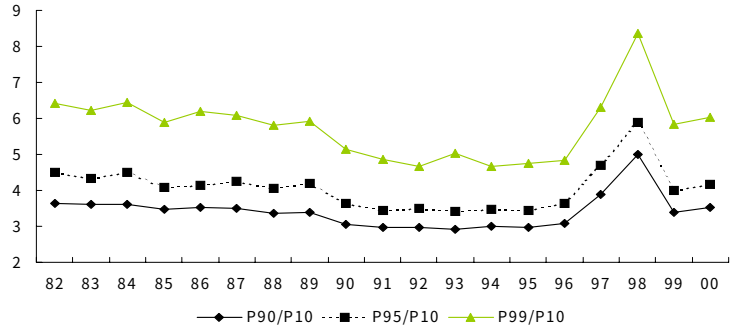
(단위: 배)

	P90/P10	P95/P10	P99/P10	P80/P20	P90/P20	P95/P20	P99/P20	P50/P10	P90/P50	P95/P50	P99/P50
1982	3.642	4.501	6.419	2.348	3.003	3.710	5.292	1.801	2.022	2.499	3.564
1983	3.622	4.320	6.210	2.310	2.938	3.505	5.038	1.853	1.955	2.332	3.352
1984	3.615	4.493	6.454	2.249	2.855	3.549	5.097	1.890	1.913	2.378	3.415
1985	3.465	4.080	5.878	2.189	2.826	3.327	4.794	1.752	1.977	2.328	3.354
1986	3.521	4.143	6.208	2.232	2.832	3.332	4.994	1.834	1.920	2.259	3.385
1987	3.504	4.260	6.077	2.303	2.918	3.547	5.060	1.808	1.938	2.356	3.362
1988	3.369	4.059	5.801	2.160	2.742	3.304	4.722	1.775	1.898	2.288	3.269
1989	3.393	4.183	5.925	2.175	2.739	3.377	4.783	1.793	1.892	2.333	3.304
1990	3.058	3.652	5.140	2.090	2.563	3.061	4.308	1.698	1.801	2.151	3.027
1991	2.964	3.445	4.849	2.048	2.447	2.845	4.005	1.740	1.703	1.980	2.787
1992	2.985	3.493	4.660	2.015	2.472	2.893	3.859	1.718	1.737	2.033	2.712
1993	2.903	3.427	5.020	1.961	2.382	2.812	4.119	1.723	1.685	1.989	2.914
1994	3.003	3.475	4.653	2.040	2.497	2.889	3.868	1.728	1.738	2.012	2.693
1995	2.978	3.444	4.760	2.035	2.441	2.824	3.902	1.736	1.715	1.983	2.741
1996	3.086	3.642	4.830	2.081	2.526	2.982	3.955	1.788	1.726	2.037	2.702
1997	3.894	4.708	6.308	2.282	2.764	3.342	4.478	2.201	1.769	2.140	2.866
1998	5.002	5.889	8.349	2.572	3.201	3.769	5.344	2.639	1.896	2.232	3.164
1999	3.397	4.010	5.830	2.246	2.709	3.198	4.649	1.880	1.807	2.133	3.101
2000	3.520	4.165	6.029	2.279	2.810	3.324	4.811	1.917	1.836	2.173	3.145

주: 백분위수에 대해서는 앞의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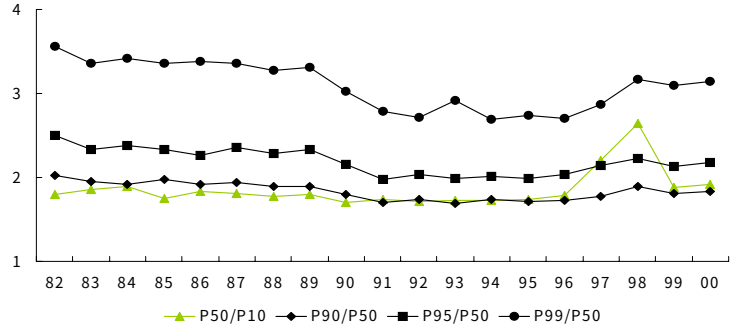
[그림 Ⅳ-1] 백분위수간 상대소득비 Ⅰ

(단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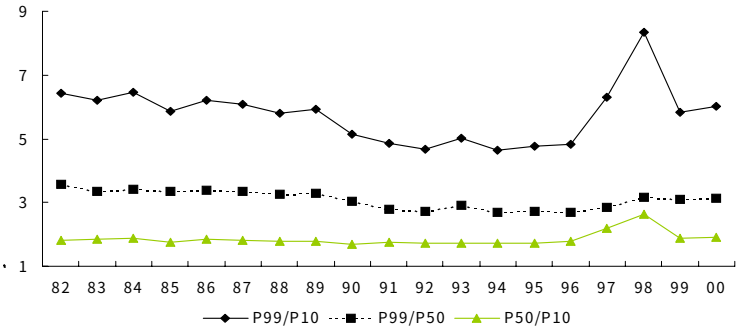


[그림 Ⅳ-2] 백분위수간 상대소득비 Ⅱ

(단위: 배)



[그림 Ⅳ-3] 백분위수간 상대소득비 Ⅲ



이런 모습은 [그림 Ⅳ-3]에 잘 집약되어 있다. 1997~1998년에 P99와 P10간의 상대소득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주로 P50과 P10간의 상대소득비가 크게 상승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반면에 1997~1998년을 논외로 할 때 1995년 이래 P99/P10의 변화는 대부분 P99/P50의 변화에 기인하는 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P50/P10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별도로 추정하지는 않았지만 <표 Ⅳ-2>와 [그림 Ⅳ-1]~[그림 Ⅳ-3]을 볼 때, 저소득자(예: P10)와 90% 또는 그 이하의 백분위수 소득자간의 상대소득비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았던 반면에 최고소득자(예: P99)와 여타의 중·하위 소득자간의 상대소득비는 확대되고 있음을 <표 Ⅳ-1>과 <표 Ⅳ-2>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그 원인이 저소득자(또는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극히 일부의 최고소득자의 소득이 다른 계층보다 더 빨리 증가한 데에서 찾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최근 IT산업과 증권시장을 비롯한 금융산업 등에서 극히 소수의 소득자를 중심으로 억대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전문관리자의 소득이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 생산성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에 입각한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잘한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경제위기 이후의 소득격차 확대 추세는, 종전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하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경제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혁신(innovation)에 성공한 소수의 소득자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가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인 위화감 조성과 각종 기회의 불평등 고착화에 따른 빈곤의 장기화, 교육기회의 불평등에 따른 가난의 세습 등 매우 극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파생시킨다. 그러나

<표 Ⅳ-3> 가구주의 직업유형별 평균소득 및 10분위 점유비

(단위: 원, %)

		1995		2000	
		전체 평균소득 대비 비율	10분위 점유비	전체 평균소득 대비 비율	10분위 점유비
전체 소득		23507362	-	29426303	-
관리자	법인관리자	1.476	2.59	1.893	8.06
	종합관리자	1.431	12.70	1.406	8.31
전문가	물리·수학·공학	1.171	3.56	1.238	2.83
	생명과학·보건	1.329	1.33	2.211	3.91
	교육전문가	1.558	12.41	1.565	7.31
	기타	1.426	2.22	1.213	2.70
기술공 및 준전문가	자연과학·공학기술공	1.045	1.22	1.064	1.53
	생명과학·보건준전문가	1.069	0.00	1.335	0.10
	교육준전문가	0.824	0.43	1.021	1.13
	기타준전문가	1.172	13.45	1.210	14.61
사무직	일반사무직	1.022	7.23	1.120	7.15
	고객봉사사무직	1.022	2.00	1.050	1.70
서비스·판매업	대인·보호서비스근로자	0.920	5.08	0.864	3.09
	모델·판매원·선전원	0.987	9.10	0.978	7.91
출하목적 농어업숙련근로자		0.815	0.00	0.513	0.00
기능원·기능근로자	추출·건축기능근로자	0.933	2.12	0.886	2.61
	금속·기계 관련	0.915	4.40	0.939	3.06
	정밀·수공예·인쇄 관련	0.882	0.00	0.757	0.20
	기타	0.872	0.96	0.841	2.15
장치·기계조작원·조립원	고정장치 관련 조작원	1.091	1.30	1.136	1.36
	기계조작원·조립원	0.922	1.72	0.990	4.16
	운전기사·이동장치조작원	0.934	6.17	0.917	3.17
단순노무직	행상·단순노무 관련	0.911	4.28	0.799	2.00
	농림어업 관련	0.368	0.00	0.609	0.00
	채광·건설·제조·운수 관련	0.760	0.94	0.737	0.50
무직·기타 분류불능		0.803	4.35	0.814	10.44

주: 도시가계조사자료가 담고 있는 가구주의 직업코드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일부 직업의 경우 표본이 없어 위에서 생략하였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의 변화가 저소득층의 몰락에 의한 바람직하지 못한 소득격차의 확대라는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기보다는, 경제질서 및 경제발전단계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시발점에서 고소득층의 상방 이동이라는 것이 경제의 동태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긍정적인 측면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최근의 분배구조 변화는 과거처럼 경기악화시 또는 1998년의 경제위기시에 경험하였던 것 같이 저소득층의 몰락에 따라 빈곤문제가 극심해지는 현상을 내포하는 극심한 소득격차 확대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직업분류가 충분히 세밀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구주의 직업을 중심으로 평균소득과 최고 소득층인 10분위의 표본 점유비를 비교해보면 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3>에서 보듯이 1995~2000년 기간 동안 기업의 최고위 경영층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관리자, 최근 벤처붐을 타고 급성장한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 및 준전문가 등의 소득증가율은 평균소득증가율을 크게 앞질러 이들 분야의 성장이 괄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고 소득층인 10분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점유비도 크게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위의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2~1990년 기간 동안의 소득분배구조의 동향을 요약해보면 1982년 이래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니계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소득분배구조가 보다 균등해지는 방향으로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고 소득층과 최저 소득층간의 상대소득비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특히 <표 Ⅱ-5>에서 보듯이 1980년대에 걸쳐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고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었

음을 상기할 때 결국 이 기간 동안의 소득분배 격차의 축소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괄목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곧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과실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소득층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소득비가 상승 추세로 반전되었다. <표 Ⅱ-5>에 따르면 1990년대의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가율이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경제위기 동안의 경기후퇴라는 예외적인 상황이 전개되었음을 생각할 때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하락하였다기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90년대,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소득격차 확대는 소득증가율 측면에서 고소득층의 약진이 괄목할만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 그 이전 시기와 대조를 이룬다.

최근 고소득층의 소득증가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부연하면 선진국으로의 진입 과정에서 나타나는 능력 및 성과위주의 연봉제 확산, IT산업으로 대변되는 정보화 사회의 급진전과 세계화·개방화에 따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층이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경제발전을 선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세계 경제가 침체현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과거의 소득분배 동향을 놓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최근의 여건 변화가 성숙되는 시점에 도달해서는 다시 후발자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까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하에서의 성과가 확산되는 단계에 이르러 다시 소득분배 격차가 축소되는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다. 향후 전망

위에서 논의한 요인에 의한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 외에도 이혼율 상승, 노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비의 상승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라서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역시 선진국형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고찰하는 것이 편리하다.

먼저 대외적 요인이란 세계 경제의 흐름, IT 및 금융 산업의 발전 수준과 속도, 세계 금융시장 동향, 국제간 경쟁, 자본 및 노동의 국제간 이동 등을 들 수 있다. 컴퓨터, 인터넷, 개인휴대통신 등의 비약적인 발전, 개방화·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국제간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확립되는 가운데 계층간·국가간 정보력 격차가 확대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내적 요인이란 총체적인 국내적 여건의 변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경제발전 단계, 실업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경제활동인구비율, 임금체계, 구조조정, 산업 구성 등의 경제적 요인과, 인구구성과 노령화, 사회보장제도, 국민의식, 결혼, 이혼,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의 비경제적 요인을 포함한다.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소득분배구조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주도 및 불균형 성장을 토대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전개해옴에 따라 경제발전 초기에는 산업간·계층간 분배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후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경제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으로까지 확산되면서 분배격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함에 따라 경제구조도 점차 선진국형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최근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선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생산성에 입각한 임금격차가 더욱 확대되면서 선진국에서조차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지니계수가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계층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Ⅳ-4> 참조).

<표 Ⅳ-4> 지니계수 변천의 국제비교

	기준소득	지니계수			
		기준년도		비교년도	
한 국	총소득	0.23743	(1995)	0.27658	(2000)
영 국	시장소득	0.46	(1981)	0.53	(1999)
미 국	총소득	0.406	(1981)	0.457	(1999)
일 본	시장소득	0.3491	(1981)	0.4412	(1996)
뉴질랜드	시장소득	0.566	(1982)	0.609	(1996)
캐 나 다	시장소득	0.396	(1989)	0.437	(1998)
싱가포르	총소득	0.436	(1990)	0.491	(2000)

자료: 영국 - Harris(2000), Lakin(2001)
미국 - Jones Jr., Arthur F. and Daniel H. Weinberg(2000), US Census Bureau(2000)
일본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2000)
뉴질랜드 - Statistics New Zealand(1999)
캐나다 - Statistics Canada(1998)
싱가포르 - Census of Population Office(2001)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미 이러한 단계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소득분배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듯이 향후 우리의 소득분배 격차도 선진국형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점차 우리 경제가 벤처기업 등이 활성화되고 증권시장이 크게 활성화될수록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성과주의에 입각한 연

봉제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극히 소수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고액 연봉화가 진전되어 선진국형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28]. 더욱이 세계화·개방화에 따라 무한경쟁시대로 접어들면서 생산성 및 정보 격차가 심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대는 전세계적으로 IT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경제 패러다임(paradigm)이 새롭게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경제의 선진화와 함께 새로운 경제질서가 확립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경제위기에 따라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하에서 전개되는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경제위기 동안에는 모든 소득계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감소가 매우 크게 나타남으로써 계층간 상대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던 반면에 경제위기 극복 이후의 소득격차 확대 추세는 그와 반대로 극히 소수의 고액소득자의 출현에 따른 최고 소득층의 약진이 주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실업률이 높다. 새로운 산업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였거나 잘 갖춰진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이나 노동공급이 여의치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이후 실업률이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지만 향후에도 경제위기 기간 및 그 이후의 구조조정의 결과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경제가 더욱 발전하여 선진경제로 진입하더라도 종전과

28)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IT산업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해 정보화 관련 산업에서의 고액소득자 증가 추세는 다소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이 거의 완전고용에 가까운 2%대의 실업률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실업률 측면에서도 향후의 소득분배 격차는 종전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사회이전지출 전인 시장소득 단계에서의 소득격차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보다 다소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장소득 단계에서 저소득층의 소득점유비도 종전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실업급여가 크게 확충되고,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확대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등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사회보장제도가 확충됨으로써 총소득 단계에서의 저소득층의 소득점유비는 종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사회안전망 구축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경제위기 초기에는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총소득 단계에서조차 최저소득층의 소득점유비가 크게 저하되었으나 향후에는 그러한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향후에는 저소득층의 소득감소에 따른 하방으로의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보다는 첨단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른 소수의 최고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한 상방으로의 소득격차 확대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하방으로의 소득격차 확대가 저소득층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는 반면 상방으로의 소득격차 확대는 흔히 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경제적 요인 이외에도 사회구조 및 국민들의 의식구조 변화 등에 따른 이혼율 상승, 노령화 사회의 전개에 따른 노인인구비 상승, 인구증가율 둔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비의 감소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도 향후에는 점차 소득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는 이미 상당 수의 선진국에서 경험하였던 것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 정책의 성패에 관계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29].

라. Kuznets 가설에 대한 일고

최근 선진국에서 추세적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쿠즈네츠(Kuznets)의 역U자 가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쿠즈네츠의 역U자 가설은 Kuznets(1955)에 기원을 두는 것으로, 그 당시 관련자료가 이용 가능하였던 미국, 영국, 독일 3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연구결과이다. 그 가설에 따르면 1인당 소득이 증가할수록 초기에는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다가 소득수준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면 불평등도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오랜동안 분배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많이 참고되었으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그의 가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그의 역U자 가설은 극히 소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그의 가설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졌다. 위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최근의 선진국에서의 분배구조 동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학문적·실증적으로도 Deininger and Squire(1996, 1998)와 Ravallion and Chen(1997) 등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Kuznets의 역U자 가설을 기각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의 세계경제질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이론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에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을 개연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29) 이러한 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3.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가구 유형별 변화 추이

도시가구조사자료에 나타난 무직가구, 부녀자가구주 가구, 노인인구비에 대한 통계는 <표 Ⅳ-5>에 정리된 바와 같다.

먼저 도시가구조사자료상의 무직가구의 비율은 1980년대 전반에는 10~11% 정도로 나타났으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는 6.7~9.3% 정도로 낮아졌다. 1990년대 중반에는 10~11% 수준으로 1980년대 전반과 비슷해졌다가 1997년 이후 최근까지 20%에 육박할 정도로 급상승하였다. 무직가구의 비율은 실업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무직가구가 실업가구를 포함하여 노령·은퇴자 가구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구성된 가구를 다수 포함하기 때문이다.

무직가구 비율의 변화 추이는 실제의 실업률 통계자료의 변동 추이와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먼저 1982~1992년 기간에는 실업률이 서서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무직가구의 비율변화도 이러한 추이와 유사하다. 그리고 1997년부터의 경제위기 기간 이후에도 실업률과 무직가구의 비율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다만 1993년부터 199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는 무직가구의 비율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 데 반해 실업률은 1993년의 2.8%에서 1996년의 2.0%으로 매우 완만한 하락 추세를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노인가구의 상당수가 무직가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업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무직가구의 비율은 다소 상승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가계조사자료에 의하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은 1980년대 초부터 1990년대 초까지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며 1994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말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에는 이혼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율 또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분석

자료가 이용 가능한 1998년부터의 자료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1998년에 8.1%에서 2000년에는 11.2%에 이를 정도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경우의 비율도 5.4%에서 6.9%로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경제력이 약한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30]. 도시가계조사자료에는 여성가구주가 된 사유에 대해서는 조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여성가구주의 상당 부분은 배우자(남편)와의 이혼과 사별 등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종전에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40대 남자 사망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배우자(특히 남편)의 사망에 의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지만[31], 최근에는 과로 등에 따른 중년 남성들의 사망률이 낮아지는 반면 이혼율이 급상승하고 있음을 볼 때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에는 생활고 등에 따라 이혼 등이 크게 증가한 것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킨 주된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시가구조사자료에 나타난 노인인구비[32]는 통계청이 5년마다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나타난 수치보다 다소 낮다. 이는 도시가계조사자료의 피조사대상이 아닌 농어촌지역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30) 실제로 다음 절에서 분석해본 결과 이들 가구 비중의 상승에 따라 지니계수의 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하락 추세를 보인 것은 40대 남자 사망률의 저하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1984년 자료는 특이표본(outlier)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1984년의 경우에는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5>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무직가구, 여자가구주와 노인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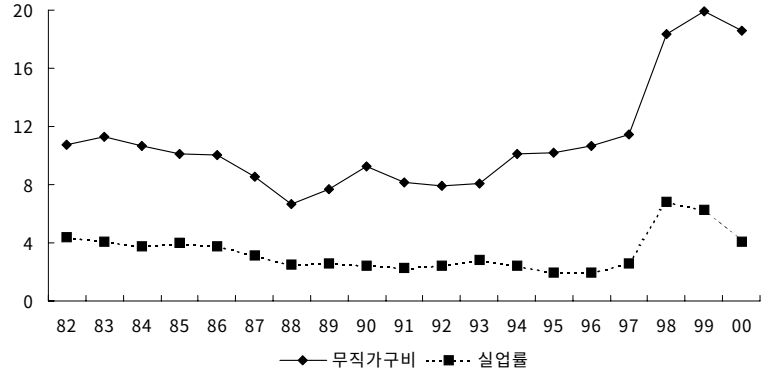
	무직가구	부녀자 가구주 가구				노인인구					
		有배우자		無배우자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전체	미성년자 부양	전체	미성년자 부양	가구비	인구비	가구비	인구비	가구비	인구비
1982	10.754	14.423	12.505	-	-	17.007	4.557	1.709	0.375	0.500	0.110
1983	11.275	16.299	13.685	-	-	18.382	5.003	2.002	0.448	0.531	0.119
1984	10.661	16.534	15.849	-	-	7.412	1.975	1.140	0.260	0.456	0.104
1985	10.119	13.268	10.738	-	-	16.107	4.412	1.755	0.408	0.671	0.156
1986	10.038	14.493	12.289	-	-	15.385	4.304	0.985	0.231	0.328	0.077
1987	8.544	13.842	11.265	-	-	16.181	4.662	1.814	0.437	0.668	0.161
1988	6.659	13.202	10.763	-	-	16.841	4.951	1.587	0.387	0.581	0.141
1989	7.709	13.446	10.440	-	-	13.564	3.932	1.278	0.312	0.573	0.140
1990	9.266	12.551	9.461	-	-	15.077	4.432	1.434	0.348	0.502	0.122
1991	8.169	12.723	10.191	-	-	16.134	4.749	1.559	0.378	0.525	0.127
1992	7.937	12.080	9.162	-	-	16.012	4.901	1.759	0.435	0.717	0.177
1993	8.072	11.266	7.965	-	-	16.144	5.414	2.182	0.561	0.901	0.232
1994	10.108	13.532	8.824	-	-	18.129	5.961	3.036	0.782	1.546	0.398
1995	10.228	14.169	8.989	-	-	18.448	6.124	3.274	0.854	1.483	0.387
1996	10.645	14.355	8.286	-	-	20.059	6.785	3.488	0.923	1.350	0.357
1997	11.423	15.162	8.705	-	-	21.227	7.443	3.973	1.065	1.504	0.403
1998	18.389	11.066	6.918	8.110	5.382	20.126	7.132	13.633	4.371	8.501	2.461
1999	19.925	14.911	9.341	9.422	5.960	22.345	8.094	14.970	5.017	9.208	2.768
2000	18.603	17.188	10.229	11.177	6.933	22.937	8.510	15.331	5.214	9.983	3.060

주: 1. 1997년까지의 자료에서는 가구주를 제외하고는 기타 가구원에 대한 연령분류시 최고 60세 이상으로만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65세 또는 70세 이상의 경우(음영처리된 부분)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또는 7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을 나타내었고, 인구비는 해당 가구주의 비율임. 따라서 1998~2000년의 경우와 불연속적임.

2. 1984년의 경우 노인비중이 매우 낮은데 이는 특이표본(outlier)일 가능성이 있음.

[그림 Ⅳ-4] 무직가구비와 실업률의 비교

(단위: %)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이 60~70세 또는 그 이상인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의하며, 노인가구라 함은 가구원 중 노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표 Ⅳ-5>에서 보듯이 노인인구의 비중은 노인가구의 비중보다 작다.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60세 이상 노인의 인구구성비는 1980년대의 경우 4~5%였으며 1990년대에는 점차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류기준이 달라 정확한 추이를 알 수는 없지만 <표 Ⅳ-5>에서 보듯이 노인인구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들어 그러한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통계청 조사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절부터는 무직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인구의 비중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모의실험을 수행한다. 이를 각 해당 가구에 대한 표본추출 가중치를 임의로 비례적으로 조정하고 각각의 가상적인 가중치에 대응하여 소득분배 또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변화 추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무직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각 가구의 점유비가 1~30%,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가구의 점유비가 1~50%의 범위내에서 1%p씩 변화시키는 것을 상정하였다.

4. 무직가구 비율 변동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무직가구의 표본가중치를 가상적으로 조정하였을 경우의 지니계수 변화 추이를 다음의 <표 Ⅳ-6>에 나타내었다[33].

2000년 현재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무직가구의 비율은 18.6%이고 지니계수(가구 기준)는 0.27658이다. 무직가구에 대한 표본가중치가 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실제 추정치보다 작고 가중치가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지니계수 역시 실제치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무직가구의 존재가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표 Ⅳ-6>에서 보듯이 가상적으로 무직가구의 비율이 상승할수록 지니계수의 값이 상승한다. [그림 Ⅳ-5]에서 보듯이 무직가구 비율 1단위당 지니계수의 변화폭은 거의 일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직가구 비율에 대응한 지니계수의 민감도가 일정하여 무직가구비율과 지니계수간에는 正의 선형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1982~2000년의 각 연도별 자료를 대상으로 가상적인 무직가구의 비율을 설명변수로 하고 각각에 대응되는 지니계수와 해당 연도의 지니계수와의 차이를 종속변수[34]로 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33) 다른 연도의 경우에도 이와 대동소이한 모습을 나타내었기 때문에 20000년 추정결과만을 표로 제시하고 나머지 연도에 대한 것은 편의상 생략하였다.

34) 각 해당연도의 지니계수는 해당연도에는 상수이므로 각 설명변수에 대응되는 지니계수를 설명변수로 사용할 경우 추정결과는 상수항의 차이만 있을 뿐이며 회귀분석 결과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Ⅳ-7>과 같다[35]. 그리고 1982~2000년의 각 연도별 무직가구의 비율에 대한 계수 추정치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Ⅳ-6]과 같다.

<표 Ⅳ-6> 무직가구비율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의 모의실험 결과 (2000년, 가구기준)

(단위: %[무직가구비율])

무직가구비율	지니계수(총소득 기준)		B - A
	실제 지니계수 (A)	모의실험결과 (B)	
1	0.27658	0.26511	-0.01147
2		0.26580	-0.01078
3		0.26648	-0.01010
4		0.26716	-0.00942
5		0.26784	-0.00874
6		0.26851	-0.00807
7		0.26918	-0.00740
8		0.26984	-0.00674
9		0.27050	-0.00608
10		0.27115	-0.00543
11		0.27180	-0.00478
12		0.27244	-0.00414
13		0.27308	-0.00350
14		0.27372	-0.00286
15		0.27435	-0.00223
16		0.27497	-0.00161
17		0.27560	-0.00098
18		0.27621	-0.00037
19		0.27682	0.00024
20		0.27743	0.00085
21		0.27803	0.00145
22		0.27863	0.00205
23		0.27922	0.00264
24		0.27980	0.00322
25		0.28038	0.00380
26		0.28096	0.00438
27		0.28153	0.00495
28		0.28210	0.00552
29		0.28266	0.00608
30		0.28321	0.00663

주: 도시가구자료상의 2000년도 무직가구비율 18.6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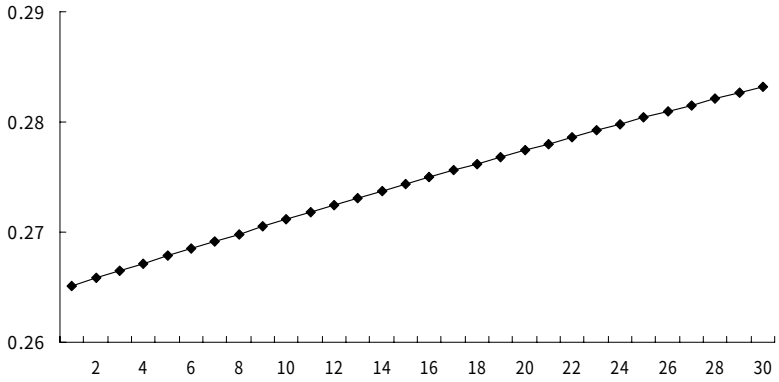
35) 회귀분석을 수행하는 이유는 각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직가구비율의 변화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수행할 것일뿐 그 이상의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표 Ⅳ-7> 무직가구비율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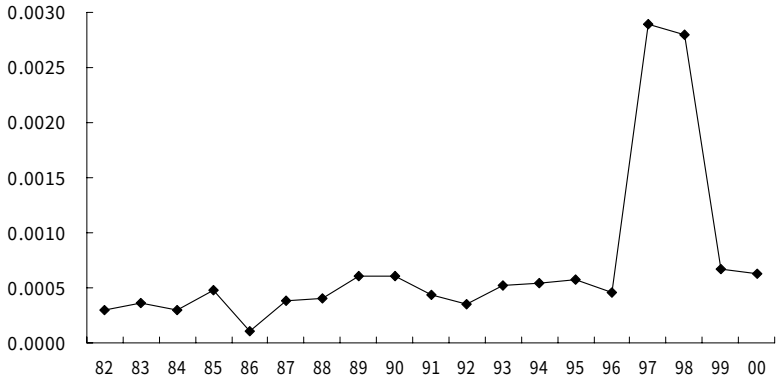
	상수	지니계수 모의실험결과	R^2	표본수
1982	-0.0031981 (-155.3514698)	0.0002936 (253.1768317)	0.9995634 <0.9995478>	30
1983	-0.0041658 (-151.8578044)	0.0003642 (235.7166049)	0.9994963 <0.9994783>	30
1984	-0.0031949 (-149.9263450)	0.0002958 (246.4221365)	0.9995391 <0.9995226>	30
1985	-0.0050027 (-73.8431912)	0.0004829 (126.5481951)	0.9982546 <0.9981923>	30
1986	-0.0011634 (-29.2066263)	0.0001092 (48.6715293)	0.9883183 <0.9879011>	30
1987	-0.0032822 (-78.3096627)	0.0003794 (160.6865705)	0.9989168 <0.9988781>	30
1988	-0.0027116 (-118.9264447)	0.0004078 (317.5152057)	0.9997223 <0.9997124>	30
1989	-0.0046750 (-194.4885351)	0.0006048 (446.7050724)	0.9998597 <0.9998547>	30
1990	-0.0056553 (-88.1664947)	0.0006011 (166.3678180)	0.9989894 <0.9989533>	30
1991	-0.0035853 (-153.3305292)	0.0004367 (331.5394665)	0.9997453 <0.9997362>	30
1992	-0.0028141 (-51.2086152)	0.0003502 (113.1265551)	0.9978169 <0.9977389>	30
1993	-0.0042403 (-52.8860107)	0.0005183 (114.7722517)	0.9978789 <0.9978031>	30
1994	-0.0056232 (-61.2834561)	0.0005409 (104.6449523)	0.9974496 <0.9973585>	30
1995	-0.0060267 (-101.6192787)	0.0005790 (173.3143099)	0.9990687 <0.9990355>	30
1996	-0.0049849 (-101.0342261)	0.0004593 (165.2800847)	0.9989761 <0.9989395>	30
1997	-0.0337352 (-113.3423566)	0.0028982 (172.8646675)	0.9990639 <0.9990304>	30
1998	-0.0522042 (-204.6070358)	0.0028020 (194.9652395)	0.9992639 <0.9992376>	30
1999	-0.0135189 (-171.0873387)	0.0006698 (150.4831318)	0.9987651 <0.9987210>	30
2000	-0.0117776 (-190.7296506)	0.0006246 (179.5791940)	0.9991325 <0.9991015>	30

주: ( ) 안은 t-값이고 < > 안은 자유도가 조정된 R^2(adjusted R^2)임.

[그림 Ⅳ-5] 무직가구비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 모의실험 결과



[그림 Ⅳ-6] 무직가구비 1%p당 지니계수 변화



전체적으로 각 연도별 무직가구비율에 대한 계수추정치는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Ⅳ-6] 참조). 무직가구비율 1%p당 지니계수의 변화는 0.0003~0.0007지니p 정도이다. 이 값은 2000년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할 때 약 0.11~0.25% 정도의 수준이다.

1997~1998년에는 일시적으로 민감도가 0.003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다. 이 기간은 경제위기로 대변되는 기간으로 무직가구의 비율이 급증하였던 시기인데 무직가구의 증가는 대부분 실업에 의한 것

으로 보인다. 예년의 경우에는 무직가구비율의 상승이 실업가구와 기타의 무직가구의 비율이 안정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직가구비율에 대한 지니계수의 변화율(민감도)이 대체로 비슷하였다. 반면에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는 그 동안 안정적이었던 실업가구와 기타의 무직가구간의 구성비가 깨어질 만큼 실업가구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여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민감도가 최대 10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시적으로 1997~1998년 동안 실업률이 급상승하면서 소득감소가 매우 컸던 데 기인한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이 재현된다면 무직가구비율의 상승에 의해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효과는 예년 수준을 크게 초과하여 일시적으로 크게 증폭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1995~2000년 동안 무직가구의 비율은 약 10% 수준에서 19%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00년 모의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무직가구의 비율 상승에 의한 지니계수의 변화는 0.00567지니p(=0.27682-0.27115)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 기간 동안 지니계수가 0.23743에서 0.27658로 0.03915지니p 상승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무직가구비율의 상승에 의한 지니계수의 상승기여도는 전체의 14.48%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큰 요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경제위기 이후에는 그 이전 기간에 비해 비록 취업가구라고 하더라도 불완전고용상태에 있는 가구의 비중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용된 취업자라고 하더라도 종전과 비교해볼 때 일용직·임시직 등과 같이 고용상태가 불완전한 취업자의 비율도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무직가구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무직가구와 차이가 없는 취업가구의 비율도 예년 수준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약 이런 추론이 맞는다면 실질적인 무직가구비율의 상승에 따른 최근 5년간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 비율은 14.48%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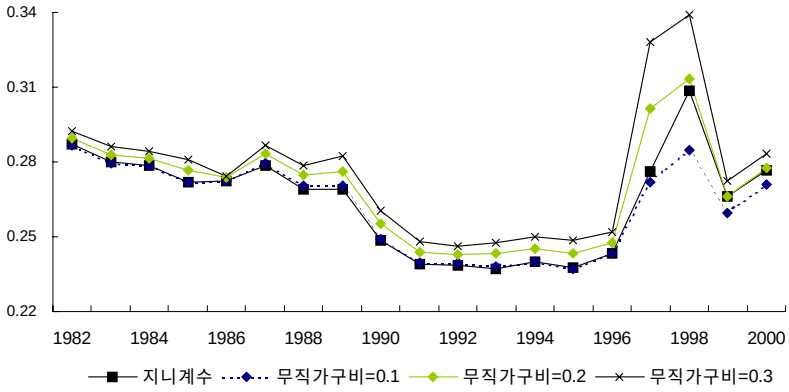
[그림 Ⅳ-7]에서는 무직가구의 비율을 특정한 값(예: 10%, 20%

또는 30%)로 고정시켜 놓은 가상적인 상황하에서 각 연도의 지니계수 추정치를 실제의 지니계수와 비교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무직가구의 비율이 10% 정도였기 때문에 실제의 지니계수와 가상적으로 무직가구의 비율을 10%에 고정시켜 놓고 추정한 지니계수 곡선은 1982~2000년 기간 동안에 거의 일치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실제의 무직가구비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두 곡선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998년의 경우에는 양자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무직가구의 비율이 급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가 전체적인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 효과는 경제위기가 가장 극심하였던 1998년에 가장 컸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표 Ⅳ-8> 무직가구비율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지니계수	무직가구비율		
		0.1	0.2	0.3
1982	0.28703	0.28681	0.28975	0.29253
1983	0.27977	0.27930	0.28295	0.28639
1984	0.27875	0.27855	0.28152	0.28431
1985	0.27200	0.27194	0.27680	0.28112
1986	0.27256	0.27256	0.27367	0.27446
1987	0.27879	0.27937	0.28318	0.28666
1988	0.26927	0.27067	0.27476	0.27867
1989	0.26890	0.27031	0.27637	0.28224
1990	0.24851	0.24898	0.25502	0.26055
1991	0.23885	0.23967	0.24404	0.24824
1992	0.23873	0.23951	0.24304	0.24613
1993	0.23695	0.23803	0.24325	0.24783
1994	0.23988	0.23981	0.24527	0.24999
1995	0.23743	0.23729	0.24311	0.24845
1996	0.24342	0.24311	0.24773	0.25195
1997	0.27637	0.27209	0.30127	0.32794
1998	0.30875	0.28497	0.31316	0.33920
1999	0.26609	0.25940	0.26614	0.27224
2000	0.27658	0.27115	0.27743	0.28321

[그림 Ⅳ-7] 무직가구비율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그림 Ⅳ-7]에서는 무직가구비율이 30%일 경우 지니계수는 더욱 상방에 위치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만큼 무직가구비율이 상승할수록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해준다.

<표 Ⅳ-9> 성별 세대주 구성 추이

(단위: 천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	7,969	9,571	11,355	12,958	14,312
남자	6,801 (85.3)	8,070 (84.3)	9,568 (84.3)	10,811 (83.4)	11,659 (81.5)
여자	1,169 (14.7)	1,501 (15.7)	1,787 (15.7)	2,147 (16.6)	2,653 (18.5)
시부	4,670	6,331	8,462	10,032	11,230
남자	3,945 (84.5)	5,293 (83.6)	7,166 (84.7)	8,442 (84.2)	9,209 (82.0)
여자	725 (15.5)	1,037 (16.4)	1,297 (15.3)	1,590 (15.8)	2,020 (18.0)
읍면부	3,299	3,241	2,892	2,926	3,082
남자	2,855 (86.5)	2,777 (85.7)	2,402 (83.1)	2,369 (81.0)	2,449 (79.5)
여자	444 (13.5)	464 (14.3)	490 (16.9)	557 (19.0)	633 (20.5)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 연도.

<표 Ⅳ-10> 가구주 성별 배우자 유무 구성 추이

(단위: 천명, %)

		혼인상태 계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없는 경우	
1980	전국	7,969	6,577	(82.5)	1,392	(17.5)
	남자	6,801	6,317	(92.9)	484	(7.1)
	여자	1,169	260	(22.2)	909	(77.8)
	시부	4,670	3,818	(81.8)	852	(18.2)
	남자	3,945	3,641	(92.3)	305	(7.7)
	여자	725	177	(24.5)	547	(75.5)
	읍·면부	3,299	2,759	(83.6)	540	(16.4)
	남자	2,855	2,676	(93.7)	179	(6.3)
	여자	444	83	(18.6)	361	(81.4)
1985	전국	9,571	7,791	(81.4)	1,780	(18.6)
	남자	8,070	7,450	(92.3)	620	(7.7)
	여자	1,501	341	(22.7)	1,160	(77.3)
	시부	6,331	5,111	(80.7)	1,220	(19.3)
	남자	5,293	4,854	(91.7)	439	(8.3)
	여자	1,037	256	(24.7)	781	(75.3)
	읍·면부	3,241	2,681	(82.7)	560	(17.3)
	남자	2,777	2,596	(93.5)	181	(6.5)
	여자	464	85	(18.2)	379	(81.8)
1990	전국	11,355	9,044	(79.6)	2,311	(20.4)
	남자	9,568	8,728	(91.2)	840	(8.8)
	여자	1,787	316	(17.7)	1,471	(82.3)
	시부	8,462	6,765	(79.9)	1,697	(20.1)
	남자	7,166	6,502	(90.7)	663	(9.3)
	여자	1,297	263	(20.3)	1,034	(79.7)
	읍·면부	2,892	2,279	(78.8)	614	(21.2)
	남자	2,402	2,226	(92.7)	176	(7.3)
	여자	490	53	(10.8)	437	(89.2)
1995	전국	12,958	10,060	(77.6)	2,898	(22.4)
	남자	10,811	9,723	(89.9)	1,089	(10.1)
	여자	2,147	337	(15.7)	1,810	(84.3)
	동부	10,032	7,838	(78.1)	2,194	(21.9)
	남자	8,442	7,551	(89.4)	891	(10.6)
	여자	1,590	287	(18.1)	1,302	(81.9)
	읍·면부	2,926	2,222	(75.9)	705	(24.1)
	남자	2,369	2,172	(91.7)	197	(8.3)
	여자	557	50	(8.9)	507	(91.1)
2000	전국	14,312	10,739	(75.0)	3,573	(25.0)
	남자	11,659	10,300	(88.3)	1,359	(11.7)
	여자	2,653	440	(16.6)	2,214	(83.5)
	시부	11,230	8,472	(75.4)	2,758	(24.6)
	남자	9,209	8,094	(87.9)	1,115	(12.1)
	여자	2,020	378	(18.7)	1,642	(81.3)
	읍·면부	3,082	2,268	(73.6)	815	(26.4)
	남자	2,449	2,206	(90.1)	243	(9.9)
	여자	633	62	(9.8)	572	(90.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 연도.

5.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의 변동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가. 여성가구주 가구의 변화 추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비중은 비록 속도가 매우 느리기는 하지만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Ⅳ-9>에서 보듯이 1980년에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14.7%였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18.5%에 이르렀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 가운데 배우자(남편)가 없는 가구의 비중은 1980년대에는 70%대 후반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80%대 초반으로 역시 상승하였다(<표 Ⅳ-10> 참조).

편모 또는 편부가정으로서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은 1980년에 10.1%였으며 이후 하락 추세를 보여 1995년에는 8.6%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0년에는 9.3%로 크게 반전되었다(<표 Ⅳ-11> 참조).

여성가구주 가구의 발생원인은 주로 배우자(남편)의 사망, 이혼 등이다. 이 가운데 1980년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망에 의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표 Ⅳ-12>에서 보듯이 40대 후반 이후의 연령층에서부터 남자사망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중년층 이상의 남자사망률은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어 배우자(남편)의 사망에 의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표 Ⅲ-8>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이혼에 의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11>에서 보듯이 최근 중년층의 이혼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여성가구주 가구도 증가 추

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11> 편부모와 미혼자녀 가구 구성 추이

(단위: %)

가족형태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					
부부	6.5	7.8	9.3	12.6	14.8
부부와 미혼자녀	57.4	57.8	58.0	58.6	57.8
편부(모)와 미혼자녀	10.1	9.7	8.7	8.6	9.4
부부와 양(편)친	0.6	0.8	0.9	1.1	1.1
부부와 자녀와 양(편)친	10.6	9.9	9.4	8.0	6.8
기타가족	14.8	14.0	13.8	11.2	10.1
동부					
부부	6.0	6.6	7.4	9.6	11.7
부부와 미혼자녀	58.6	60.3	61.3	62.4	61.5
편부(모)와 미혼자녀	10.1	9.8	8.9	8.9	9.9
부부와 양(편)친	0.4	0.4	0.6	0.6	0.7
부부와 자녀와 양(편)친	7.4	7.7	7.9	7.2	6.2
기타가족	17.5	15.2	14.0	11.3	9.9
읍·면부					
부부	7.0	10.1	14.8	23.1	26.5
부부와 미혼자녀	53.6	52.9	48.1	45.2	43.6
편부(모)와 미혼자녀	9.7	9.5	8.4	7.6	7.4
부부와 양(편)친	1.3	1.4	2.0	2.7	2.8
부부와 자녀와 양(편)친	14.6	14.2	13.5	10.6	9.1
기타가족	13.8	11.9	13.2	10.8	10.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 연도.

<표 Ⅳ-12> 연령별 사망률

(단위: 명/인구 천명, %)

연령	연도	전체		남자		여자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0세	1985	2,275	3.9	1,195	4.0	1,080	3.9
	1990	1,577	2.9	886	3.1	691	2.8
	1995	1,938	2.8	1,110	3.0	828	2.6
	2000	2,885	4.8	1,539	4.9	1,346	4.7
1~4세	1985	4,003	1.5	2,220	1.5	1,783	1.4
	1990	2,266	1.0	1,280	1.1	986	0.9
	1995	1,796	0.6	1,000	0.7	796	0.6
	2000	1,223	0.5	696	0.5	527	0.4
5~9세	1985	3,090	0.9	1,740	0.9	1,350	0.8
	1990	1,922	0.6	1,128	0.7	794	0.5
	1995	1,247	0.4	755	0.5	492	0.3
	2000	933	0.3	581	0.3	352	0.2
10~14세	1985	2,306	0.6	1,357	0.6	949	0.5
	1990	1,570	0.5	945	0.5	625	0.4
	1995	1,222	0.3	769	0.4	453	0.2
	2000	616	0.2	386	0.2	230	0.2
15~19세	1985	4,554	1.2	2,947	1.5	1,607	0.8
	1990	3,278	0.9	2,340	1.2	938	0.5
	1995	3,046	0.8	2,121	1.1	925	0.5
	2000	1,783	0.5	1,215	0.6	568	0.3
20~24세	1985	5,458	1.4	3,624	1.8	1,834	1.0
	1990	4,291	1.1	2,947	1.4	1,344	0.7
	1995	3,989	0.9	2,725	1.2	1,264	0.6
	2000	2,539	0.6	1,785	0.9	754	0.4
25~29세	1985	6,183	1.6	4,273	2.2	1,910	1.0
	1990	5,240	1.3	3,714	1.8	1,526	0.8
	1995	4,988	1.1	3,585	1.6	1,403	0.6
	2000	3,342	0.7	2,346	1.0	996	0.5
30~34세	1985	5,582	1.9	3,941	2.6	1,641	1.2
	1990	6,371	1.7	4,626	2.4	1,745	0.9
	1995	5,944	1.3	4,371	1.9	1,573	0.7
	2000	4,410	1.0	3,035	1.3	1,375	0.6
35~39세	1985	6,512	2.7	4,648	3.8	1,864	1.6
	1990	6,795	2.5	5,027	3.5	1,768	1.3
	1995	8,154	2.0	6,108	2.9	2,046	1.0
	2000	6,629	1.5	4,791	2.1	1,838	0.9
40~44세	1985	9,893	4.7	7,190	6.6	2,703	2.6
	1990	8,254	3.6	6,068	5.2	2,186	2.0
	1995	9,029	3.1	6,809	4.5	2,220	1.6
	2000	9,908	2.4	7,371	3.5	2,537	1.3
45~49세	1985	13,572	6.8	9,839	9.8	3,733	3.8
	1990	12,108	6.1	8,901	8.8	3,207	3.3
	1995	10,702	4.5	8,034	6.7	2,668	2.3
	2000	10,727	3.7	8,189	5.6	2,538	1.8

<표 Ⅳ-12>의 계속

(단위: 명/인구 천명, %)

연령			전체		남자		여자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사망자수	사망률
50~54세		1985	14,720	9.4	10,214	13.4	4,506	5.6
		1990	15,325	8.3	11,070	12.1	4,255	4.6
		1995	14,595	6.8	10,706	10.1	3,889	3.6
		2000	12,609	5.4	9,455	8.1	3,154	2.7
55~59세		1985	15,710	13.6	10,546	20.3	5,164	8.2
		1990	16,199	11.3	11,153	16.7	5,046	6.6
		1995	18,728	9.9	13,356	14.9	5,372	5.4
		2000	17,115	8.2	12,456	12.3	4,659	4.3
60~64세		1985	18,468	21.0	12,402	31.5	6,066	12.5
		1990	16,533	17.2	10,751	26.0	5,782	10.7
		1995	20,521	14.7	13,627	22.4	6,894	8.8
		2000	22,365	12.4	15,592	18.8	6,773	7.0
65~69세		1985	19,051	32.7	11,883	47.6	7,168	21.6
		1990	20,240	27.1	12,405	39.8	7,835	18.0
		1995	23,410	23.3	14,032	35.2	9,378	15.5
		2000	25,131	19.3	15,663	28.8	9,468	12.5
70~74세		1985	21,091	50.2	11,784	72.1	9,307	36.4
		1990	20,359	44.0	11,425	62.6	8,934	32.0
		1995	28,891	39.2	15,794	55.5	13,097	28.9
		2000	29,002	32.8	15,440	46.9	13,562	24.5
75~79세		1985	19,661	77.7	9,518	111.7	10,143	60.5
		1990	19,384	67.9	9,169	94.2	10,215	54.5
		1995	29,028	63.8	13,700	86.2	15,328	51.7
		2000	33,356	56.8	16,062	77.7	17,294	45.5
80세 이상		1985	27,770	165.3	9,470	225.1	18,300	145.4
		1990	29,290	145.4	9,735	180.4	19,555	132.9
	80~84세	1995	25,385	100.8	9,538	132.0	15,847	88.3
		2000	29,944	96.8	11,750	122.4	18,194	85.2
	85세 이상	1995	25,519	174.9	6,490	202.9	19,029	167.1
		2000	32,822	175.6	8,914	206.2	23,908	166.4
연령 미상		1985	163	0.0	104	0.0	59	0.0
		1990	0	0.0	0	0.0	0	0.0
		1995	0	0.0	0	0.0	0	0.0
		2000	7	0.0	0	0.0	7	0.0
계		1985	200,062	5.7	118,895	6.6	81,167	4.8
		1990	191,002	5.5	113,570	6.3	77,432	4.7
		1995	238,132	5.3	134,630	5.9	103,502	4.6
		2000	247,346	5.2	137,266	5.8	110,080	4.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 연도.

나. 모의실험 결과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① 가구주가 여성인 가구 전체 ② 가구주가 여성이고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가구 ③ 배우자(남편)가 없고 여성이 가구주이며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가구의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세 가지 경우 모두 무직가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상승할수록 지니계수 또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3> 참조). 이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커질수록 지니계수도 커짐으로써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킴을 의미한다.

여성가구주 가구 비율을 가상적으로 변화시킨 결과 추정된 지니계수를 해당 가구의 비율에 대해 회귀한 결과 지니계수에 대한 민감도는 무직가구의 경우보다 다소 작은 0.0004(2000년 기준) 정도로 추정되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가구비율 1%당 지니계수의 변화율은 가구비율의 절대수준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4>~<표 Ⅳ-16> 참조).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1995~2000년) 여성가구주의 가구 비율은 13~14% 정도에서 17~18%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모의실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가상적인 지니계수는 0.27470(13%의 경우)에서 0.27694(18%의 경우)로 나타나 지니계수가 0.00224지니p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95~2000년간 지니계수의 변화폭(0.03915지니p)을 기준으로 할 때 5.72% 정도에 이르는 수준이다(<표 Ⅳ-17>과 [그림 Ⅳ-8] 참조).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주 가구와, 배우자가 없고 미성년자를 부양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지난 5년간 해당 가구의 구성비율이 얼만큼 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으나, 가상적으로 그 비율을 각각 7%→10%, 5%→7%로

<표 Ⅳ-13> 여성가구주 비율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의 모의실험 결과(2000년, 가구기준)

(단위: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지니계수(총소득 기준)				B-A	C-A	D-A
	실제 지니계수 (A)	모의실험결과					
		(B)	(C)	(D)			
1	0.27658	0.26899	0.27217	0.27398	-0.00759	-0.00441	-0.00260
2		0.26948	0.27262	0.27442	-0.00710	-0.00396	-0.00216
3		0.26997	0.27307	0.27487	-0.00661	-0.00351	-0.00171
4		0.27046	0.27351	0.27531	-0.00612	-0.00307	-0.00127
5		0.27094	0.27395	0.27574	-0.00564	-0.00263	-0.00084
6		0.27142	0.27438	0.27618	-0.00516	-0.00220	-0.00040
7		0.27190	0.27481	0.27661	-0.00468	-0.00177	0.00003
8		0.27237	0.27524	0.27704	-0.00421	-0.00134	0.00046
9		0.27284	0.27567	0.27746	-0.00374	-0.00091	0.00088
10		0.27331	0.27609	0.27789	-0.00327	-0.00049	0.00131
11		0.27378	0.27651	0.27831	-0.00280	-0.00007	0.00173
12		0.27424	0.27692	0.27873	-0.00234	0.00034	0.00215
13		0.27470	0.27733	0.27914	-0.00188	0.00075	0.00256
14		0.27515	0.27774	0.27955	-0.00143	0.00116	0.00297
15		0.27560	0.27815	0.27996	-0.00098	0.00157	0.00338
16		0.27605	0.27855	0.28037	-0.00053	0.00197	0.00379
17		0.27650	0.27895	0.28077	-0.00008	0.00237	0.00419
18		0.27694	0.27934	0.28117	0.00036	0.00276	0.00459
19		0.27738	0.27974	0.28157	0.00080	0.00316	0.00499
20		0.27781	0.28012	0.28196	0.00123	0.00354	0.00538
21		0.27824	0.28051	0.28235	0.00166	0.00393	0.00577
22		0.27867	0.28089	0.28274	0.00209	0.00431	0.00616
23		0.27909	0.28127	0.28313	0.00251	0.00469	0.00655
24		0.27951	0.28164	0.28351	0.00293	0.00506	0.00693
25		0.27993	0.28201	0.28389	0.00335	0.00543	0.00731
26		0.28035	0.28238	0.28427	0.00377	0.00580	0.00769
27		0.28076	0.28275	0.28464	0.00418	0.00617	0.00806
28		0.28116	0.28311	0.28501	0.00458	0.00653	0.00843
29		0.28157	0.28346	0.28538	0.00499	0.00688	0.00880
30		0.28196	0.28381	0.28574	0.00538	0.00723	0.00916

주: B, C, D는 각각 여성가구주 가구, 남편없는 여성가구주 가구, 남편없고 미성년부양 여성가구주 가구를 나타내며 각각의 가구비율은 17.188%, 11.177%, 6.933%임.

<표 Ⅳ-14> 여성가구주비율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상수	지니계수 모의실험결과	R^2	표본수
1982	-0.0054871 (-117.7541234)	0.0003713 (141.4602183)	0.9986027 <0.9985528>	30
1983	-0.0088039 (-165.9626974)	0.0005308 (177.6373485)	0.9991134 <0.9990818>	30
1984	-0.0079822 (-252.8285444)	0.0004773 (268.4043986)	0.9996115 <0.9995976>	30
1985	-0.0069495 (-73.6986862)	0.0005049 (95.0501991)	0.9969104 <0.9968000>	30
1986	-0.0087108 (-93.2689339)	0.0005828 (110.7776334)	0.9977235 <0.9976422>	30
1987	-0.0083748 (-76.8620172)	0.0005833 (95.0457847)	0.9969101 <0.9967997>	30
1988	-0.0077582 (-128.2217706)	0.0005755 (168.8572222)	0.9990189 <0.9989839>	30
1989	-0.0072155 (-144.3539726)	0.0005266 (187.0292223)	0.9992002 <0.9991716>	30
1990	-0.0074237 (-162.8195678)	0.0005823 (226.7304039)	0.9994556 <0.9994362>	30
1991	-0.0069016 (-205.6952376)	0.0005357 (283.4465859)	0.9996516 <0.9996392>	30
1992	-0.0059864 (-131.4632622)	0.0004865 (189.6789239)	0.9992224 <0.9991946>	30
1993	-0.0068056 (-91.5434819)	0.0005899 (140.8719367)	0.9985910 <0.9985407>	30
1994	-0.0082853 (-168.5246207)	0.0006024 (217.5283359)	0.9994086 <0.9993875>	30
1995	-0.0079730 (-207.2663306)	0.0005551 (256.1755264)	0.9995735 <0.9995583>	30
1996	-0.0079862 (-148.9161488)	0.0005458 (180.6696570)	0.9991429 <0.9991123>	30
1997	-0.0149219 (-159.6340492)	0.0009664 (183.5407833)	0.9991695 <0.9991399>	30
1998	-0.0121021 (-148.2303302)	0.0010784 (234.4886003)	0.9994910 <0.9994729>	30
1999	-0.0057274 (-102.9889338)	0.0003734 (119.2004974)	0.9980333 <0.9979630>	30
2000	-0.0078181 (-179.8319139)	0.0004478 (182.8501290)	0.9991632 <0.9991333>	30

주: ( ) 안은 t-값이고 < > 안은 자유도가 조정된 R^2(adjusted R^2)임.

<표 Ⅳ-15> 무배우자 여성가구주 비율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상수	지니계수 모의실험결과	R^2	표본수
1998	-0.0105718 (-116.3925377)	0.0012958 (253.2673859)	0.9995637 <0.9995481>	30
1999	-0.0037717 (-50.9078123)	0.0003893 (93.2856748)	0.9967927 <0.9966782>	30
2000	-0.0045824 (-104.7278339)	0.0004016 (162.9578885)	0.9989467 <0.9989091>	30

주: ( ) 안은 t-값이고 < > 안은 자유도가 조정된 R^2(adjusted R^2)임.

<표 Ⅳ-16> 무배우자 미성년 부양 여성가구주 비율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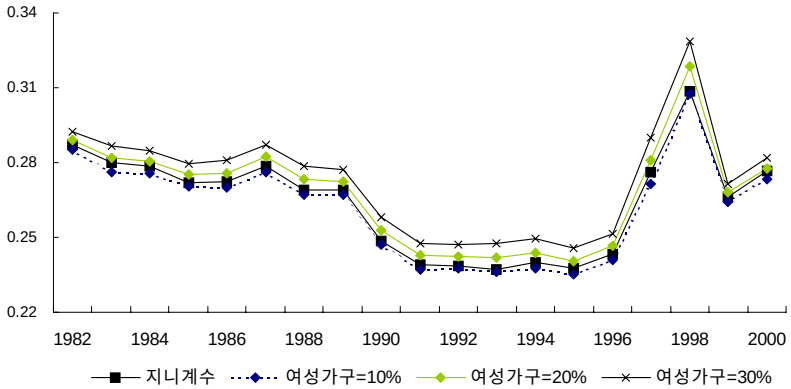
	상수	지니계수 모의실험결과	R^2	표본수
1982	-0.0045965 (-100.0649903)	0.0003584 (138.4955571)	0.9985424 <0.9984903>	30
1983	-0.0060046 (-137.9919311)	0.0004301 (175.4601698)	0.9990913 <0.9990589>	30
1984	-0.0076348 (-274.0481450)	0.0004766 (303.7257149)	0.9996966 <0.9996857>	30
1985	-0.0046047 (-47.9103070)	0.0004113 (75.9818957)	0.9951735 <0.9950011>	30
1986	-0.0060819 (-65.6095934)	0.0004765 (91.2567617)	0.9966490 <0.9965294>	30
1987	-0.0070285 (-67.7015435)	0.0006043 (103.3351518)	0.9973847 <0.9972913>	30
1988	-0.0065707 (-106.4452075)	0.0005992 (172.3345552)	0.9990581 <0.9990245>	30
1989	-0.0052138 (-97.1444471)	0.0004899 (162.0484803)	0.9989349 <0.9988968>	30
1990	-0.0055270 (-128.4314819)	0.0005777 (238.3253349)	0.9995073 <0.9994897>	30
1991	-0.0053119 (-144.2029334)	0.0005149 (248.1412171)	0.9995455 <0.9995292>	30
1992	-0.0044602 (-125.8687125)	0.0004818 (241.4058600)	0.9995198 <0.9995026>	30
1993	-0.0039214 (-52.9044760)	0.0004864 (116.5058414)	0.9979414 <0.9978679>	30
1994	-0.0055331 (-85.0618556)	0.0006189 (168.9019274)	0.9990195 <0.9989844>	30
1995	-0.0053829 (-160.7992506)	0.0005944 (315.2050377)	0.9997183 <0.9997082>	30
1996	-0.0045306 (-88.7867796)	0.0005417 (188.4552720)	0.9992122 <0.9991841>	30
1997	-0.0079230 (-81.6646679)	0.0008987 (164.4549144)	0.9989658 <0.9989288>	30
1998	-0.0066867 (-69.4783403)	0.0012622 (232.8355126)	0.9994838 <0.9994653>	30
1999	-0.0026233 (-48.3777550)	0.0004462 (146.0678176)	0.9986894 <0.9986426>	30
2000	-0.0028137 (-74.8342987)	0.0004058 (191.5849182)	0.9992377 <0.9992105>	30

주: ( ) 안은 t-값이고 < > 안은 자유도가 조정된 R^2(adjusted R^2)임.

<표 Ⅳ-17> 여성가구주 가구(전체) 비율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지니계수	여성가구				
		10%	15%	20%	25%	30%
1982	0.28703	0.28534	0.28725	0.28907	0.29080	0.29244
1983	0.27977	0.27637	0.27909	0.28170	0.28421	0.28661
1984	0.27875	0.27559	0.27802	0.28038	0.28268	0.28492
1985	0.27200	0.27026	0.27290	0.27535	0.27762	0.27969
1986	0.27256	0.26983	0.27286	0.27571	0.27837	0.28083
1987	0.27879	0.27642	0.27947	0.28232	0.28494	0.28733
1988	0.26927	0.26736	0.27031	0.27315	0.27586	0.27845
1989	0.26890	0.26703	0.26972	0.27232	0.27482	0.27721
1990	0.24851	0.24699	0.24996	0.25283	0.25562	0.25832
1991	0.23885	0.23736	0.24008	0.24273	0.24532	0.24784
1992	0.23873	0.23768	0.24017	0.24257	0.24488	0.24710
1993	0.23695	0.23617	0.23921	0.24210	0.24485	0.24744
1994	0.23988	0.23770	0.24077	0.24374	0.24662	0.24940
1995	0.23743	0.23507	0.23789	0.24064	0.24331	0.24590
1996	0.24342	0.24098	0.24378	0.24647	0.24905	0.25152
1997	0.27637	0.27127	0.27622	0.28098	0.28556	0.28994
1998	0.30875	0.30757	0.31306	0.31839	0.32357	0.32856
1999	0.26609	0.26419	0.26612	0.26795	0.26967	0.27127
2000	0.27658	0.27331	0.27560	0.27781	0.27993	0.28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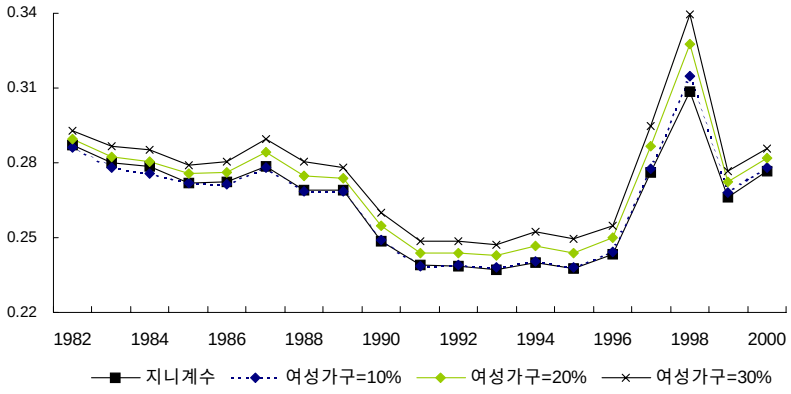
[그림 Ⅳ-8] 여성가구주 가구(전체) 비율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표 Ⅳ-18> 미성년자 부양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지니계수	여성가구비율				
		10%	15%	20%	25%	30%
1982	0.28703	0.28610	0.28794	0.28970	0.29137	0.29294
1983	0.27977	0.27814	0.28035	0.28247	0.28450	0.28644
1984	0.27875	0.27593	0.27834	0.28071	0.28301	0.28526
1985	0.27200	0.27167	0.27384	0.27583	0.27763	0.27922
1986	0.27256	0.27140	0.27389	0.27621	0.27834	0.28028
1987	0.27879	0.27797	0.28112	0.28407	0.28681	0.28933
1988	0.26927	0.26879	0.27186	0.27481	0.27764	0.28034
1989	0.26890	0.26867	0.27119	0.27360	0.27590	0.27809
1990	0.24851	0.24884	0.25178	0.25463	0.25741	0.26009
1991	0.23885	0.23874	0.24136	0.24391	0.24639	0.24878
1992	0.23873	0.23915	0.24160	0.24398	0.24630	0.24854
1993	0.23695	0.23802	0.24054	0.24292	0.24515	0.24723
1994	0.23988	0.24064	0.24381	0.24686	0.24978	0.25256
1995	0.23743	0.23804	0.24106	0.24400	0.24688	0.24970
1996	0.24342	0.24439	0.24716	0.24983	0.25240	0.25487
1997	0.27637	0.27760	0.28221	0.28664	0.29087	0.29489
1998	0.30875	0.31484	0.32127	0.32752	0.33357	0.33941
1999	0.26609	0.26802	0.27031	0.27251	0.27459	0.27656
2000	0.27658	0.27789	0.27996	0.28196	0.28389	0.28574

[그림 Ⅳ-9] 미성년자 부양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변화시켜본 결과 지난 5년간의 지니계수의 변화요인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주 가구와, 배우자가 없으면서 미성년자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상승함에 따른 소득분배 격차 확대 요인은 각각 전체의 4.34%(=0.00170÷0.03915)와 2.22%(=0.00087÷0.03915)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6. 노령화 진전에 따른 소득불평등도의 변화

가. 노인가구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비는 1990년대 중반 5%대 중반이었고 1998년에는 6.3%로 상승하였다. 그리고 불과 2년이 경과한 작년에는 7.3%로 급상승하였다. 앞의 제Ⅳ장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출생률 및 사망률 모두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표 Ⅳ-19> 참조).

출생률의 하락은 수년내 저연령층의 인구비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10~30년 후에는 청·장년 및 중년층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킨다. 반면에 노년층의 비중을 상승시킨다. 사망률의 하락을 통한 평균수명의 연장 역시 (간접적으로) 노인 인구비중의 상승을 가져다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출생률과 사망률이 하락하였으므로 최근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노령화가 진전되면서 가구주가 노인인 가구의 비중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Ⅳ-20> 참조).

<표 Ⅳ-21>에서 보듯이 노인가구는 대체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저소득층의 비중이 상승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인구 비중의 상승은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킬 개연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다만 국민연금 수혜자 비율이 빠

<표 Ⅳ-19> 연령별 인구구성 변화 추이

(단위: 명, %)

	1980	1985	1990	1995	2000
15세 미만	12,655,775 (33.8)	12,094,890 (29.9)	11,134,215 (25.7)	10,235,504 (23.0)	9,638,756 (21.0)
20세 미만	16,895,504 (45.2)	16,411,154 (40.6)	15,583,211 (35.9)	14,098,995 (31.6)	13,330,340 (29.0)
15~59	22,482,863 (60.1)	25,567,917 (63.3)	28,936,759 (66.7)	30,182,510 (67.7)	31,184,010 (67.8)
15~64	23,304,920 (62.3)	26,574,793 (65.7)	30,093,818 (69.4)	31,677,592 (71.1)	32,972,859 (71.7)
15~69	23,925,203 (64.00	27,297,610 (67.5)	30,994,132 (71.4)	32,721,571 (73.4)	34,348,981 (74.7)
20~59	18,243,134 (48.8)	21,251,653 (52.6)	24,487,763 (56.4)	26,319,019 (59.1)	27,492,426 (59.8)
20~64	19,065,191 (51.0)	22,258,529 (55.1)	25,644,822 (59.10	27,814,101 (62.4)	29,281,275 (63.7)
20~69	19,685,474 (52.6)	22,981,346 (56.9)	26,545,136 (61.2)	28,858,080 (64.8)	30,657,397 (66.7)
60세 이상	2,268,171 (6.1)	2,756,425 (6.8)	3,319,298 (7.7)	4,135,287 (9.3)	5,160,655 (11.2)
65세 이상	1,446,114 (3.9)	1,749,549 (4.3)	2,162,239 (5.0)	2,640,205 (5.9)	3,371,806 (7.3)
70세 이상	825,831 (2.2)	1,026,732 (2.5)	1,261,925 (2.9)	1,596,226 (3.6)	1,995,684 (4.3)
연령 미상	6 (0.0)	420 (0.001)	102 (0.0002)	409 (0.0009)	1,868 (0.004)
계	37,406,815 (100.0)	40,419,652 (100.0)	43,390,374 (100.0)	44,553,710 (100.0)	45,985,289 (100.0)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 연도.

<표 Ⅳ-20> 가구주 연령별 구성

(단위: 천가구, %)

	1980	1985	1990	1995	2000	
계	7,969(100.0)	9,571(100.0)	11,355(100.0)	12,958(100.0)	계	14,312 (100.0)
~15세	6 (0.1)	5 (0.1)	3 (0.0)	2 (0.0)	30세미만	1,436 (10.0)
15~19세	0 (0.0)	111 (1.2)	88 (0.8)	81 (0.6)		
20~24세	401 (5.0)	382 (4.0)	359 (3.2)	392 (3.0)		
25~29세	842 (10.6)	1,114 (11.6)	1,162 (10.2)	1,082 (8.3)		
30~34세	1,136 (14.3)	1,417 (14.8)	1,849 (16.3)	1,854 (14.3)	30~39세	3,788 (26.5)
35~39세	1,119 (14.0)	1,319 (13.8)	1,614 (14.2)	2,069 (16.0)		
40~44세	1,139 (14.3)	1,184 (12.4)	1,375 (12.1)	1,663 (12.8)	40~49세	3,807 (26.6)
45~49세	978 (12.3)	1,166 (12.2)	1,218 (10.7)	1,396 (10.8)		
50~54세	738 (9.3)	957 (10.0)	1,151 (10.1)	1,195 (9.2)	50~59세	2,511 (17.5)
55~59세	636 (8.0)	701 (7.3)	930 (8.2)	1,115 (8.6)		
60세~	974 (12.2)	1,217 (12.7)	1,606 (14.1)	2,109 (16.3)	60세~	2,770 (19.4)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 연도.

<표 Ⅳ-21>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소득분위별 가구주 연령분포(2000년 기준)

(단위: %)

	1	2	3	4	5	6	7	8	9	10	계
~19	0.84	0.44	0.87	0.00	0.45	0.00	0.22	0.00	0.00	0.23	0.31
20~24	2.09	2.64	2.17	1.47	2.03	0.88	0.88	0.00	0.89	0.23	1.34
25~29	4.18	6.59	9.13	7.58	7.88	5.04	5.74	2.29	2.68	1.58	5.30
30~34	9.39	11.65	13.26	14.11	12.39	13.60	10.82	13.30	8.05	7.69	11.44
35~39	11.69	20.66	17.39	17.47	15.77	19.52	19.87	20.41	19.69	15.84	17.79
40~44	12.32	17.58	14.13	16.84	21.17	22.15	23.84	19.27	20.36	25.11	19.20
45~49	8.98	10.55	11.52	14.53	13.96	10.96	15.89	17.89	16.33	15.84	13.59
50~54	7.52	9.01	11.74	9.47	12.16	12.06	9.49	12.16	17.90	15.84	11.68
55~59	8.98	5.71	8.91	7.37	4.73	7.68	5.52	5.96	7.83	9.05	7.19
60~	34.03	15.16	10.87	11.16	9.46	8.11	7.73	8.72	6.26	8.60	12.16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표 Ⅳ-21>에서 보는 것보다는 노인들의 저소득층 편입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이전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 타당한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등의 사회이전소득 수혜 등 사회이전소득이 크게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시장에서 획득하는 소득, 즉 사회이전소득을 포함하기 이전 단계(시장소득 단계)에서의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될 것임은 분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나. 모의실험 결과

노인은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경제력이 약하다. 이는 노인의 상당수가 은퇴기를 맞아 취업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득원이 작기 때문이다. 물론 노인 가운데에는 상당히 많은 富를 축적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두를 빈곤층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흐름(flow) 개념의 소득수준은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상승하면 그만큼 저소득층의 비중이 두터워짐을 의미하며 이는 곧 자연스럽게 소득격차를 확대시킬 개연성이 큼을 의미하게 된다.

연령별 인구구조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한 통계를 찾아보면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65세를 기준으로 노인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97년까지의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는, 가구주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 구성원의 연령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분류하고 실제의 나이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최고연령 구간은 60세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연령을 지닌 가구원 수에 대한 정보만 이용가능할 뿐, 65세 또는 70세 이상의 가구원 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따라서 노인가구비 또는 노인인구비에 대한 분석은 6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만 1982~

2000년 동안의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외의 연령, 즉 65세나 70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1998년 이후의 자료에서만 이용가능할 뿐, 1982~1997년 자료의 경우에는 그러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1982~1997년 자료의 경우에는 65세 또는 70세를 기준으로 인구비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였으며 대신 노인가구의 비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도시가계조사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60세 이상 노인이 1인 이상 있는 가구의 비중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 걸쳐 13~18%(1984년 제외) 정도였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는 그 비중이 상승 추세를 나타내어 2000년에는 약 2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인 가구의 비중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다(<표 Ⅳ-5> 참조).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비중은 1980년과 1985년에는 6.1%와 6.8%, 1990년과 1995년에는 7.7%와 9.3%, 2000년에는 11.2%로 상승하여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6]. 이는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현상, 즉 노인인구비중의 상승 추세가 최근들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과 일치한다.

1998년 이후의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는 모든 가구 구성원의 연령을 알 수 있다. 2000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비는 5.2%로 60세 이상의 인구비 8.5%에 비해 작으며, 70세 이상 인구비는 3.1%로 연령 상승에 따른 인구비중 하락세는 상당히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

36) 이 가운데 1995년과 2000년의 60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9.3%와 11.2%인 데 반해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비율은 6.1%와 8.5%로 각각 3.2%p와 2.7%p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도시 이외의 농어촌 지역에서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차이는 용인할 수 있는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통계청 자료에 나타난 65세 이상 인구비는 7.3%인데 도시가계조사 자료에 대한 추정치 5.2%와는 2.1%p라는 비교적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앞에서도 논의하였듯이 이 정도의 차이는 상당히 작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60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8.5%이지만 60세 이상 노인이 최소 1인 이상 있는 가구의 비중은 전체의 22.9%에 이른다. 2000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비를 가상적으로 변화시켰을 때의 모의실험 결과를 추정한 <표 Ⅳ-22>에 의하면, 만약 60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두 배 수준(약 17%, 가구비중으로 환산시 약 47%) 정도에 이르면 지니계수의 변화(0.27658→0.28749)는 0.01091지니p로 2000년 지니계수 대비 3.9%의 분배격차 확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경제여건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ceteris paribus) 단지 노령화의 결과 60세 이상 노인인구비가 두 배로 상승하면 계층별 소득격차는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약 4% 정도 확대됨을 시사해준다.

앞에서 노인인구비의 상승은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킬 개연성이 크다고 하였는데 모의실험 결과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2>~<표 Ⅳ-24>에서 보듯이 가상적으로 노인인구비를 증가시키는 경우 지니계수 역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1995~2000년 동안의 지니계수 변화(0.23743→0.27658)가 0.03915지니p였음을 참고로 하여 향후 5년간에도 이 정도의 소득격차 확대가 예상된다고 가정하고 또한 이 기간 동안 노령화에 따라 60세 이상 인구비가 8.5%에서 17%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면, 소득격차 확대요인 가운데 노령화에 의한 기여도가 전체의 27.9%(=0.01091지니p÷0.03915지니p)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실에서는 노령화 속도가 이 정도로 빠르지 않지만 최

<표 Ⅳ-22> 노인인구비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의 모의실험 결과 I (2000년, 가구기준)

(단위: %[노인인구가구비율])

60세 이상 노인인구비		지니계수(총소득 기준)		B - A
가구비	인구비	실제 지니계수 (A)	모의실험결과 (B)	
1	0.00374	0.27658	0.26615	-0.01043
2	0.00748		0.26664	-0.00994
3	0.01122		0.26712	-0.00946
4	0.01495		0.26760	-0.00898
5	0.01868		0.26809	-0.00849
6	0.02241		0.26857	-0.00801
7	0.02613		0.26905	-0.00753
8	0.02986		0.26953	-0.00705
9	0.03358		0.27001	-0.00657
10	0.03729		0.27048	-0.00610
11	0.04100		0.27096	-0.00562
12	0.04471		0.27144	-0.00514
13	0.04842		0.27191	-0.00467
14	0.05213		0.27238	-0.00420
15	0.05583		0.27286	-0.00372
16	0.05953		0.27333	-0.00325
17	0.06322		0.27380	-0.00278
18	0.06691		0.27427	-0.00231
19	0.07060		0.27474	-0.00184
20	0.07429		0.27521	-0.00137
21	0.07797		0.27568	-0.00090
22	0.08165		0.27614	-0.00044
23	0.08533		0.27661	0.00003
24	0.08901		0.27707	0.00049
25	0.09268		0.27754	0.00096
26	0.09635		0.27800	0.00142
27	0.10002		0.27846	0.00188
28	0.10368		0.27892	0.00234
29	0.10734		0.27938	0.00280
30	0.11100		0.27984	0.00326
31	0.11465		0.28030	0.00372
32	0.11831		0.28076	0.00418
33	0.12196		0.28121	0.00463
34	0.12560		0.28167	0.00509
35	0.12925		0.28212	0.00554
36	0.13289		0.28257	0.00599
37	0.13653		0.28303	0.00644
38	0.14016		0.28348	0.00690
39	0.14379		0.28393	0.00735
40	0.14742		0.28437	0.00779
41	0.15105		0.28482	0.00824
42	0.15467		0.28527	0.00869
43	0.15829		0.28571	0.00913
44	0.16191		0.28616	0.00958
45	0.16553		0.28660	0.01002
46	0.16914		0.28704	0.01046
47	0.17275		0.28749	0.01091
48	0.17636		0.28793	0.01135
49	0.17996		0.28837	0.01179
50	0.18356		0.28880	0.01222

주: 도시가구조사 자료에 나타난 2000년의 60세 이상 인구비는 가구기준으로 22.937%, 인구기준으로 8.510%임.

<표 Ⅳ-23> 노인인구비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의 모의실험 결과Ⅱ(2000년, 가구기준)

(단위: %[노인인구가구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비		지니계수(총소득 기준)		B - A
가구비	인구비	실제 지니계수 (A)	모의실험결과 (B)	
1	0.00344	0.27658	0.26843	-0.00815
2	0.00688		0.26901	-0.00757
3	0.01031		0.26958	-0.00700
4	0.01373		0.27016	-0.00642
5	0.01715		0.27073	-0.00585
6	0.02057		0.27131	-0.00528
7	0.02397		0.27188	-0.00470
8	0.02738		0.27245	-0.00413
9	0.03077		0.27301	-0.00357
10	0.03416		0.27358	-0.00300
11	0.03755		0.27415	-0.00243
12	0.04092		0.27471	-0.00187
13	0.04430		0.27527	-0.00131
14	0.04767		0.27583	-0.00075
15	0.05103		0.27640	-0.00018
16	0.05438		0.27695	0.00037
17	0.05773		0.27751	0.00093
18	0.06108		0.27807	0.00149
19	0.06442		0.27862	0.00204
20	0.06775		0.27917	0.00259
21	0.07108		0.27973	0.00315
22	0.07440		0.28028	0.00370
23	0.07772		0.28083	0.00425
24	0.08103		0.28137	0.00479
25	0.08434		0.28192	0.00534
26	0.08764		0.28246	0.00588
27	0.09094		0.28301	0.00643
28	0.09423		0.28355	0.00697
29	0.09751		0.28409	0.00751
30	0.10079		0.28463	0.00805
31	0.10406		0.28516	0.00858
32	0.10733		0.28570	0.00912
33	0.11059		0.28623	0.00965
34	0.11385		0.28677	0.01019
35	0.11710		0.28730	0.01072
36	0.12035		0.28783	0.01125
37	0.12359		0.28836	0.01178
38	0.12683		0.28888	0.01230
39	0.13006		0.28941	0.01283
40	0.13328		0.28993	0.01335
41	0.13650		0.29045	0.01387
42	0.13972		0.29097	0.01439
43	0.14293		0.29149	0.01491
44	0.14613		0.29201	0.01543
45	0.14933		0.29252	0.01594
46	0.15253		0.29304	0.01646
47	0.15572		0.29355	0.01697
48	0.15890		0.29406	0.01748
49	0.16208		0.29457	0.01799
50	0.16525		0.29508	0.01850

주: 도시가구조사 자료에 나타난 2000년의 65세 이상 인구비는 가구기준으로 15.331%, 인구기준으로 5.214%임.

<표 Ⅳ-24> 노인인구비 조정에 따른 지니계수의 모의실험 결과Ⅲ(2000년, 가구기준)

(단위: %[노인인구가구비율])

70세 이상 노인인구비		지니계수(총소득 기준)		B - A
가구비	인구비	실제 지니계수 (A)	모의실험결과 (B)	
1	0.00310	0.27658	0.27097	-0.00561
2	0.00619		0.27159	-0.00499
3	0.00927		0.27222	-0.00436
4	0.01235		0.27285	-0.00373
5	0.01542		0.27347	-0.00311
6	0.01848		0.27410	-0.00248
7	0.02153		0.27472	-0.00186
8	0.02458		0.27535	-0.00123
9	0.02762		0.27597	-0.00061
10	0.03065		0.27659	0.00001
11	0.03367		0.27721	0.00063
12	0.03669		0.27783	0.00125
13	0.03970		0.27845	0.00187
14	0.04270		0.27907	0.00249
15	0.04570		0.27968	0.00310
16	0.04868		0.28030	0.00372
17	0.05166		0.28091	0.00433
18	0.05464		0.28153	0.00495
19	0.05760		0.28214	0.00556
20	0.06056		0.28275	0.00617
21	0.06351		0.28336	0.00678
22	0.06645		0.28397	0.00739
23	0.06939		0.28458	0.00800
24	0.07232		0.28519	0.00861
25	0.07525		0.28579	0.00921
26	0.07816		0.28640	0.00982
27	0.08107		0.28700	0.01042
28	0.08397		0.28761	0.01103
29	0.08687		0.28821	0.01163
30	0.08976		0.28881	0.01223
31	0.09264		0.28941	0.01283
32	0.09551		0.29001	0.01343
33	0.09838		0.29061	0.01403
34	0.10124		0.29121	0.01463
35	0.10409		0.29180	0.01522
36	0.10694		0.29240	0.01582
37	0.10978		0.29299	0.01641
38	0.11262		0.29358	0.01700
39	0.11544		0.29418	0.01760
40	0.11826		0.29477	0.01819
41	0.12108		0.29536	0.01878
42	0.12388		0.29595	0.01937
43	0.12669		0.29653	0.01995
44	0.12948		0.29712	0.02054
45	0.13227		0.29770	0.02112
46	0.13505		0.29829	0.02171
47	0.13782		0.29887	0.02229
48	0.14059		0.29945	0.02287
49	0.14335		0.30004	0.02346
50	0.14611		0.30062	0.02403

주: 도시가구조사 자료에 나타난 2000년의 70세 이상 인구비는 가구기준으로 9.983%, 인구기준으로 3.060%임.

<표 Ⅳ-25> 60세 이상 노인가구비율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상수	지니계수 모의실험결과	R2	표본수
1982	-0.0071582 (-355.5537360)	0.0004179 (608.2530566)	0.9998703 <0.9998676>	50
1983	-0.0075419 (-284.8430078)	0.0004061 (449.3970391)	0.9997624 <0.9997574>	50
1984	0.0003064 (16.4349716)	-0.0000359 (-56.3669135)	0.9851173 <0.9848073>	50
1985	-0.0047698 (-283.0431628)	0.0002938 (510.8644366)	0.9998161 <0.9998123>	50
1986	-0.0077787 (-138.3654930)	0.0004984 (259.7549325)	0.9992891 <0.9992743>	50
1987	-0.0102611 (-104.9138225)	0.0006203 (185.8318248)	0.9986120 <0.9985831>	50
1988	-0.0126186 (-79.8266171)	0.0007257 (134.5049183)	0.9973539 <0.9972987>	50
1989	-0.0045340 (-59.0474462)	0.0003271 (124.8025236)	0.9969277 <0.9968637>	50
1990	-0.0089328 (-93.6147304)	0.0005805 (178.2462922)	0.9984915 <0.9984601>	50
1991	-0.0061993 (-121.2496337)	0.0003771 (216.1008796)	0.9989732 <0.9989518>	50
1992	-0.0072456 (-226.9330732)	0.0004482 (411.2683806)	0.9997163 <0.9997104>	50
1993	-0.0110405 (-196.5450549)	0.0006761 (352.6426169)	0.9996142 <0.9996061>	50
1994	-0.0092207 (-367.8504328)	0.0005047 (589.9794256)	0.9998621 <0.9998592>	50
1995	-0.0096150 (-379.3102716)	0.0005172 (597.8505093)	0.9998657 <0.9998629>	50
1996	-0.0123955 (-433.7377751)	0.0006133 (628.8063134)	0.9998786 <0.9998761>	50
1997	-0.0229145 (-611.9223606)	0.0010735 (839.9296241)	0.9999320 <0.9999305>	50
1998	-0.0281213 (-482.1809950)	0.0013878 (697.2467581)	0.9999013 <0.9998992>	50
1999	-0.0103705 (-599.3336192)	0.0004613 (781.1713650)	0.9999213 <0.9999197>	50
2000	-0.0107044 (-404.4666490)	0.0004624 (511.9776039)	0.9998169 <0.9998131>	50

주: ( ) 안은 t-값이고 < > 안은 자유도가 조정된 R^2(adjusted R^2)임.

<표 Ⅳ-26> 65세 이상 노인가구비율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상수	지니계수 모의실험결과	R^2	표본수
1982	0.0006315 (1.5628109)	0.0010663 (77.3169426)	0.9920344 <0.9918684>	50
1983	0.0004753 (1.6423475)	0.0006250 (63.2784306)	0.9881545 <0.9879077>	50
1984	-0.0002888 (-1.3687114)	0.0014668 (203.7090926)	0.9988446 <0.9988206>	50
1985	0.0008920 (2.6282254)	0.0006737 (58.1597968)	0.9860081 <0.9857166>	50
1986	0.0009462 (2.4652969)	0.0015795 (120.5805136)	0.9967095 <0.9966410>	50
1987	-0.0016215 (-9.3093154)	0.0014850 (249.7981262)	0.9992313 <0.9992153>	50
1988	-0.0011178 (-7.6750569)	0.0012941 (260.3555037)	0.9992924 <0.9992776>	50
1989	-0.0002842 (-1.4468886)	0.0012533 (186.9365947)	0.9986283 <0.9985997>	50
1990	-0.0004919 (-2.7462032)	0.0011664 (190.8066288)	0.9986833 <0.9986559>	50
1991	-0.0002981 (-1.3853716)	0.0010581 (144.0963034)	0.9976936 <0.9976456>	50
1992	-0.0000474 (-0.1941497)	0.0008804 (105.5788215)	0.9957123 <0.9956230>	50
1993	-0.0000537 (-0.1139556)	0.0012715 (79.0668349)	0.9923804 <0.9922217>	50
1994	-0.0011983 (-2.5997621)	0.0011793 (74.9662231)	0.9915313 <0.9913549>	50
1995	-0.0018592 (-5.1231420)	0.0011258 (90.8972862)	0.9942240 <0.9941037>	50
1996	-0.0021925 (-7.1900422)	0.0010559 (101.4567693)	0.9953585 <0.9952618>	50
1997	-0.0084073 (-20.1403648)	0.0025805 (181.1277974)	0.9985390 <0.9985086>	50
1998	-0.0192159 (-327.5137542)	0.0014045 (701.3758976)	0.9999024 <0.9999004>	50
1999	-0.0071961 (-328.9272707)	0.0004782 (640.4470261)	0.9998830 <0.9998806>	50
2000	-0.0084140 (-211.1554658)	0.0005441 (400.0537374)	0.9997002 <0.9996939>	50

주: ( ) 안은 t-값이고 < > 안은 자유도가 조정된 R^2(adjusted R^2)임.

<표 Ⅳ-27> 70세 이상 노인가구비율 모의실험 결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상수	지니계수 모의실험결과	R^2	표본수
1982	0.0037198 (5.3111310)	0.0017338 (72.5339997)	0.9909591 <0.9907707>	50
1983	0.0047349 (5.9488012)	0.0011294 (41.5770332)	0.9729829 <0.9724200>	50
1984	0.0027227 (4.9363003)	0.0019658 (104.4264938)	0.9956176 <0.9955263>	50
1985	0.0015729 (4.6288999)	0.0011170 (96.3160331)	0.9948524 <0.9947452>	50
1986	0.0024974 (5.4320052)	0.0014588 (92.9691390)	0.9944772 <0.9943622>	50
1987	0.0029304 (5.2839953)	0.0012869 (67.9901975)	0.9897231 <0.9895090>	50
1988	0.0014607 (4.3629952)	0.0016694 (146.1065467)	0.9977565 <0.9977098>	50
1989	0.0012468 (4.1029810)	0.0014888 (143.5593676)	0.9976764 <0.9976280>	50
1990	0.0013731 (6.1778749)	0.0004343 (57.2553667)	0.9855690 <0.9852684>	50
1991	0.0016527 (5.0744427)	0.0011724 (105.4708274)	0.9957036 <0.9956141>	50
1992	0.0016706 (4.6460567)	0.0010795 (87.9618343)	0.9938345 <0.9937061>	50
1993	0.0023789 (4.4152072)	0.0013536 (73.6061620)	0.9912182 <0.9910353>	50
1994	0.0013145 (2.4373688)	0.0013168 (71.5435728)	0.9907093 <0.9905158>	50
1995	0.0012617 (2.5658118)	0.0012352 (73.6009801)	0.9912170 <0.9910340>	50
1996	0.0021698 (3.7189019)	0.0011421 (57.3564456)	0.9856191 <0.9853195>	50
1997	-0.0011445 (-1.6557442)	0.0034854 (147.7385918)	0.9978057 <0.9977600>	50
1998	-0.0090376 (-121.9986752)	0.0010761 (425.6183105)	0.9997351 <0.9997296>	50
1999	-0.0052099 (-200.1772574)	0.0005688 (640.4011470)	0.9998830 <0.9998805>	50
2000	-0.0060243 (-216.8619642)	0.0006053 (638.3875697)	0.9998822 <0.9998798>	50

주: ( ) 안은 t-값이고 < > 안은 자유도가 조정된 R^2(adjusted R^2)임.

근의 노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최소한 향후 5년간의 60세 이상 노인의 인구비는 최소한 2%p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노령화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 효과는 전체의 약 7%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표 Ⅳ-22> 참조).

노인인구에 대한 가구비를 기준으로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60세 이상 가구주 비율이 1%p 상승할 때 지니계수는 0.0004624지니p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65세 이상 및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0.0005441지니p와 0.0006053지니p로 추정되었다. 이는 연령이 상승할수록 가구비율 1단위당 지니계수의 상승폭이 커짐을 시사해준다. 또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이 더 낮아져 저소득층의 비중이 더욱 두터워짐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고령자일수록 그만큼 소득 획득이 더 어려워진다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보더라도 타당한 결론인 것으로 생각된다(<표 Ⅳ-25>~<표 Ⅳ-27> 참조).

1995~2000년 동안 지니계수는 0.03915지니p 상승하였다. 이 기간 동안 65세 이상 인구비는 5.9%에서 7.3%로 약 20% 상승하였으며 60세 또는 70세 이상 인구비의 경우에도 20% 정도 상승하였다. 지난 5년간 노인인구비가 약 20% 정도 상승하였다는 전제하에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한 <표 Ⅳ-22>~<표 Ⅳ-24>의 모의실험결과를 토대로, 60세, 65세, 70세 이상의 노인가구비(노인인구비)가 각각 23%→28%(8.5%→10.4%), 15%→18%(5.1%→6.4%), 10%→12%(3.1%→3.7%)로 변화하였다면, 지니계수 변화의 절대수준은 각각 0.00231(0.00231), 0.00167(0.00222), 0.00124(0.00124)지니p씩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각각 지난 5년간의 지니계수 변화폭(0.03915지니p)의 5.90%(5.90%), 4.27%(5.67%), 3.17%(3.17%)에 해당된다.

노인인구비 상승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 효과는, 기준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작아진다. 이는 인구피라미드의 구조상 노인인구 중

고연령층일수록 구성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인인구비의 변화가 소득분배 구조에 미치는 영향의 절대 규모도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령화가 급진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70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70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그렇지만 추후에 인구의 노령화가 지속되어 70세 이상 인구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70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 상승시의 지니계수 변화 효과는 그만큼 더 커질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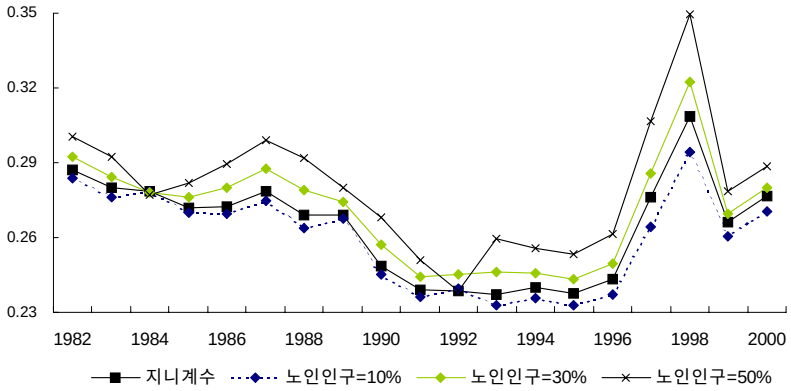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에는, 가상적으로 60세 이상 노인가구비를 10%와 30%로 가정하였을 경우의 지니계수 곡선 사이에 실제의 지니계수가 위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노인인구비가 급상승하면서 지니계수가 점차 60세 이상의 노인가구비를 30%로 가정하였을 경우의 가상적인 지니계수 곡선에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Ⅳ-10] 참조).

65세 이상 또는 70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다만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982~2000년 동안 가구비중이 17.0%에서 22.9%로 5.9%p 상승한 반면,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비는 1.7%에서 15.3%로 13.6%p, 70세 이상 노인가구비는 0.5%에서 10.0%로 9.5%p 상승하였다(<표 Ⅳ-5> 참조). 이는 곧 고령층으로 갈수록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율이 더욱 커짐을 의미하는바, 상대적으로 고령의 노인인구 비중 상승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해 준다([그림 Ⅳ-11]~[그림 Ⅳ-12] 참조).

<표 Ⅳ-28> 60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지니계수	노인가구비				
		10%	20%	30%	40%	50%
1982	0.28703	0.28404	0.2883	0.29248	0.29659	0.30063
1983	0.27977	0.27628	0.28044	0.28451	0.28848	0.29235
1984	0.27875	0.27869	0.27840	0.27804	0.27762	0.27713
1985	0.27200	0.27016	0.27316	0.27610	0.27898	0.28180
1986	0.27256	0.26974	0.27494	0.27993	0.28471	0.28930
1987	0.27879	0.27468	0.28125	0.28747	0.29333	0.29885
1988	0.26927	0.26382	0.27168	0.27895	0.28566	0.29182
1989	0.26890	0.26759	0.27116	0.27444	0.27744	0.28017
1990	0.24851	0.24533	0.25151	0.25732	0.26279	0.26793
1991	0.23885	0.23639	0.24036	0.24413	0.24773	0.25114
1992	0.23873	0.23959	0.24055	0.24504	0.24941	0.23873
1993	0.23695	0.23264	0.23961	0.24638	0.25295	0.25931
1994	0.23988	0.23569	0.24083	0.24588	0.25084	0.25571
1995	0.23743	0.23297	0.23824	0.24342	0.24850	0.25349
1996	0.24342	0.23714	0.24339	0.24952	0.25556	0.26149
1997	0.27637	0.26417	0.27505	0.28579	0.29640	0.30686
1998	0.30875	0.29447	0.30857	0.32247	0.33615	0.34960
1999	0.26609	0.26032	0.26500	0.26962	0.27417	0.27866
2000	0.27658	0.27048	0.27521	0.27984	0.28437	0.288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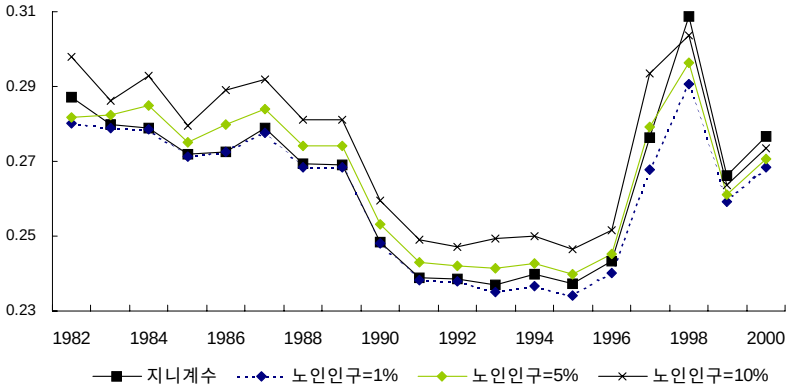
[그림 Ⅳ-10] 60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표 Ⅳ-29> 65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지니계수	노인가구비				
		1%	5%	10%	20%	30%
1982	0.28703	0.28015	0.28189	0.29801	0.31022	0.32111
1983	0.27977	0.27892	0.28227	0.28628	0.29365	0.30003
1984	0.27875	0.27852	0.28499	0.29296	0.30845	0.32322
1985	0.27200	0.27130	0.27497	0.27937	0.28741	0.29432
1986	0.27256	0.27259	0.27996	0.28899	0.30625	0.32228
1987	0.27879	0.27747	0.28393	0.29189	0.30741	0.32233
1988	0.26927	0.26844	0.27406	0.28099	0.29449	0.30748
1989	0.26890	0.26850	0.27412	0.28101	0.29430	0.30690
1990	0.24851	0.24794	0.25317	0.25957	0.27192	0.28364
1991	0.23885	0.23816	0.24302	0.24897	0.26038	0.27106
1992	0.23873	0.23792	0.24216	0.24730	0.25705	0.26597
1993	0.23695	0.23502	0.24147	0.24925	0.26377	0.27173
1994	0.23988	0.23677	0.24283	0.25012	0.26368	0.27570
1995	0.23743	0.23423	0.23982	0.24656	0.25921	0.27063
1996	0.24342	0.24021	0.24535	0.25157	0.26330	0.27399
1997	0.27637	0.26783	0.27930	0.29343	0.32083	0.34689
1998	0.30875	0.29053	0.29633	0.30354	0.31781	0.33187
1999	0.26609	0.25922	0.26120	0.26366	0.26853	0.27332
2000	0.27658	0.26843	0.27073	0.27358	0.27917	0.28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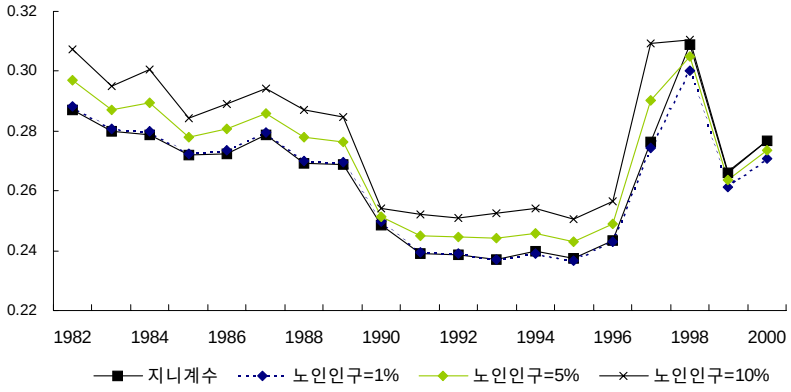
[그림 Ⅳ-11] 65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표 Ⅳ-30> 70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지니계수	노인가구비						
		1%	3%	5%	10%	15%	20%	30%
1982	0.28703	0.28813	0.29251	0.29684	0.30745	0.31768	0.32746	0.34535
1983	0.27977	0.28057	0.28391	0.28720	0.29511	0.30255	0.30945	0.32130
1984	0.27875	0.28002	0.28466	0.28926	0.30062	0.31168	0.32239	0.34248
1985	0.27200	0.27245	0.27518	0.27788	0.28447	0.29084	0.29695	0.30831
1986	0.27256	0.27373	0.27721	0.28067	0.28920	0.29751	0.30555	0.32053
1987	0.27879	0.27935	0.28273	0.28606	0.29414	0.30185	0.30914	0.32232
1988	0.26927	0.27008	0.27395	0.27779	0.28719	0.29632	0.30518	0.32199
1989	0.26890	0.26963	0.27305	0.27644	0.28479	0.29293	0.30085	0.31590
1990	0.24851	0.24982	0.25003	0.25121	0.25407	0.25675	0.25927	0.26371
1991	0.23885	0.23952	0.24234	0.24513	0.25196	0.25858	0.26494	0.27684
1992	0.23873	0.23911	0.24179	0.24444	0.25091	0.25713	0.26309	0.27408
1993	0.23695	0.23712	0.24062	0.24406	0.25244	0.26044	0.26804	0.28187
1994	0.23988	0.23894	0.24236	0.24574	0.25393	0.26176	0.26917	0.28263
1995	0.23743	0.23665	0.23985	0.24300	0.25066	0.25797	0.26490	0.27751
1996	0.24342	0.24287	0.24601	0.24910	0.25656	0.26361	0.27021	0.28195
1997	0.27637	0.27438	0.28227	0.29011	0.30946	0.32843	0.34694	0.38232
1998	0.30875	0.30026	0.30254	0.30481	0.31043	0.31599	0.32148	0.33225
1999	0.26609	0.26126	0.26244	0.26362	0.26655	0.26946	0.27234	0.27803
2000	0.27658	0.27097	0.27222	0.27347	0.27659	0.27968	0.28275	0.28881

[그림 Ⅳ-12] 70세 이상 노인가구비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 변화의 모의실험 결과



7. 종 합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 추이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에도 기인하지만 그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물론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요인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직종별·업종별·산업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는 데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인구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의 변화에 기인하는 측면도 상당히 크다.

지난 5년간 (1995~2000년)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가구기준 지니계수는 0.23743에서 0.27658로 0.03915지니p 상승하였다.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추정해본 결과 이 가운데 실업가구를 포함한 무직가구의 비율 상승에 의한 기여분이 0.00567지니p,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 상승에 의한 기여분이 0.00224지니p, 60세 이상 노인의 가구비중(또는 인구비중) 상승에 의한 기여분이 0.00231지니p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한 총효과는 0.01022지니p로 지니계수 변화량의 26.10%에 이른다. 물론 이는 무직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가 전혀 중복(overlap)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타당한 것이므로 중복도를 감안하면 세 가지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 기여도는 이보다는 낮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상기의 세 가지 요인이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요인으로서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2000년 자료를 기준으로 다른 조건은 모두 2000년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전제한 후, 무직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의 비율을 중복도를 감안하여 1995년의 비율로 가상적으로 변화시켜 본 결과, 지니계수는 0.26781~0.26940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00년의

지니계수 0.27658에 비해 0.00718~0.00877지니p가 작은 것으로 1995~2000년간 지니계수 추정치 차이(0.03915지니p)의 18.34~22.40% 정도이다[37].

따라서 무직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간의 중복도를 감안하면 대략 최근 5년간의 지니계수 변화(소득격차 확대) 요인 가운데 실업률, 이혼율의 상승과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무직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및 노인가구비율의 상승에 의한 소득분배 격차 확대 기여도는 대략 2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31>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무직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의 중복도

(단위: %)

	1995년	2000년
무직가구비 (A)	10.228	18.603
여성가구주 가구비 (B)	14.169	17.188
60세 이상 노인인구비 (C)	18.448	22.937
$A \cap B$	4.182	6.247
$A \cap C$	4.036	8.290
$B \cap C$	3.265	4.443
$A \cap B \cap C$	1.219	1.964
$A \cap B^c \cap C^c$	3.229	6.029
$A^c \cap B \cap C^c$	7.940	8.462
$A^c \cap B^c \cap C$	12.365	12.168
$A \cap B \cap C^c$	2.963	4.283
$A \cap B^c \cap C$	2.817	6.326
$A^c \cap B \cap C$	2.046	2.479

37) 중복도 제거시의 지니계수 변화 효과를 범위로 추정한 것은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나타난 비율과 각종 통계자료에서 나타난 무직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간의 비율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범위를 둠에 따라 구간으로 추정된 것이다.

무직가구의 비율 상승에 의한 지니계수 증가 기여분은 14.48%인데 이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무직가구의 비율 상승분만을 계산한 것일뿐, 실제로 1997~1998년의 경제위기 이후 불완전 고용 형태로 취업한 가구 중 경제력 측면에서 사실상 무직가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취업가구의 비중이 종전보다 증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직가구 비율 상승에 의한 지니계수의 상승 효과, 즉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 효과는 14.48%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1997~1998년의 경제위기 기간 동안에 보았듯이 일반적인 경기침체가 아니라 위기상황과 비슷한 국면에서의 무직가구비율 상승은 지니계수를 폭발적으로 상승시킨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직가구 비율 상승에 의한 최근 5년간의 소득격차 확대 기여도는 더 높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밖에 여성가구주 가구와 노인인구의 비중 증가와 같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지니계수 상승효과는 각각 5.72%와 5.90%, 도합 11.62%이다[38].

일반적으로 최근의 소득분배 격차 확대가 거의 대부분 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상기의 두 가지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 기여도가 1%를 초과한다는 점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성가구주 가구 비중과 노인인구비의 증가라는 사회현상적 여건 변화와 같은 요인 외에도 교육수준과 당사자의 노력 차이, 능력의 차이 등과 같이 비록 수학적·통계학적인 분석이 용이하지 않아 실증적인 검증이 어렵지만 소득분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수히 많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비경제적 요인의 변화가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분배를 논함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38) 양자간의 중복도를 제외하면 그 효과는 10%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여야 하며, 소득재분배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비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의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전술하였듯이 당분간 우리 경제는 선진국으로의 도약 과정에서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격차가 선진국형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당분간 이혼율도 계속 증가하고 노인인구비도 선진국 수준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같은 비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도 소득격차는 확대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경제로의 도약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산업개편 및 구조조정의 여파와 경기순환상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때에 잘 나타나는 소득격차 확대 현상이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지만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가 반드시 모두 부정적인 측면에서 비롯되거나 부정적인 효과만을 창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정 수준의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V. 맺 음 말

본장에서는 소득분배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허와 실을 살펴보고, 지난 20년간의 소득분배구조의 변화 추이와 분배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소득분배 추이와 결정요인에 대한 추세적 변화방향을 토대로 향후의 소득분배구조를 조망해본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자료의 범위와 분석방법론의 타당성에 대해 짚어보면서 향후의 보완과제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1. 소득분배를 보는 시각에 대한 일고

소득분배의 격차는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주어진 능력과 환경의 차이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당사자들간의 노력의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도 매우 크다. 연령적으로도 주어진 역할이 매우 달라서 학생, 근로자, 사업가, 교수, 공무원 등 인적구성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차이가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를 가져다줌은 물론이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고려없이 소득분배 격차가 마치 모두 경제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며 그 중 상당 부분이 정책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우리는 흔히 균등한 소득분배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좋다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을 좀더 과장되게 확대해석한다면 연령, 신분, 능력,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완전균등사회가 지고지선의 사회·경제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옳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극빈한 완전평등분배보다는 풍요로운 다소의 소득불평등이 더 좋음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의 소득불평등은 합리적이며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는 개별적인 능력, 생산성, 교육수준, 본인의 노력,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여부, 부존자원(endowment), 연령, 가족 구성, 결혼 여부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득수준도 차이가 난다. 만약 이런 차이를 무시한다면 오히려 또다른 의미에서의 불평등, 즉 차별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이고 또한 경제주체의 성취동기를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성장이나 발전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회는 곧 '결과의 균등'만을 강조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는 결국 停滯된 사회·경제구조를 초래하여 정태적으로는 매우 형평적인 사회가 될지 모르지만 동태적으로는 성장이 멈춰버린 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도태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일례로 완전균등사회를 추구한다고 하면 방금 갓 태어난 아기와 중·장년기에 지도자 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한창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년층에게 동일한 소득이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능력이나 생산성 등에 의해서만 소득이 분배되는 사회는 흔히 '기회의 균등'만이 강조되는 사회로 비유할 수 있으며 결과의 균등이 강조되는 사회와 대칭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사회는 결코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 효율성(efficiency)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형평성(equity)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주어진 재능이나 제반 환경의 원천적인 차이로 인해 경제주체별로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출발선이 다른 상황에서 기회의 균등만을 주장하

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결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하되 '결과의 균등'을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균형 잡힌 사회·경제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 경쟁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원천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경쟁에서 도태 또는 밀린 경쟁자에게도 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분배 문제를 볼 때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는지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어 개선·개악을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오히려 그것보다는 현재의 소득분배 격차가 얼마나 크며,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소득격차를 바람직한 수준으로 용인할 것인지 또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소득격차의 변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2.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의 변화

가. 변화 추이

우리나라는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계층별 소득분배 격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비교적 빠르게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7~1998년의 경제위기 기간에는 급격히 실업자와 기업의 도산·파산이 증가하면서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계층간 소득분배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9년에는 예상보다 빨리 경제가 회복되면서 1998년에 비해 소득격차가 크게 축소되

었다. 그러나 이미 1995년 이래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구조는 선진국형으로 소득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가 경제위기의 여파와 구조조정의 결과로 실업률 수준의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볼 때 두 가지 견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즉, 본 연구에서와 같이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소득격차 확대로의 반전이 추세적인 변화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변화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긴 시간을 두고 검증해 보아야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도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경향은 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고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과거 선진국에서도 관찰되었던 현상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볼 때, 최근의 분배격차 확대가 경제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은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선진국에서 보이고 있는 패턴을 뒤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추세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0년대에 소득분배의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던 것은, 전체적으로 이 기간동안 모든 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이 골고루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20~30년간 지속되어온 경제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으로까지 확산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 중반의 3저 호황과 그에 뒤이은 노사간 임금분쟁과 생산직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상승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1990년대 중반부터는 소득분배의 격차가 확대 추세로 반전되었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에 진

입하면서 선진국형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는 과정을 겪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IT산업으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유사 이래 가장 경쟁이 치열한 단계로 진입하면서 경제 패러다임이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속에 신생산업의 급속한 성장·발전과, 산업간 불균형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고 임금체계도 성과주의형 연봉제 체계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현상 등이 종합적으로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1997년부터 경제불안 요인이 가중되기 시작하면서 실업률도 종전의 2%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 1998~1999년에는 6%대, 그 이후에는 3~4%대의 수준을 보일만큼 실업률이 상승한 데에서도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요인을 찾을 수 있다.

그 밖에 최근에는 국민들의 의식구조가 크게 변하면서 이혼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국민의료보건위생 수준이 크게 향상되면서 평균수명이 증대되고 출생률, 사망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노인인구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

나. 소득분배 구조 변화의 원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에 따른 연봉제 도입과 그에 따른 계층별 소득격차의 확대, 구조조정, 선진경제로의 진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간 마찰, 즉 산업간의 비대칭적인 발전,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등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 세계화·개방화 등에 따른 무한경쟁 체제의 도래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경제위기를 전후해서는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가 경기악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는 데에는 상당 부분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 정도로 매우 낮

았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1998년에 6.8%에 이르렀고 경제회복 이후에도 4% 정도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간(1995~2000년) 실업가구를 포함한 무직가구의 비율 상승에 의한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 효과는 전체의 약 14.4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만약 실업률 상승뿐만 아니라 고용여건 등을 감안한다면 그 수준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최근의 소득격차 확대가 설명되기도 하지만 이혼율의 급상승, 인구의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비의 급속한 상승 등과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도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혼이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의 노령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곧 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 가능성에 더하여 소득분배 격차를 가속적으로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혼이 크게 증가하면서 편모가정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중년 남자들의 높은 사망률도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편모가정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편모가정은 저소득층에 속한다. 그러므로 편모가정의 증가는 소득격차의 확대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 역시 일반적으로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만큼 소득격차를 확대시킨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1980년만해도 인구 1천명당 0.55건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과 1995년에는 각각 0.97건과 1.5건, 1998년에는 2.6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이혼가정이 급속히 증가하여, 최근의 계층별 소득격차 확대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 역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이에 따른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효과는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전체의 약 5~6%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찬가지로 노인인구비의 상승도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노인인구비를 가상적으로 변화시키는 모의시험을 수행한 결과 지난 5년간 노인인구비의 상승에 따른 지니계수의 상승 효과, 즉 소득분배 격차 확대 효과는 전체의 5~6% 정도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무직가구, 여성가구주 가구, 노인가구의 비율이 상승함에 따른 소득분배 격차 확대 효과는 최소한 26.1%(상호간의 중복요인 제거시 18.3~22.4%)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39][40]. 만약 경제위기 이후의 불완전 고용 상태의 증가 추세를 감안한다면 소득분배 격차 확대 효과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이혼이나 남편의 사망 등에 의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과 노인인구비 상승이라는 두 가지의 비경제적인 요인만 보더라도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 요인 중 최소한 11~1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다. 교육이나 본인의 노력 등과 같이 소득분배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계량적으로 분석한 상기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 효과가 약 12%에 육박한다는 것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인 요인

---

39) 이 수치는 각 요인의 중복에 의한 효과를 제외한 것인 만큼 실제로 세 가지 요인을 종합하여 분석한 경우와 비교하면 결과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40) 인구의 노령화와 노인인구비중의 증가 문제, 이혼율의 상승 현상 등이 이미 정부 정책의 결과로서 촉진된 부분도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 견해를 피력하는 학자도 일부 있다. 일례로 경제위기 이후의 실업대책이 보다 적극적이고 대규모적이었다면 경기후퇴에 따른 이혼증가를 일부 억제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대세를 이루지 못함에 유의하기 바란다. 또한 본격적인 노령화와 이혼율 상승은 이미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미친 정부의 역할은 별로 없다고 하여도 무방할 정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나 정부의 정책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넓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41].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는 단기간내에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1999년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격차가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분배 격차의 축소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범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고 또한 우리 경제가 선진 경제로의 진입하려는 과도기적인 상황하에서 연봉제 확산, 이혼율 급증 및 노령화의 급진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혼재되면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전세계적인 불황 속에서 미국의 테러 사건까지 겹쳐 향후의 경기를 예측하기 매우 어렵지만 만약 우리나라 경제가 호황기에 접어들더라도 경제위기 이전과 같이 거의 완전고용수준에 가까운 2% 정도의 실업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소득분배 격차가 상당히 작았던 1990년대와 비슷한 정도의 소득분배구조가 재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는 실업률의 변동에 따라 소득분배구조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41) 일반인들은 소득분배에 대해 최근 소득분배 격차의 확대가 마치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러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위에서 보듯이 소득분배의 격차 원인이 노령화 등과 같이 복지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사회현상의 결과로서 초래될 수 있다는 점과, 이혼의 증가 등에 따른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와 같은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부분도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은 잘못된 생각임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성과주의에 입각한 임금체계가 더욱 확산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당분간 업종별·직종별·산업별 임금격차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진경제로의 성공적인 진입을 통해 경제구조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임금체계의 변화 및 산업구조 등의 개편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소득분배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이와 반대로 경제위기 이후 실업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시,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등과 같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지원도 빠르게 확충되었다. 따라서 실업률이 종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반드시 소득격차가 확대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선진국의 경우에는 이혼율이 인구 천명당 2~3건 정도이고 미국은 이보다 다소 높은 4~5건 정도이다. 외관상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00년에 2.6건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서구에서는 미혼자들의 동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혼율은 실제보다 낮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결혼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의 노인인구비는 11~18% 정도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높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임을 시사해준다.

이혼 등이 증가하면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이 늘고 노령화에 따라 노인인구비가 증가할수록 소득분배 격차는 확대된다. 이는 이들 계층이 비교적 저소득층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혼율과 노인인구비의 상승은 당분간 소득분배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와 같은 요인 외에도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세 가지 요인, 즉 실업률을 포함한 무직가구 비율의 변동, 이혼 등의 증가와 노령

화에 따른 여성가구주 가구 및 노인인구비의 상승은 최근 들어 소득분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혼율과 노인인구비는 소득분배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이들 요인이 급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당분간 지속되면서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따른 제반 경제환경의 변화와, 산업구조 개편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 등 전반적인 실업률의 상향 평준화, 인구구성의 변화와 이혼 증가 등과 같은 사회적 현상 등은 최근 우리나라의 소득분배구조를 보다 불평등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소득분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고조되면서 소득재분배 문제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복지사회에 대한 갈망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도 소득분배와 관련이 깊다.

재분배를 논함에 있어서는 주의가 요망된다. 획일적인 균등분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의 소득격차 또는 불평등은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바람직한 수준의 격차와 그렇지 않은 격차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재분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이에 대한 구분을 통해 차별적인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사회적인 불확실성과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차별적인 환경이 제공되었거나 자연재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과의 불평등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요인에 의해 초래된 불평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재분배를 통해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사회경제 전체적인 후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기회의 균등과 공정경쟁의 기반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

구하고 나태, 의지박약 등의 요인에 의해 불평등이 초래되었다면 이러한 부분 중 상당 부분은 오히려 불평등한 상태를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두 가지 상황은 매우 극단적인 예일 뿐이고 현실에서는 두 가지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재분배 정책을 논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재분배를 위한 복지정책이 무조건적인 시혜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칫 시혜적인 복지정책은 동태적으로 노동공급 의욕을 저하시켜 장기적인 불평등 분배구조, 즉 시장소득단계에서의 불평등 분배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복지수요를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노동공급 의욕을 더욱 저하시키는 등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상기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향후의 소득분배 격차는 당분간 확대 추세를 보일 수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는 경제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하려는 노력은 별다른 성과없이 결국 과도한 재정지출을 통해 재정부담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분배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수준의 분배격차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빈곤문제 등에 의해 비롯된 바람직하지 못한 분배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소기의 성과도 거두면서 비용절약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재분배 정책을 논하고 소득분배구조를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을 경주함에 있어 흔히 경제적인 수단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분배구조의 결정요인으로서 이혼이나 인구의 노령화 등과 같이 비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부분도 상당히 크다. 따라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하기 위

한 정책은 경제제도나 유인수단 등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의 식구조의 변화 노력 등도 필요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향후 청·장년 및 중년층 등 생산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비중의 하락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이나 경제무능력자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이를 부양할 수 있는 인구비중이 감소함을 의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여성 유휴노동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정년 연장 등을 통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장려한다면 상당 부분 문제가 완화 또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향후 보완과제

가. 분석자료 선정시의 고려 사항

최근, 특히 경제위기를 지나면서 소득분배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또한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으로의 통합,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확대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 등과 같이 국민들의 소득분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재분배 정책이 정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분배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은 올바른 재분배 정책의 수립·집행에 매우 긴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20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을 대상으로 동일한 원천을 지닌 자료를 동일한 기준과 분석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일관성과 분배구조의 변화 추이에 대한 일관된 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가계조사자료 이외에도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 농가경제조사, 대우패널 등의 자료가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의 경우에는 조사항목의 풍부함과 전국민 대상의 조사, 표본추출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 분석자료로서 상당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두 연도 이외에는 조사자료가 전무하여 분배구조 변화 추이 파악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된 두 연도 사이에 조사항목이 일관성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 특히 분배구조가 크게 변화한 1990년대 후반의 정보는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조사대상기간이 2개월로 매우 짧아 자료의 계절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득계층의 구분이나 조세부담이나 사회이전지출 등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 등에 있어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채택하지 않았다. 2001년초에 새로이 자료가 조사되어 2000년중에 새로운 자료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 경우 비록 가계소비실태조사자료가 지니기는 하지만 도시가계조사자료가 지니지 못한 장점도 있는 만큼 양자를 비교해봄으로써 본 연구의 객관성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농가경제조사자료의 경우에는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 제외된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지만 도시가계조사자료에 비해 조사항목 등이 크게 열악하여 양자간의 통합을 통한 분석이 어려워 부득이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우패널자료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이후 자료가 단절되어 시계열이 짧아 우수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동향 분석이 불가능하여 분석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나.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시의 고려 사항과 향후 보완과제

각국의 통계청에서도 우리나라의 도시가계조사자료와 유사한 자료를 생산해내는데, 우리나라처럼 월간 또는 주간이나 격주, 또는 분기별로 자료를 조사하여 축적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미국의

통계청(U.S. Bureau of Census)처럼 CPS(Current Population Survey)를 수집함에 있어 매년 4월에 1회 실시하여 전년도 자료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가 대체로 봄에 만료되기 때문에 상당수의 납세자들의 자신들의 전년도 소득과 소득세 부담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고 소상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자료의 계절성(seasonality)이나 표본선택편의(sample selection bias)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42]. 반면에 이 경우에는 조사의 범위가 소득에 특화하는 반면 소비지출 관련 통계는 제외된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기초분석자료로 사용한 우리나라의 도시가계조사자료는 기본적으로 월간으로 조사되므로 연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합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계절성이나 표본선택 편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자료의 계절성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각 분기별로 최소 1개 이상의 관측치를 가지는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의도한 바대로 계절성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표본선택 편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이는 어떤 분기에서 단 1개의 자료도 없는 가구에 대해 표본으로부터 탈락시킴에 있어 조사가 누락된 요인이 어떤 특정한 요인이나 목적에 의해 특정한 부류의 자료가 집단적으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료누락이 피조사가구의 이주나 조사원의 방문시 외출 등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자는 표본선택 편의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증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추후의 보완연구에서 좀더 세밀한 검증분석 작업이 필요할 것

42) 이는 표본이 특정한 목적의 작위성을 띠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타당한 추론임에 주의하기 바란다.

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기서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주목할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위의 방법으로 표본재구성 과정에서 탈락한 표본자료의 경우 상당 부분이 조사된 월간자료의 수가 3개월 이하인 가구라는 점이다. 12개의 조사자료 중 3개월 이하의 수준을 보이는 자료는 대부분 표본 자체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많아야 3개월의 자료로 연간자료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또다른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사된 개월 수가 무작위성(randomness)을 띠지 않고 어떠한 작위성을 가지며, 그 작위성이 분석결과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자료를 탈락시킴에 따른 표본선택 편의에 의한 오류보다 연간자료로의 환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계절성 문제가 더욱 클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위의 방법으로 자료를 재구성하여 지난 20년간의 연령별·가구주의 성별 가구분포 및 무직가구 분포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census) 에서 나타난 결과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이는 간접적으로 위의 방법으로 재구성한 도시가계조사자료의 인구학적 구성분포가, 최소한 위에서 제기한 세 가지 기준에서는, 실제의 모집단 특성을 매우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표본선택 편의의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다른 기준을 이용하여 표본특성을 분석해본 결과 모두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한다고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다만 소득분배를 논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의 세 가지 요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한 상당히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해줄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저자가 본 연구의 준비단계에

서 각 자료를 분기별로 나누어 각각의 계절성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분기별로 소득분포 및 패턴이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어떤 한 분기에 조사된 자료가 전무한 가구를 표본에 포함시켜 연간소득을 환산하여 분석한다면 계절성에 의한 분석결과의 오류가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그러므로 문제의 관건은 계절성에 대한 효과적인 제거 여부에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표본선택 편의의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될 수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물론 표본선택 편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면 문제는 간단하지만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즉 이주나 외출 등의 조사누락의 원인이 작위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판단과 해당 가구의 소득-소비패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계절성에 따른 분석오차가 매우 심각할 수 있음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표본선택 편의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향후의 보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더욱 제고하기 위해 표본선택 편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그 밖에 도시가계조사자료에서는 상대적으로 금융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후행 연구에서는 이들 소득 종류와의 연계 및 자산분포와의 연결을 통한 보다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서준호, 「현행 부가가치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경상논총』 8, 서강대학교 경제경영문제연구소, 1984, pp. 125~126.

성명재, 「소비세에 대한 도·농별 소득계층별 세부담 및 역진도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1993(A).

_____, 『소비세 부담분포와 고세율 상품시장의 정상화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3-02, 한국조세연구원, 1993(B).

_____,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계층별·연령별 소비세 부담 분포에 관한 연구」,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1996.

_____, 『특별소비세 부담 분포 추정 및 과세체계 정비방안』, 정책보고서 99-04, 한국조세연구원, 1999(A).

_____,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탈세규모의 추정과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정책보고서 99-05, 한국조세연구원, 1999(B).

_____, 「도시가구의 세부담 분석」, 미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0(A).

_____, 『외환위기 발생후 2년간의 소득·소비패턴 및 개인세부담의 변화 분석』, 연구보고서 00-02, 한국조세연구원, 2000(B).

_____, 「세법개정효과 및 소득·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세부담 효과의 분리 추정에 관한 연구」, 『재정연구』 제7권 제2호, 2001.

성명재·전영준, 『경제위기 1년간 소득세·소비세 부담분포의 변화와 조세정책방향』, 연구보고서 99-03, 한국조세연구원, 1999.

이계식・배준호, 「우리나라의 간접세 부담분포 분석」, 『조세정책과 세제발전』, 곽태원・이계식(편), 연구보고 86-01, 한국개발연구원, 1986, pp. 61~122.

이정우・황성현, 「한국의 분배문제: 현황, 문제점과 정책방향」, 『KDI 정책연구』, 제20권, 제1, 2호, 한국개발연구원, 1998, pp. 154~230.

전영준・성명재・노영훈・박종규, 『경제위기 1년의 조세정책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제33회 조세의 날 기념 심포지엄 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1999.

정광수, 『한국 도시근로자 가구에 대한 연구: 인구학적 특성 및 분배불평등의 장기적 추세와 경제위기 후의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2000.

차병권,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에 관한 고찰」, 『경제논집』, 제5권 제4호,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1966.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 연도.

_____, 『국제통계연감』, 2000.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2000.

한국개발연구원・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정책」,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경제・재정・조세정책』 중 제1세션, 정책토론회 자료, 2000.

한승수, 「조세부담의 측정과 적정부담률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총서』 5, 한국경제연구원, 1982.

현진권, 「토지소유의 편중실태와 종합토지세의 세부담 분석」, 현진권(편),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1996(A).

_____, 「동등화 소비단위를 사용한 조세의 형평성 측정」, 『공공경제』 창간호, 한국공공경제학회, 1996(B), pp. 3~26.

_____,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효과」,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

국금융연구원, 1999, pp. 173~207.

_____,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세무학연구』 제17호, 한국세무학회, 2001, pp. 191~209.

현진권·강석훈, 「한국 소득분배의 국제비교」, 『경제학연구』 제46집 제3호, 한국경제학회, 1998, pp. 145~167.

현진권·나성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형평성 측정: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세부담 차이를 중심으로」, 현진권(편),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1996(A).

_____, 「도시 및 농촌가계의 합산자료를 사용한 소득세제의 세부담 분석」, 현진권(편),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1996(B).

_____, 「도시 및 농촌가계의 합산자료를 사용한 간접세제의 세부담 분석」, 현진권(편),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한국조세연구원, 1996(C).

현진권·임병인, 「소득종류에 따른 소득불균형 유발효과의 국제비교」, 『공공경제』 제5권 제2호, 한국공공경제학회, 2000, pp. 95~114.

Antolín, Pablo, Thai-Thanh Dang, and Howard Oxley(Assisted by Ross Finnie and Roger Sceviour), "Poverty Dynamics in Four OECD Countrie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12, OECD, ECO/WKP(99)4, 1999.

Atkinson, A.,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2, 1970, pp. 244~263.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Income Distribution,* 1996-97, 1998.

_____, *Income Distribution,* 1997~98, 1999.

_____, *Income Distribution,* 1999~2000, 2001.

Burniaux, Jean-Marc, Thai-Thanh Dang, Douglas Fore, and Michael Forster,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Selected OECD Countries,"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89, ECO/WKP(98)2, 1998.

Census of Population Office, "Household Income Growth and Distribution," Advance Data Release No. 7,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1.

Clark, Tom and Jayne Taylor, "Income Inequality : A Tale of Two Cycles?," *Fiscal Studies,* Vol. 20, 1999, pp. 387~408.

Coady, David P. and Limin Wang, "Equity, Efficiency, and Labor-market Reforms in Urban China: the Impact of Bonus Wages on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China Economic Review,* Vol. 11, 2000, pp. 213~231.

D'Ambrosio, Conchita,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in Italy: An Application of Social Distance Measur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47, No. 1, 2001, pp. 43~64.

Deininger, K. and L. Squire, "A New Data Set Measuring Income Inequality," *World Bank Economic Review,* 10, 1996, pp. 565~591.

_____, "New Ways of Looking at Old Issu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57, 1998, pp. 259~287.

Fei, John, Gustav Ranis, and Shirley W. Y. Kuo, "Growth and the Family Distribution of Income by Fact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8, pp. 17~53.

Ferreira, Francisco H. G., "Inequality and Economic Performance:

A Brief Overview to Theories of Growth and Distribution," World Bank, 1999.

Förster, Michael F. (Assisted by Michelle Pellizzari), "Trends and Driving Factor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Occasional Papers No. 42, DEELSA/ELSA/WD (2000)3, OECD, 2000.

Harris, Tim,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1998-99," Economic Trends No. 557,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pril 2000, pp. 45~83.

Jacobs, Didier, "Low Inequality with Low Redistribution? An Analysis of Income Distribution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Compared to Britain," Centre for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London School of Economics, January 2000.

Jones Jr., Arthur F. and Daniel H. Weinberg, "The Changing Shape of the Nation's Income Distribution 1947~1998," Economics and Statistics Administration, the Census Bureau, U.S. Department of Commerce, June 2000.

Khetan, C. P. and S. N. Poddar, "Measurement of Income Tax Progression in a Growing Economy : The Canadian Experi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Vol. 9, No. 4, November 1976, pp. 613~629.

Kuznets, Sim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Equa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55, pp. 1~28.

Lakin, Caroline, "The Effects of Taxes and Benefits on Household Income, 1999-2000," Economic Trends No. 569, (UK)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April 2001, pp.

35~79.

Lee, Jongchul, "Changes in the Source of China's Regional Inequality," *China Economic Review,* Vol. 11, 2000, pp. 232~245.

Litchfield, Julie A., "Inequality: Methods and Tools," World Bank, 1999.

Milanovic, Branko, "True World Income Distribution, 1988 and 1993: First Calculation Based on Households Surveys Alone," Development Research Group, World Bank, 1999.

_____, "World Income Inequality in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First Draft, World Bank, 2001.

Milanovic, Branko and Slomo Yitzhaki, "Decomposing World Income Distribution: Does the World Have a Middle Class?," mimeo, 2001.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Annual Report on Health and Welfare 1999,* Japan, 2000. (http://www.mhlw.go.jp/search/mhlwe/wp/wp_hw/vol1/p1c2s2.html)

OECD, "Trends i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Background Tables and Figures," DEELSA/ELSA/WP1(99)15/ANN, 1999.

_____, *OECD in Figures,* 2000.

_____, *Revenue Statistics 1965-1999,* 2000.

Pyatt, Graham, Chau-nan Chen, and John Fei, "The Distribution of Income by Compone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80, pp. 451~473.

Ravallion, M. and S. Chen, "What can New Survey Data Tell Us about Recent Changes in Distribution and Poverty,"

World Bank Economic Review, 11(2), 1997, pp. 357~382.

Smeeding, Timothy and Daniel H. Weinberg, "Toward a Uniform Definition of Household Income,"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47, No. 1, 2001, pp. 1~24.

Statistics Canada, *Income in Canada,* 1998.

Statistics New Zealand, *New Zealand Now Incomes,* 1999.

Suits, Daniel B.,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7, September 1977, pp. 734~752.

Sung, Myung Jae, "Changes in Tax Burden of Urban Households in Korea: 1982~1999," mimeo, 2001.

U.S Census Bureau, *Money Income in the United States,* 1999.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2000/2001,* September 2000.

Yitzhaki, Shlomo, "Economic Distance and Overlapping of Distribu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61, 1994, pp. 147~159.

Yitzhaki, Shlomo and Robert I. Lerman, "Income Stratification and Income Inequality," *Review of Income and Wealth,* Series 37, Number 3, September 1991, pp. 313~329.

부록 Ⅰ: 경제여건의 변화 추이

최근의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1990년대 중반 이래 실질GDP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물가상승률도 하락하는 등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97년말에는 외환위기가 시작되면서 금융시장이 급격히 혼란에 빠지면서 사실상 금융공황에 가까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외환이 급속히 해외로 유출되고 시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달러 부족으로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 금융시장의 혼란, 즉 금융시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금융의 중개기능이 상실되고 실물경제도 크게 위축되어 1998년에는 6.7%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상GDP도 2.0% 감소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1999년에는 경제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었다. 실질성장률이 전년의 -6.7%에서 10.9%로 17.6%p 상승하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2000년에도 8.8%라는 매우 높은 경제성장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0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경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다시 실업이 증가하는 등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부분 근로자의 보수라고 볼 수 있는 피용자보수는 1997년에 경기침체의 조짐이 심화될 때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6~1997년에 각각 204.4조원과 213.9조원이었던 피용자보수는 경제위기상황이 최고조에 달하였던 1998년에는 201.0조원으로 감소함으로써 1996년 수준에도 다소 미달할 정도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률 급상승과 임금 삭감 등의 여파

<부표 Ⅰ-1> 1982~2000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위 : %, 억원, 원/달러, 억달러, 천명)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불변GDP 성장률	7.2	10.7	8.2	6.5	11	11	10.5
경상GDP 성장률	14.9	17.3	14.3	11.4	16.7	17.2	18.8
경상GDP	544,313	638,575	730,036	813,123	948,617	1,111,977	1,321,118
피용자보수	214,220	258,940	296,406	330,121	378,945	456,475	561,525
영업잉여	213,718	237,950	275,065	308,923	368,511	416,821	473,394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7.2	5.8	5.7	4.5	5.2	5.7	7.6
생산자물가	4.7	0.2	0.7	0.9	-1.5	0.5	2.7
소비자물가	7.1	3.4	2.2	2.3	2.8	3.1	7.1
민간소비증가율	6.8	9	7.8	6.8	8.2	7.5	8.5
설비투자증가율	1	8	17.3	4.6	24.9	19.4	12.6
건설투자증가율	17.3	22.2	6.6	4.2	3.4	15.5	14.2
수출(통관 : 억달러)	218.53	244.45	292.45	302.83	347.14	472.81	606.97
수입(통관 : 억달러)	242.51	261.92	306.31	311.36	315.84	410.2	518.11
상품수지(통관 : 억달러)	-24.0	-17.5	-13.9	-8.5	31.3	62.6	88.9
국제수지(BOP : 억달러)	-28.3	-18.5	-10.9	-0.2	43.0	75.3	112.8
경상수지(억달러)	-25.5	-15.2	-12.9	-8.0	47.1	100.6	145.1
환율(원/달러)	731.2	775.8	806	870	881.4	822.6	730.6
명목임금상승률	15.8	11	8.7	9.2	8.2	10.1	15.5
회사채수익률(연평균)	17.3	14.2	14.1	14.2	12.8	12.6	14.2
연평균실업률	4.4	4.1	3.8	4.0	3.8	3.1	2.5
실업자수	654	613	568	622	611	519	435

<부표 Ⅰ-1>의 계속

(단위 : %, 억원, 원/달러, 억달러, 천명)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불변GDP 성장률	6.1	9	9.2	5.4	5.5	8.3
경상GDP 성장률	12.2	20.6	21.1	13.5	12.9	16.5
경상GDP	1,481,970	1,787,968	2,165,109	2,456,996	2,774,965	3,234,071
피용자보수	668,244	820,148	1,017,851	1,152,372	1,295,817	1,507,379
영업잉여	498,495	574,999	692,814	783,789	890,290	1,039,245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5.7	10.8	10.8	7.7	7	7.6
생산자물가	1.5	4.2	4.8	2.1	1.5	2.7
소비자물가	5.7	8.5	9.3	6.3	4.8	6.2
민간소비증가율	10.1	9.6	8	5.5	5.6	8.2
설비투자증가율	14.3	17.7	14.8	-0.3	0.3	23.9
건설투자증가율	16.8	31	12.5	-0.9	9.7	3.7
수출(통관 : 억달러)	623.77	650.16	718.70	766.32	822.36	960.13
수입(통관 : 억달러)	614.65	698.44	815.25	817.75	838.00	1,023.48
상품수지(통관 : 억달러)	9.1	-48.3	-96.5	-51.4	-15.6	-63.3
국제수지(BOP : 억달러)	43.6	-24.5	-68.0	-17.5	23.2	-28.6
경상수지(억달러)	53.6	-20.0	-83.2	-39.4	9.9	-38.7
환율(원/달러)	671.5	707.8	733.4	780.7	802.6	803.6
명목임금상승률	21.1	18.8	17.5	15.2	12.2	12.7
회사채수익률(연평균)	15.2	16.5	18.9	16.2	12.6	12.9
연평균실업률	2.6	2.4	2.3	2.4	2.8	2.4
실업자수	463	454	438	466	551	490

<부표 Ⅰ-1>의 계속

(단위 : %, 억원, 원/달러, 억달러, 천명)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불변GDP성장률	8.9	6.8	5.0	-6.7	10.9	8.8(p)
경상GDP성장률	16.7	10.9	8.3	-2.0	8.6	7.1(p)
경상GDP	3,773,498	4,184,790	4,532,764	4,443,665	4,827,442	5,170,966(p)
피용자보수	1,798,256	2,044,211	2,139,309	2,009,910	2,104,115	2,247,520(p)
영업잉여	1,138,288	1,162,317	1,300,053	1,341,311	1,491,832	1,624,920(p)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7.2	3.9	3.2	5.0	-2.0	-1.5(p)
생산자물가	4.7	3.2	3.9	12.2	-2.1	2.0
소비자물가	4.5	4.9	4.5	7.5	0.8	2.3
민간소비증가율	9.6	7.1	3.5	-11.7	11.0	7.1(p)
설비투자증가율	18.1	9.1	-8.7	-38.8	36.3	34.3(p)
건설투자증가율	8.0	6.1	2.3	-10.1	-10.3	-4.1(p)
수출(통관: 억달러)	1,250.58	1,297.15	1,361.64	1,323.13	1,436.85	1,722.67
수입(통관: 억달러)	1,351.19	1,503.39	1,446.16	932.82	1,197.52	1,604.81
상품수지(통관: 억달러)	-100.6	206.2	-84.5	390.3	239.3	117.9
국제수지(BOP: 억달러)	-44.4	-149.6	-31.8	416.3	283.7	166.0
경상수지(억달러)	-85.0	-230.0	-81.7	403.6	244.8	110.4
환율(원/달러)	771.0	804.8	951.1	1,398.9	1,189.5	1,130.6
명목임금상승률	11.2	11.9	7.0	-2.5	12.1	8.0
회사채수익률(연평균)	13.7	11.8	13.4	15.0	8.9	9.3
연평균실업률	2.0	2.0	2.6	6.8	6.3	4.1
실업자수	420	426	556	1,461	1,353	889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한국은행.

노동부, 『노동통계조사보고서』, 각호.

통계청 인터넷 사이트(kosis).

가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잘 나타내준다. 이후 피용자보수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였다.

기업의 영업실적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영업잉여는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기는 하였지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어 그런대로 호조세를 보였다.

민간소비지출은 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경제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1997년까지 민간소비지출은 증가하였으나 1998년에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999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설비투자는 경제위기 초기(1997년)부터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었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에는 1998년 이래 3년 연속 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실업률이 1990년대 초반에 2~3% 정도였으며 1990년 중반에는 2.0%로 하락함으로써 사실상 거의 완전고용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7년에는 외환위기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어 실업률이 2.6%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특히 경제위기가 극심하였던 1998년에는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도산, 파산 및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실업자 급증으로 실업률은 단숨에 6.8%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후 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최근에는 실업률이 서서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00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경기가 둔화되면서 실업률이 다시 상승하고 있다.

부록 II: 1995~2000년의 소득분배 동향

1990년대 중반 이래 소득계층별 분배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분배격차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최근의 분배구조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한다.

1. 요 약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결과 계층간 분배격차는 1997년 외환위기 이래 크게 확대(1998년)되었다가 경제회복과 함께 축소(1999년)되는 듯하였으나, 2000년 하반기부터 다시 다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지니계수의 변화로부터 알 수 있다. 1995~2000년 동안 지니계수(가구 기준)는 각각 0.237 → 0.243 → 0.276 → 0.309 → 0.266 → 0.277로 변화하였는데 1997~1998년에 일시적으로 지니계수가 크게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1995년 이래 지니계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배격차는 금년에도 다소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분배격차가 확대되는 데에는 최근의 경기침체와 경제의 구조적 변화의 두 가지 측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2000년 하반기부터 경기악화로 실업률이 반등하면서 저소득층·중산층의 소득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경제발전 단계상 정보화 관련 산업의 비대칭적인 발전, 성과급 및 연봉제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 등에 의해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고소

득층(최상위 1~3% 정도)의 고액연봉화가 격차 확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경제의 구조적 변화로 분배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위시한 선진국 및 개도국을 중심으로 IT산업이 급속히 팽창하고 관련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서 분배격차가 더욱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선진국에서의 분배격차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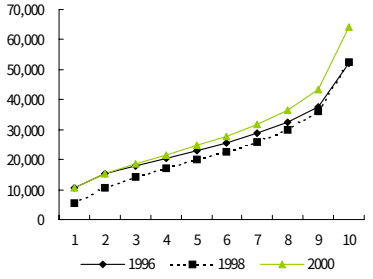
향후 경기여건에 따라 소득분배구조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화 산업의 비약적 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세계화,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한 분배격차는 선진국형으로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2. 최근의 분배구조 변화

도시가계조사자료 분석 결과, 2000년 도시가구의 가구당 소득은 전년 대비 11.65%p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다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년 상반기까지 실업률이 하락하면서 실업률이 6.3%(1999년)에서 4.1%(2000년)까지 하락하였으나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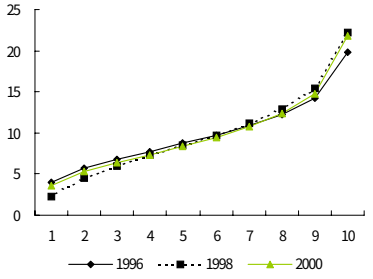
[부도 II-1] 소득계층별 총소득

(단위: 천원)



[부도 II-2] 소득계층별 총소득 점유비

(단위: %)



년 하반기부터 실업률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1999년보다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고소득층(소득 10분위)의 소득이 가장 크게 증가(16.14%)하면서 분배격차 확대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니계수(가구 기준)는 경제위기(1998년) 동안 0.309까지 치솟았으나 1999년에 경제가 회복되면서 0.266으로 하락하였다가 2000년에 다시 0.277로 소폭 상승하였다. 최근 6년간(1995~2000년)의 지니계수(가구 기준)를 살펴보면 각각 0.237 → 0.243 → 0.276 → 0.309 → 0.266 → 0.277[43]이다. 최근 2~3년간의 지니계수(약 0.27 정도)는 대체로 198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소득분배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특히 1998년에는 경제위기로 인해 예외적·일시적으로 분배격차가 극도로 급격히 악화(overshooting)되어 지니계수가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하였지만 전체적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지니계수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즉, 1999년에 반사적으로 지니계수가 하락하여 분배구조가 개선된 듯한 착각을 주지만 이를 제외하면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최근의 분배격차 확대의 원인분석

1999년에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최저소득층(1분위)의 소득점유비가 3.75%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평균 약 4%)을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2000년에는 하반기부터 경기가 악화되면서 1분위의 소득점유비

43)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취업)근로자가구의 지니계수는 0.284 → 0.291 → 0.283 → 0.316 → 0.320 → 0.317이다. 지니계수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분석대상가구의 범위(본 연구-근로자·자영자·무직가구, 통계청-근로자가구), 분석방법(본 연구-개별원시자료, 통계청-10분위별 집계자료)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

가 3.61%로 다시 소폭 하락하였다. 반면에 최고소득층(10분위)의 소득점유비는 크게 상승(21.04%→21.81%)하였다. 1분위의 소득점유비 하락은 2000년 하반기 이래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10분위의 높은 소득증가율은 대부분 최상위 소득자(상위 1~3% 정도로 추정)의 고액연봉화에 따른 높은 소득증가율에 기인한다. 1995~2000년 동안 최상위 5% 및 1% 백분위수 소득자(각각 P95와 P99)의 소득증가율은 33.2%(연평균 5.9%, 기하평균)와 39.5%(연평균 6.9%)로 평균소득증가율 25.2%(연평균 4.6%)는 물론, 10분위 전체의 소득증가율보다 높다. 이는 금융 및 정보산업 등에서 일부 전문인력에 대한 소득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러한 원인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는 저소득층 몰락 등의 원인에 의한 소득격차 확대와는 분명히 구별된다.

중·저소득층간의 소득격차 확대보다 중·고소득간 소득격차 확대가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표 Ⅱ-1>에서는 최고소득자 및 최저소득자 가운데 이상변이표본(outlier)을 제외하기 위해 분위별 평균값 대신 특정한 점(point)에서의 백분위수(percentile)간의 비율과 그 비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간의 소득상대비를 나타내는 P99/P10은 1995년과 2000년에 각각 4.760과 6.029로 나타나 그 비율이 크게 확대(26.7%)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중위수(P50)를 매개체(medium)로 하여 최고소득층과 중소득층간 소득비, 중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소득비의 두 가지로 나누어보면, 전자는 2.741에서 3.145, 후자는 1.736에서 1.917로 각각 14.7%와 10.4%씩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상대소득비 격차의 확대가 중소득층과 최고소득층간의 소득격차 확대에 기인하는 부분이 더 큼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부표 Ⅱ-1>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표 Ⅳ-1>과 <표 Ⅳ-2>를 보면 소수의 최고소득자(예: 최상위 1~3% 정도)를 제외하면 고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여타 소득층과의 상대소득비의 변화율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일부의 최고소득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계층간의 소득격차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소득계층별 소득격차가 확대된 것이 대부분 소수의 최상위 최고소득자들의 소득증가율이 여타 소득자들보다 크게 높았기 때문임을 시사해 준다. 전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두드러진 특징은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득증가율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2000년의 소득격차 확대는 2000년 하반기부터의 경기악화, IT산업 및 일부 금융권에서의 고액연봉자 등장, 연봉제·총액임금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에 따른 두 가지 요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부표 Ⅱ-1> 고소득자/저소득자의 소득비율 변화

	1995년	2000년	변화율
P99/P10	4.760	6.029	26.7%
P99/P50	2.741	3.145	14.7%
P50/P10	1.736	1.917	10.4%

주: P99-99% 백분위수(=상위 1% 소득자)의 소득
P50-50% 백분위수(=50% 소득자)의 소득
P10: 10% 백분위수(=하위 10% 소득자)의 소득

4. 선진국(미국·영국·일본 등) 사례 및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분배격차가 확대되었다. 영국의 경우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는 1981년에 0.46이었던 것이 1999년에는 0.53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총소득 기준)도 1981년에 0.406이었던 것이 1999년에는 0.457로 상승하였다. 일본(시장소득 기준)도 1981년에 0.3491이었던 것이 1996년에는 0.4412로 대폭 상승하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IT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최대의 호황을 누렸던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지니계수가 상승하여 분배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분배격차는 여타 소득계층의 소득 감소 또는 소득증가율 감소를 동반하였다기보다는 일부 최고 소득층의 급격한 소득 증가에 기인하는 면이 강하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세계화, 무한경쟁이라는,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과정하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무조건적인 균등 또는 획일은 새로운 경제체제하에서 적절하지 않으며 오히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전 망

향후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IT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선진국형으로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기여건이 개선되어 분배구조 개선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정보화 산업의 비약적 발전 및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이 지속되는 한 당분간 분배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부록 Ⅲ: 주요 선진국의 지니계수

<부표 Ⅲ-1> 미국의 소득불평등도 계측결과: 1967~1998

	지니	Var(ln소득)	MLD (Mean log deviation)	타일지수	Atkinson 지수		
					e=0.25	e=0.50	e=0.75
1967	0.399	0.813	0.380	0.287	0.071	0.143	0.220
1968	0.388	0.779	0.356	0.273	0.067	0.135	0.208
1969	0.391	0.774	0.357	0.268	0067	0.135	0.209
1970	0.394	0.805	0.370	0.271	0.068	0.138	0.214
1971	0.396	0.782	0.370	0.273	0.068	0.138	0.214
1972	0.401	0.790	0.370	0.279	0.070	0.140	0.216
1973	0.397	0.776	0.355	0.270	0.068	0.136	0.210
1974	0.395	0.740	0.352	0.267	0.067	0.134	0.207
1975	0.397	0.746	0.361	0.270	0.067	0.136	0.210
1976	0.398	0.756	0.361	0.271	0.068	0.137	0.211
1977	0.402	0.768	0.364	0.276	0.069	0.139	0.213
1978	0.402	0.784	0.363	0.275	0.069	0.139	0.213
1979	0.404	0.816	0.369	0.279	0.070	0.141	0.216
1980	0.403	0.792	0.375	0.274	0.069	0.140	0.216
1981	0.406	0.826	0.387	0.277	0.070	0.141	0.220
1982	0.412	0.864	0.401	0.287	0.072	0.146	0.226
1983	0.414	0.865	0.397	0.288	0.072	0.147	0.226
1984	0.415	0.859	0.391	0.290	0.073	0.147	0.225
1985	0.419	0.863	0.403	0.300	0.075	0.151	0.231
1986	0.425	0.888	0.416	0.310	0.077	0.155	0.237
1987	0.426	0.936	0.414	0.311	0.077	0.155	0.238
1988	0.427	0.899	0.401	0.314	0.078	0.155	0.236
1989	0.431	0.887	0.406	0.324	0.080	0.158	0.239
1990	0.428	0.888	0.402	0.317	0.078	0.156	0.236
1991	0.428	0.878	0.411	0.313	0.078	0.156	0.237
1992	0.434	0.925	0.416	0.323	0.080	0.160	0.242
1993	0.454	0.942	0.467	0.385	0.092	0.178	0.266
1994	0.456	0.976	0.471	0.387	0.092	0.180	0.268
1995	0.450	0.945	0.452	0.378	0.090	0.175	0.261
1996	0.455	0.954	0.464	0.389	0.093	0.179	0.266
1997	0.459	0.966	0.484	0.396	0.094	0.183	0.272
1998	0.456	0.973	0.488	0.389	0.093	0.081	0.271

주: 자료 체계의 불연속으로 1992년까지와 1993년부터의 추정결과는 일치성을 가지지 않음.

원자료: U.S. Census Bureau, *Current Population Survey*, March 1968~1999.

자료: Jones and Weinberg(2000)

<부표 III-2> 미국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세전 지니계수 (총소득 기준)	세후 지니계수 (가처분소득 기준)	변화율(%)
1993	0.454	0.421	-7.3
1994	0.456	0.422	-7.5
1995	0.450	0.417	-7.3
1996	0.455	0.423	-7.0
1997	0.459	0.429	-6.5
1998	0.456	0.430	-5.7

자료: U.S. Census Bureau(2000) : Figure 7을 재구성.

<부표 III-3> 영국의 지니계수 추정결과(1978~1998-99)

(단위 : %)

	기준 소득				(B-A)/A	(C-A)/A
	균등화된 원소득	균등화된 총소득(A)	균등화된 가처분소득(B)	균등화된 조세후소득(C)		
1978	0.43	0.29	0.26	0.28	-10.3	-3.4
1980	0.44	0.31	0.28	0.30	-9.7	-3.2
1981	0.46	0.31	0.28	0.31	-9.7	0.0
1982	0.47	0.31	0.28	0.31	-9.7	0.0
1983	0.48	0.32	0.28	0.31	-12.5	-3.2
1984	0.49	0.31	0.28	0.30	-9.7	-3.2
1985	0.49	0.32	0.29	0.32	-9.4	0.0
1986	0.50	0.34	0.31	0.35	-8.8	+2.9
1987	0.51	0.36	0.33	0.36	-8.3	0.0
1988	0.51	0.37	0.35	0.38	-5.4	+2.7
1989	0.50	0.36	0.34	0.37	-5.6	+2.8
1990	0.52	0.38	0.36	0.40	-5.3	+5.3
1991	0.51	0.37	0.35	0.39	-5.4	+5.4
1992	0.52	0.37	0.34	0.38	-8.1	+2.7
1993~94	0.54	0.37	0.34	0.38	-8.1	+2.7
1995~96	0.52	0.36	0.33	0.37	-8.3	+2.8
1996~97	0.53	0.37	0.34	0.38	-8.1	+2.7
1997~98	0.53	0.37	0.34	0.38	-8.1	+2.7
1998~99	0.53	0.38	0.35	0.39	-7.9	+2.6
1999~2000	0.53	0.38	0.35	0.40	-7.9	+5.3

자료: Harris(2000).
Lakin(2001).

<부표 III-4> 일본의 지니계수 추정결과

(단위 : %)

기준	원소득	재분배후 소득		세후소득		사회보장후 소득	
	지니계수	지니계수	변화율	지니계수	변화율	지니계수	변화율
1981	0.3491	0.3143	-10.0	0.3301	-5.4	0.3317	-5.0
1984	0.3975	0.3426	-13.8	0.3824	-3.8	0.3584	-9.8
1987	0.4049	0.3382	-16.5	0.3879	-4.2	0.3564	-12.0
1990	0.4334	0.3643	-15.9	0.4207	-2.9	0.3791	-12.5
1993	0.4394	0.3645	-17.0	0.4255	-3.2	0.3812	-13.2
1996	0.4412	0.3606	-18.3	0.4338	-1.7	0.3721	-15.7

주 : 1. 원소득= 피용자보수 + 영업(사업)소득 + 농업소득 + 재산소득 + 가사노동소득 + 잡소득 + 사적보조(benefits privately received: 송금, 기업연금, 퇴직 관련 수혜금, 생명보험금 등)
2. 재분배 후 소득 = 원소득 - 조세 - 사회보험료 + 사회보장수혜 + 의료비
3. 세후소득 = 원소득 - 조세
4. 사회보장 후 재분배소득 = 원소득 - 사회보험료 + 사회보장수혜 + 의료비
5. 조세: 직접세 중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사업용 부동산 관련 재산세 제외), 자동차세(사업용 제외)
6. 사회보험료: 피용자보험료, 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보험료.
7. 사회보장수혜: 사회보장체계하에서의 연금수혜 등.
8. 의료비: 의료비수혜 및 유사수혜의 현금가치
9. 변화율: 원소득 기준 지니계수 대비 지니계수의 변화율

자료 : "Survey on the Redistribution of Income(Fiscal 1996)" by the Research Section, Policy Planning and Evaluation Division, Minister's Secretariat,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부표 III-5> 싱가포르의 가계소득분배

	1990	1995	1997	1998	1999	2000
지니계수 (전체)	0.436	0.443	0.444	0.446	0.467	0.481
(무소득자 가구 제외)	0.412	0.409	0.412	0.410	0.424	0.432
소득비율 상위 20% / 하위 20%	11.4	13.8	13.6	14.6	17.9	20.9
9분위 / 2분위	5.5	6.1	5.9	6.2	6.8	7.4

자료 : Census of Population Office, Singapore Department of Statistics (2001).

<부표 III-6> 호주의 지니계수 추정결과

(단위 : %)

	5분위 소득점유율						지니계수	
	1	2	3	4	5	계	총소득	가처분소득
1994~1995	3.6	9.3	15.2	24.0	47.9	100.0	0.443	-
1995~1996	3.8	9.1	15.0	23.7	48.3	100.0	0.437	-
1996~1997	3.8	9.4	15.2	24.0	47.5	100.0	0.444	-
1997~1998	3.8	9.0	15.0	23.9	48.3	100.0	0.446	-
1999~2000	3.8	9.0	15.0	23.8	48.5	100.0	0.448	0.396

자료 :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Income Distribution*, 1996~97, Australia, 1998.

_____, *Income Distribution*, 1997-98, Australia, 1999.

_____, *Income Distribution*, 1999-2000, Australia, 2001.

<부표 III-7> 뉴질랜드의 지니계수(근로소득자)

(단위 : %)

근로소득	1982	1986	1991	1996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0.432	0.430	0.472	0.485
15세 이상 국민	0.624	0.608	0.662	0.664
시장소득기준	1982	1986	1991	1996
15세 이상 시장소득자	0.483	0.491	0.534	0.554
15세 이상 국민	0.566	0.542	0.611	0.609
15세 이상 국민 대상	1982	1986	1991	1996
시장소득 기준	0.566	0.542	0.611	0.609
총소득 기준(A)	0.472	0.437	0.474	0.495
가처분소득 기준(B)	0.414	0.386	0.437	0.456
(B-A)/A	-12.3	-11.7	-7.8	-7.9

자료 : Statistics New Zealand(1999)

<부표 III-8> 뉴질랜드의 시장소득 구성

(단위 : %)

	1982	1986	1991	1996
근로소득	80	78	80	78
사업소득	12	12	10	12
투자소득	5	9	7	6
기타시장소득	2	2	2	3

자료 : Statistics New Zealand(1999)

<부표 III-9> 뉴질랜드의 총소득 대비 이전소득 및 사회보장수혜의 비중

(단위 : %)

	1982	1986	1991	1996
이전소득	12	13	17	13
사회보장수혜	4	4	6	5

자료 : Statistics New Zealand(1999)

<부표 III-10> 캐나다의 지니계수

(단위 :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시장소득 기준	0.396	0.402	0.419	0.424	0.429	0.424	0.427	0.431	0.434	0.437
총소득 기준(A)	0.329	0.330	0.337	0.336	0.339	0.334	0.341	0.347	0.353	0.357
세후소득 기준(B)	0.292	0.291	0.297	0.295	0.298	0.292	0.297	0.305	0.312	0.315
(B-A)/A	-11.2	-11.8	-11.9	-12.2	-12.1	-12.6	-12.9	-11.2	-11.6	-11.8

주 : 2인 이상 가구 기준
자료 : Statistics Canada(2000)

부록 Ⅳ : 가구유형별 지니계수 추정결과

<부표 Ⅳ-1> 지니계수 추정결과(개인 및 총소득 기준, eqs=0.5)

	전체 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무직가구 포함	취업가구	
1995	0.22976 (0.22888)	0.23392 (0.23542)	0.22809 (0.22966)	0.22104 (0.21545)
1996	0.23624 (0.23227)	0.24109 (0.24040)	0.23628 (0.23667)	0.22643 (0.21584)
1997	0.26761 (0.26253)	0.28204 (0.27653)	0.23465 (0.23444)	0.23720 (0.23402)
1998	0.29696 (0.28911)	0.32209 (0.31591)	0.24642 (0.24862)	0.24784 (0.23947)
1999	0.25585 (0.24912)	0.26298 (0.25857)	0.25152 (0.24853)	0.24135 (0.23056)
2000	0.26736 (0.26553)	0.27298 (0.27395)	0.26520 (0.26806)	0.25534 (0.24968)

주 : 1. eqs는 균등규모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를 나타냄.
2. ( ) 안 표본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계산한 것임.
3. 직접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조사자료를 사용한 것임.

<부표 Ⅳ-2> 지니계수 추정결과(개인 및 총소득 기준, eqs=1.0)

	전체 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무직가구 포함	취업가구	
1995	0.25067 (0.24689)	0.25597 (0.25364)	0.25179 (0.24867)	0.23872 (0.23273)
1996	0.25630 (0.25052)	0.26039 (0.25769)	0.25687 (0.25529)	0.24734 (0.23514)
1997	0.28279 (0.27722)	0.29745 (0.28945)	0.25947 (0.25542)	0.25269 (0.25265)
1998	0.30606 (0.29791)	0.32908 (0.32196)	0.26589 (0.26357)	0.26166 (0.25346)
1999	0.26950 (0.26588)	0.27521 (0.27335)	0.27292 (0.26682)	0.25876 (0.24981)
2000	0.28358 (0.28096)	0.28707 (0.28658)	0.28649 (0.28472)	0.27805 (0.27046)

주 : 1. eqs는 균등규모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를 나타냄.
2. ( ) 안 표본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계산한 것임.
3. 직접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조사자료를 사용한 것임.

부록 Ⅴ : SCV 추정결과

<부표 Ⅴ-1> SCV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0.5)

	전체 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무직가구 포함	취업가구	
1995	0.18857	0.19536	0.18494	0.17526
1996	0.19250	0.20321	0.19724	0.17170
1997	0.24346	0.26414	0.19600	0.20426
1998	0.30525	0.36292	0.23476	0.21282
1999	0.23437	0.25185	0.23447	0.20090
2000	0.29308	0.32387	0.31844	0.23840

주 : 1. eqs는 균등규모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를 나타냄.
2. 직접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조사자료를 사용한 것임.

<부표 Ⅴ-2> SCV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1.0)

	전체 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무직가구 포함	취업가구	
1995	0.23730	0.24643	0.23423	0.21835
1996	0.24018	0.25043	0.24527	0.21758
1997	0.28877	0.31271	0.25141	0.24437
1998	0.33455	0.38985	0.27013	0.24353
1999	0.27685	0.29178	0.28081	0.24377
2000	0.33819	0.36451	0.36414	0.28934

주 : 1. eqs는 균등규모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를 나타냄.
2. 직접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조사자료를 사용한 것임.

부록 Ⅵ : MLD 추정결과

<부표 Ⅵ-1> MLD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0.5)

	전체 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무직가구 포함	취업가구	
1995	0.08518	0.09041	0.08592	0.07460
1996	0.08766	0.09436	0.09127	0.07473
1997	0.12454	0.14201	0.08994	0.08838
1998	0.15455	0.18632	0.10216	0.09693
1999	0.10124	0.11014	0.10174	0.08480
2000	0.11558	0.12348	0.11781	0.10098

주 : 1. eqs는 균등규모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를 나타냄.
2. 직접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조사자료를 사용한 것임.

<부표 Ⅵ-2> MLD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1.0)

	전체 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무직가구 포함	취업가구	
1995	0.09933	0.10526	0.10130	0.08745
1996	0.10200	0.10859	0.10643	0.08883
1997	0.13331	0.14842	0.10669	0.10297
1998	0.15910	0.18823	0.11475	0.10706
1999	0.11469	0.12225	0.11642	0.09985
2000	0.12882	0.13427	0.13205	0.11880

주 : 1. eqs는 균등규모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를 나타냄.
2. 직접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조사자료를 사용한 것임.

부록 Ⅶ : Atkinson 지수 추정결과

<부표 Ⅶ-1> Atkinson 지수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0.5)

	전체 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무직가구 포함	취업가구	
1995	0.04175	0.04402	0.04189	0.03721
1996	0.04289	0.04586	0.04445	0.03715
1997	0.05752	0.06434	0.04381	0.04370
1998	0.07046	0.08372	0.04990	0.04692
1999	0.04971	0.05366	0.04981	0.04231
2000	0.05719	0.06120	0.05896	0.04981

주 : 1. eqs는 균등규모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를 나타냄.
2. 직접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조사자료를 사용한 것임.

<부표 Ⅶ-2> Atkinson 지수 추정결과(총소득 기준, eqs=1.0)

	전체 가구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
		무직가구 포함	취업가구	
1995	0.04907	0.05166	0.04968	0.04383
1996	0.05023	0.05310	0.05210	0.04434
1997	0.06298	0.06911	0.05236	0.05085
1998	0.07362	0.08583	0.05604	0.05205
1999	0.05653	0.05984	0.05722	0.04981
2000	0.06384	0.06671	0.06599	0.05855

주 : 1. eqs는 균등규모지수(equivalence scale elasticity)를 나타냄.
2. 직접세 중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 조사자료를 사용한 것임.

부록 Ⅷ : 기타 자료

<부표 Ⅷ-1> 인구증가율의 국제비교

(단위 : %)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캐 나 다	1.1	1.1	1.1	0.9
미 국	1.0	0.9	1.0	0.8
호 주	1.4	1.6	1.2	1.1
뉴질랜드	0.9	0.7	1.6	1.1
일 본	0.7	0.4	0.2	0.2
벨 기 에	-	-	-	0.3
덴 마 크	-	-	-	0.2
핀 란 드	-	-	-	0.3
프 랑 스	0.3	0.5	0.5	0.3
독 일	-0.2	0.7	0.5	0.3
이탈리아	0.3	0.1	0	0.0
네덜란드	0.5	0.6	0.6	0.5
노르웨이	-	-	-	0.4
스 웨 덴	0.1	0.5	0.5	0.3
영 국	-0.1	0.3	0.2	0.1
한 국	1.4	1.0	1.0	0.9

주 : 인구증가율은 5년 기준 연평균을 의미함.
97/96, 98/97은 전년대비 증가율이나 2개 연도 외에는 자료 없음.

자료 : OECD, *OECD in Figures*, 200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보건복지부, 『각국의 인구통계』

<부표 Ⅷ-2>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비교

(단위 : %)

	연도	참가율	연도	참가율
캐 나 다	1995	64.8	1998	65.1
미 국	1995	66.6	1998	67.1
호 주	1995	63.7	1998	63.3
뉴질랜드	1995	64.8	1998	63.6
일 본	1995	63.4	1998	63.3
벨 기 에	1992	42.2	1998	50.6
덴 마 크	1996	77.1	1998	78.2
핀 란 드	1995	61.0	1998	60.3
프 랑 스	1995	55.0	1998	55.0
독 일	1995	58.5	1998	57.3
이탈리아	1995	47.4	1997	47.5
네덜란드	1995	70.1	1998	72.9
노르웨이	1995	69.6	1997	72.4
스 웨 덴	1995	78.2	1998	76.5
영 국	1993	62.4	1998	62.3
한 국	1995	62.0	1999	60.7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1996~2000』.

ILO, *Year Book of Labor Statistics*, 책 없음.

<부표 Ⅷ-3> 성인(25~64세) 교육수준의 국제비교

(단위 : %)

	1995		1996		1998		1999	
	중등교육	고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캐 나 다	75.2	46.9	76.4	17.3	79.7	18.6	79.5	39.2
미 국	85.8	33.3	85.7	25.8	86.5	26.6	86.9	35.8
호 주	52.8	24.3	57.0	14.8	56.0	16.6	57.4	26.7
뉴질랜드	59.1	25.3	60.2	11.4	72.7	12.7	73.6	27.0
일 본	-	-	-	-	79.9	17.7	80.9	31.6
벨 기 에	53.5	24.6	53.5	10.6	56.7	11.8	57.4	25.9
덴 마 크	62	20.4	66.1	15.2	78.4	5.4	79.6	26.5
핀 란 드	65.4	20.5	66.8	11.9	68.3	12.7	71.5	31.3
프 랑 스	68.4	18.6	60.2	9.7	60.7	10.5	61.9	21.5
독 일	83.7	22.6	81.5	13.1	83.8	14.0	81.2	22.9
이탈리아	34.9	-	38.2	8.1	41.0	8.7	42.2	9.3
네덜란드	61.2	-	62.5	22.5	64.3	24.2	-	22.6
노르웨이	81.2	28.6	81.6	15.6	83.0	23.7	84.6	27.4
스 웨 덴	74.7	28.3	74.2	13.4	76.1	12.6	76.6	28.7
영 국	75.9	21.5	76.3	12.8	86.5	26.6	61.7	24.8
한 국	59.8	-	61.1	19.0	65.4	17.0	66.3	22.7

주 : 1. Upper Secondary attainment or higher 임.
2. 1996년에는 대학교육 이상 이수자(University-level)를 의미하며, 다른 연도에는 고등전문교육 이수자(tertiary attainment)를 의미함.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1997, 1998, 2001. (책 앞쪽 Key Comparison 부문의 "Educational attainment if the adult population and current gradation rates" 해당.)
OECD, *OECD in Figures*, 2001.

<부표 Ⅷ-4>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단위 :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전국	4.5	4.1	3.7	3.3	3.3
동부	4.4	4.0	3.7	3.4	3.2
읍·면부	4.7	4.2	3.7	3.1	2.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 연도.

<부표 Ⅷ-5>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

(단위 : 천가구, %)

		가구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1980	전국	7,969 (100.0)	383 (4.8)	840 (10.5)	1,153 (14.5)	1,620 (20.3)	1,597 (20.0)	1,168 (14.7)	1,210 (15.2)
	시부	4,670 (100.0)	220 (4.7)	500 (10.7)	714 (15.3)	1,043 (22.3)	973 (20.8)	642 (13.8)	577 (12.4)
	읍·면	3,299 (100.0)	163 (4.9)	340 (10.3)	439 (13.3)	577 (17.5)	624 (18.9)	525 (15.9)	632 (19.2)
1985	전국	9,571 (100.0)	661 (6.9)	1,176 (12.3)	1,580 (16.5)	2,422 (25.3)	1,863 (19.5)	1,183 (12.4)	688 (7.2)
	시부	6,331 (100.0)	428 (6.8)	733 (11.6)	1,064 (16.8)	1,735 (27.4)	1,269 (20.0)	734 (11.6)	367 (5.8)
	읍·면	3,241 (100.0)	233 (7.2)	442 (13.7)	515 (15.9)	686 (21.2)	594 (18.3)	448 (13.8)	321 (9.9)
1990	전국	11,355 (100.0)	1,021 (9.0)	1,566 (13.8)	2,163 (19.1)	3,351 (29.5)	2,140 (18.8)	671 (5.9)	442 (3.9)
	동부	8,462 (100.0)	724 (8.6)	1,036 (12.2)	1,653 (19.5)	2,703 (31.9)	1,618 (19.1)	460 (5.4)	268 (3.2)
	읍·면	2,892 (100.0)	298 (10.3)	529 (18.3)	510 (17.6)	648 (22.4)	522 (18.1)	211 (7.3)	174 (6.0)
1995	전국	12,958 (100.0)	1,642 (12.7)	2,185 (16.9)	2,636 (20.3)	4,110 (31.7)	1,667 (12.9)	497 (3.8)	221 (1.7)
	동부	10,032 (100.0)	1,186 (11.8)	1,455 (14.5)	2,089 (20.8)	3,485 (34.7)	1,329 (13.2)	367 (3.7)	0 (0.0)
	읍·면	2,926 (100.0)	457 (15.6)	(729 (24.9)	547 (18.7)	652 (22.3)	338 (11.6)	129 (4.4)	0 (0.0)
2000	전국	14,312 (100.0)	2,224 (15.5)	2,731 (19.1)	2,987 (20.9)	4,447 (31.1)	1,443 (10.1)	345 (2.4)	134 (0.9)
	동부	11,230 (100.0)	1,643 (14.6)	1,890 (16.8)	2,420 (21.5)	3,778 (33.6)	1,159 (10.3)	252 (2.2)	89 (0.8)
	읍·면	3,082 (100.0)	582 (18.9)	841 (27.3)	568 (18.4)	669 (21.7)	284 (9.2)	93 (3.0)	46 (1.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각 연도.

<부표 Ⅷ-6> 65세 이상 고령자의 분포(1995년 현재)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계	65~69	70~79	80~	계	65~69	70~79	80~	계	65~69	70~79	80~
노인가구	30.6	30.5	33.8	20.5	26.9	16	36	31.9	32.8	40.7	32.5	16.2
1인 가구	13.7	13.3	14.9	10.7	5.0	4.3	5.4	5.8	19	19.7	20.7	12.5
부부 가구	16.4	16.7	18.5	8.6	21.7	11.4	30.3	25.7	13.2	20.5	11.2	2.3
기타	0.5	0.5	0.4	1.2	0.3	0.3	0.2	0.5	0.7	0.6	0.5	1.4
비노인가구	69.4	69.5	66.2	79.5	73.1	84	64	68.1	67.2	59.3	67.5	83.8

주 : 부부가구는 부부 중 두사람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기타는 부부관계 이외의 65세 이상 노인들만 사는 가구
비노인가구는 노인가구 형태가 아닌 기타 다른 형태의 일반가구에 노인이 사는 경우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1995.

<국문요약>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成 明 宰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는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1982년 0.287에서 1995년 0.237로 하락하였다.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저소득층에까지 확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기변동에 따라 소득격차가 등락을 거듭하였다. 추세적으로는 연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의 확산, 산업구조의 급격한 개편, 실업률 상승, 지식기반 경제구조의 급격한 전환, 사회의식구조 및 인구학적 특성 변화 등에 따라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로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2000년에 0.277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이래 주요 선진국에서의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분배격차 확대는 경기악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과 관계가 깊다. 또한 이혼율 상승과 인구의 노령화와 같은 사회현상의 변화도 최근의 분배격차 확대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 정도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실업률이 6.8%로 급등하였으며 경제회복 이후에도 3~4% 수준으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1995~2000년) 실업가구를 포함한 무직가구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분배격차가 확대되었는데 그 효과는 전체의 약 14.5%로 추정된다. 이혼율과 노인인구 비중의 상승도 각각 5~6% 정도씩 분배격차를 확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지난 5년 동안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된 비율은 중복요인 제거시 전체의 18.34~22.40%에 이를 정도로 실업, 이혼, 인구의 노령화가 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

향후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경제 패러다임이 무한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소득분배 격차는 당분간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혼율과 노인인구비는 서구선진사회화가 더욱 진전됨에 따라 당분간 상승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분배격차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격차는 경제가 안정되어 분배격차 축소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혼과 노인인구 증가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따라 당분간은 확대추세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abstract>

Changes in Income Distribution of Urban Households and Its Determinants in Korea

Myung Jae Sung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was estimated to diminish throughout the period of 1980s and early and mid 1990s. As a result, the Gini coefficient recorded 0.287 in 1982 and almost continuously decreased to 0.237 until 1995. However, it began to increase from the mid 1990s due to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global economy, not to mention that of Korea. Additionally, rapid and asymmetric progress in IT related industries and financial sectors, and increases in the unemployment rate especially from the severe Korean economic crisis in 1998, spurred its increasing tendency. Consequently, the Gini coefficient recorded 0.277 in 2000.

The recent change in income distribution is closely related to those in unemployment, divorce, and the size of the elderly. The change in unemployment rate, from about 2% in early and mid 1990s through 6.8% in 1998 to 4.1% in 2001, solely accounted for 14.5% of the total change in Gini coefficient in the last five-year-period (1995~2000). Besides, increases in divorce rate and the elderly share accounted for 5~6% of total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respectively. Excluding the overlapping effects, about 18~22% of total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was defined by the above three factors. Considering the Korean economy, their effects on income distribution were quite sizable.

In the future, the income inequality is expected to be enlarged in Korea for the time being, as the economy develops into one of advanced economies like the western developed countries. The rates of divorce and the elderly continue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se will certainly increase the relative income inequality of Korea until they become saturated and stabilized.

<著者略歷>

成 明 宰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卒業
美國 Wisconsin-madison大 經濟學 碩·博士
現, 韓國租稅硏究院 硏究委員

硏究報告書 01-01

소득분배 변화 추이와 결정요인 분석: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2001年 11月 26日 印刷
2001年 11月 28日 發行

著 者 成 明 宰
發行人 宋 大 熙
發行處 韓國租稅硏究院
[1][3][8]-[7][7][4] 서울特別市 松坡區 可樂洞 79-6番地
電話 : 2186-2114(代), 팩시밀리 : 2186-2179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및 印 刷 一 志 社

ⓒ韓國租稅硏究院 2001 ISBN 89-8191-191-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8,000원